

Jeonbuk State Institute

기초연구

2026-01

#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Settlement Support Strategies for Jeonbuk State's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a Lifecycle Analysis of Adaptation Experiences

전희진 전아람



##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 연구진 소개

### 전희진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전아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기초연구

2026-01

#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Settlement Support Strategies for Jeonbuk State's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a Lifecycle Analysis of Adaptation Experiences

전희진 전아람



##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

연구책임 전희진 | 책임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 5장

공동연구 전아람 | 연구원 | 연구지원, 제2장 일부, 제3장

---

자문위원 박민정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흔성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이대용 | 기전대학교 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이효숙 | 비전대학교 국제교류원장

염경형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본부장

김문강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정책과 과장

---

연구관리 코드 : 25GI1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연구목적 및 방법

### ■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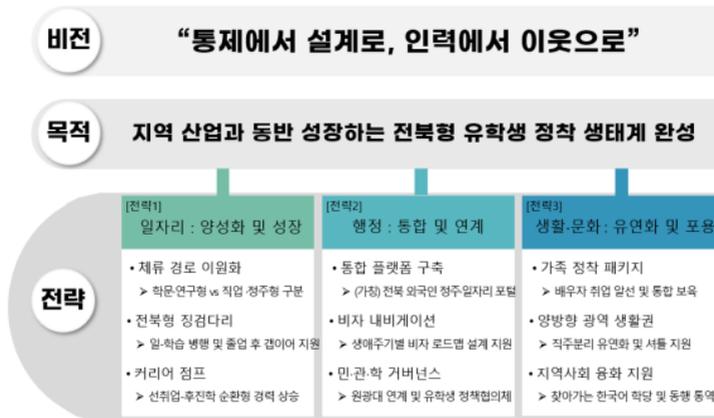
- (배경: 양적 확대와 질적 한계)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유학생 유치에 확대되었으나, 졸업 후 '수도권 이탈·본국 귀환·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악순환 지속
- (문제점) 기존 정책은 대학의 '학사 관리'와 법무부의 '체류 통제'에 편중되어, 유학생이 겪는 생활 적응(노동·주거)과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함
- (목적) 유학생을 단순 인력이 아닌 '예비 지역민'으로 재정의하고, 통계 밖의 적응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규제 중심을 넘어선 '전북형 정착 지원 방안' 도출

###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대학가, 산업단지,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 포함)
- (내용적 범위) 입국 및 어학연수(D-4, D-2) 단계부터 구직(D-10), 취업 및 정착(E-7, F-2, F-5)에 이르는 이주 생애주기(Migration Life-cycle) 전반의 적응 실태와 정책 수요
- (정책 분석) 중앙정부(법무부, 교육부)의 이민 정책 변화(R-Visa, F-2-R 등)와 전북자치도의 대응 현황 검토
- (통계 분석) KEDI(교육통계) 및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활용하여 전북 유학생의 국적별·유형별 체류 현황, 취업률, 불법 체류율 추이를 정량적으로 분석
- 심층면접 및 FGI: 전북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학업, 생활, 정서에 관해 인터뷰 실시

## 2. 결론 및 정책제언

### ■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 저자작성

[그림 1] 전복형 유학생 정책의 비전 및 3대 전략

### ■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 (일자리) 입국 목적별 ‘체류 경로 이원화’ 및 졸업 후 정착을 돕는 ‘전복형 징검다리·커리어 점프’ 등 성장 사다리 구축
- (행 정) 비자·생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 포털’ 구축 및 생애주기별 ‘비자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 (생활·문화) 배우자 취업·보육을 지원하는 ‘가족 정착 패키지’ 도입 및 직주분리(도시 ↔산단)를 허용하는 ‘양방향 광역 생활권’ 보장

### ■ 기대 효과

- (경 제) 음성적 노동의 양성화를 통한 검증된 산업 인력 안정적 공급
- (사 회) 1인 체류에서 가족 단위 정착으로 전환하여 생활인구 확대 및 소멸 대응
- (행 정)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체계 구축으로 선도적 이민 행정 모델 제시

# 차 례

CONTENTS

---

요 약 ..... i

---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의 배경 ..... 3  
    나. 연구목적 ..... 4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 5  
    가. 연구 범위 ..... 5  
    나. 주요 연구 내용 ..... 6  
3. 연구 방법 ..... 8  
    가. 연구 방법 ..... 8  
    나. 연구 기대효과 ..... 9

---

## 제2장 외국인 유학생 정책환경 및 국내외 동향·사례분석

1. 외국인 유학생 연구동향과 핵심 쟁점 ..... 13  
2. 국내 유학생 정책 동향 ..... 23  
3. 지자체 및 대학 협력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32  
4.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와 지역 적용 조건 ..... 44

---

### 제3장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통계 분석

1. 전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	51
2.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59

---

### 제4장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경험 분석

1. 조사 설계, 대상 개요 및 분석틀 .....	91
2. 유학생의 학업·생활·정서적 적응 경험 .....	99
가. 유입 단계: 왜곡된 동기와 경제적 장벽 .....	99
나. 체류 및 학업 단계: 가성비와 안락함과 제도의 사각지대 .....	106
다. 취업 및 체류 전환 단계: '비자 절벽'과 '미스매치'의 협곡 .....	114
라. 정착 단계: '시골 감옥'과 '도시 지향성' .....	121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124

---

### 제5장 전북형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방안

1.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	129
2. [일자리] 체류 경로 다변화 및 일·학습 병행 모델 도입 .....	132
3.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 거버넌스 고도화 .....	136
4. [생활·문화] '청년 라이프스타일' 보장 및 지역 사회 통합 .....	139
5. 결론 및 기대효과 .....	142

참고문헌 .....	144
영문요약 (Summary) .....	148

## 표 차례

### LIST OF TABLES

---

〈표 2-1〉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 목록	19
〈표 2-2〉 제 4차 외국인정책의 정책 방향 전환	23
〈표 2-3〉 시도별 RISE 사업 대표 과제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과제명	28
〈표 2-4〉 국가별 해외의 유학생 정책	47
〈표 2-5〉 특성별 해외 유학생 정책	48
〈표 3-1〉 시도별 유학생 수(2000-2025년)	52
〈표 3-2〉 시도별 고등교육 재적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2000-2025년)	54
〈표 3-3〉 시도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55
〈표 3-4〉 시도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2025년)	56
〈표 3-5〉 시도별 학위과정별 성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57
〈표 3-6〉 대학별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4년)	58
〈표 3-7〉 시군별 연령대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60
〈표 3-8〉 시도별 출신대륙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61
〈표 3-9〉 시군별 출신대륙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63
〈표 3-10〉 시군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66
〈표 3-11〉 시도별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67
〈표 3-12〉 시군별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68
〈표 3-13〉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입학구분(2025년)	71
〈표 3-14〉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 입학구분(2025년)	72
〈표 3-15〉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업방식(2025년)	73
〈표 3-16〉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 수업방식(2025년)	74
〈표 3-17〉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유학형태(2025년)	75
〈표 3-18〉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과정 이수여부(2025년)	77
〈표 3-19〉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과정 이수여부(2025년)	78
〈표 3-20〉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여부(2025년)	80
〈표 3-21〉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여부(2025년)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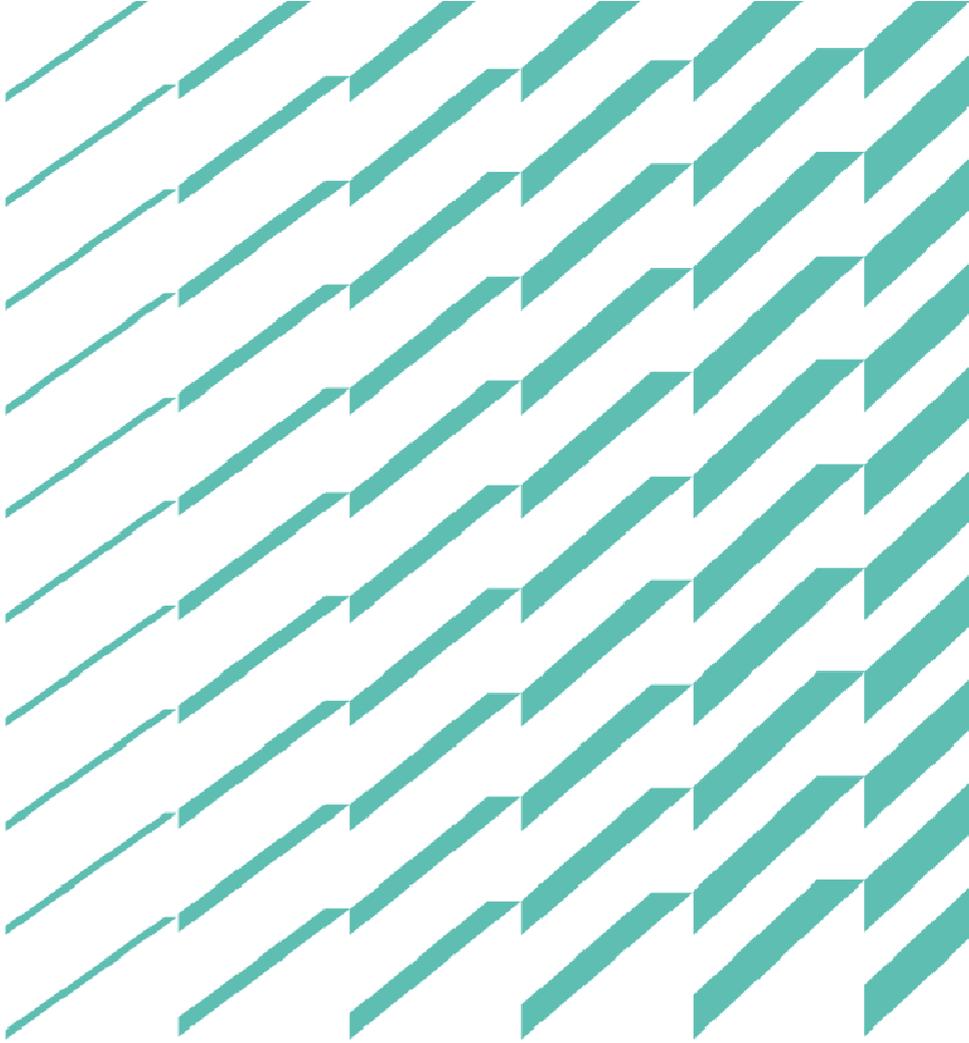
〈표 3-22〉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TOPIK 등급(2025년) .....	82
〈표 3-23〉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 TOPIK 등급(2025년) .....	84
〈표 3-24〉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2년) .....	87
〈표 3-25〉 전국 및 전북 외국인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2년) .....	88
〈표 4-1〉 응답자 구성의 요소 .....	92
〈표 4-2〉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관련 면접조사 내용 및 구체적인 질문 .....	92
〈표 4-3〉 심층면접 대상자 .....	95
〈표 4-4〉 외국인 유학생 적응-정착 경험 분석틀 .....	97
〈표 4-5〉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유형별 특성 비교 .....	103
〈표 5-1〉 전북형 유학생 정책 전략 구성도 .....	131
〈표 5-2〉 전북형 유학생 체류 경로 이원화 전략(안) .....	133
〈표 5-3〉 대학-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구축(안) .....	138
〈표 5-4〉 전북형 양방향 광역 생활권 모델 .....	141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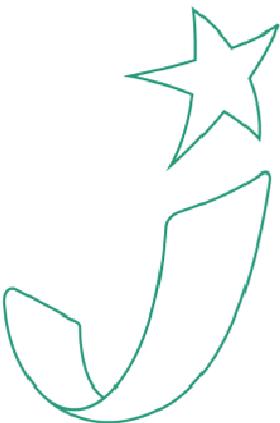
〈그림 2-1〉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	24
〈그림 2-2〉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	25
〈그림 2-3〉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비전 및 핵심과제 · 27	
〈그림 2-4〉 일학습병행 훈련 프로세스 .....	30
〈그림 2-5〉 서울특별시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33
〈그림 2-6〉 경기도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34
〈그림 2-7〉 대전광역시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36
〈그림 2-8〉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38
〈그림 2-9〉 강원특별자치도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41
〈그림 2-10〉 경상북도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43
〈그림 3-1〉 전체 대학/대학원 재적생 및 외국인유학생 수 변화(1999-2025년) · 51	
〈그림 3-2〉 외국인 유학생의 시도별 분포(2025년) .....	52
〈그림 3-3〉 성별 시도별 유학생 수(2025년) .....	53
〈그림 3-4〉 시군별 성별 유학생 수(2025년) .....	59
〈그림 3-5〉 전국 및 전북 성별 외국인유학생 출신대륙(2025년) .....	62
〈그림 3-6〉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상위국적(2025년) .....	64
〈그림 3-7〉 전국 및 전북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추이(2023년 vs 2025년) · 65	
〈그림 3-8〉 전국 및 전북 교육부 5대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추이(2023년 vs 2025년) · 69	
〈그림 3-9〉 성별 교육부 5대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비중 .....	70
〈그림 3-10〉 성별 유학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비중 .....	76
〈그림 3-11〉 전국 및 전북 여학연수과정 이수여부 추이(2023년 vs 2025년) 79	
〈그림 3-12〉 전국 및 전북 기숙사 수용여부 추이(2023년 vs 2025년) · 81	
〈그림 3-13〉 성별 TOPIK등급별 외국인 유학생 비중(2025년) .....	85
〈그림 3-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내/외국인 비중 추이(2022년 vs 2024년) 86	
〈그림 5-1〉 전북형 유학생 정책의 비전 및 3대 전략 .....	130



# 제 1 장

##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 제1장 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대학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충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인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학생은 대학의 교육·연구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진작, 노동력 공급, 생활인구 확대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잠재력이 크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을 단기 방문자가 아닌 지역 정착형 인재로 재정의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간 유학생 유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나, 이들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뿌리내리게 할 정착 연계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졸업 후 본국 귀환이나 수도권 이탈 비중이 여전히 높고, 비자 전환·취업 연계·생활 안정·지역사회 참여가 단절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는 제도·행정 지원의 파편화, 정보 비대칭, 학사 일정과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 등 구조적 병목에서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정착 의향은 있으나 실제 이행은 좌절되는' 실행 격차를 낳고 있다. 따라서 전북의 유학생 정책은 단순 유치에서 실질적 정착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비자·일자리·생활·문화를 하나의 전달체계로 엮는 통합적 정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술적으로도 유학생을 단일한 '학생'이 아닌, 학업·노동·생활인의 다중 정체성을 수행하는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규정하고, 입국부터 정착에 이르는 전주기 적응 과정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대두되고 있다. 적응의 궤적은 개인 역량(언어·효능감)과 캠퍼스 환경, 그리고 비자·노동시장 등 거시적 구조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다수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 있거나, 정량적 실태 파악에 치중하여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체류 자격 전환의 결정적 분기점과 미시적 장애 요인을 심층적으로 포착하는

---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북이라는 구체적 지역 맥락 안에서 유학생과 졸업자가 겪는 적응과 이탈의 실제 경험을 심층면접을 통해 촘촘히 복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업에서 취업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정보 경로, 언어 장벽, 행정 절차 등이 어떠한 기제로 작동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전북형 유학생 정착 지원 정책설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나.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최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전북 선택의 동기, 정보 경로, 그리고 전북에서의 학업·생활·노동·정서 경험을 전주기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기대와 현실의 간극 및 적응의 주요 패턴을 탐색한다.

둘째, 졸업 후 전북 정착 의향과 그에 필요한 필수 조건(전공 일자리, 임금 수준, 비자 경로의 명료성, 주거 안정, 언어 지원, 가족 포용적 환경 등)을 도출하고, 실질적 지역 정착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유형화한다.

셋째, 체류 자격 변경 및 취업 등 전환 이벤트(D-2→D-10→E-7/F-2-R)의 과정에서 발생·지연·보류의 분기점과 미시적 사유를 사례 기반으로 분석한다.

넷째, 개인-환경-구조의 상호작용이 지역 정착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통제에서 설계로, 인력에서 이웃으로' 나아가는 전북형 유학생 정착 지원 모델의 기본 원리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

##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 가.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학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와 지역 정착 가능성을 이주 생애주기 관점에서 파악하는 기초연구로서 수행되었다.

공간적 범위는 전북 소재 대학(학부·대학원·어학과정 포함)과 이들과 밀접히 연계된 지역 생활공간으로 한정하였다. 대상 집단은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D-2/D-4)과 최근 졸업자(재학 당시 유학생 신분)로 구성하였다. 이는 유학생 연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학생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하되, 졸업 직후의 체류·취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탈과 지역 정착 선택의 기제를 확인하기 위해, 구직(D-10) 및 취업·거주(E-7, F-2 등) 단계에 진입한 졸업자를 보완 표본으로 포함하여 연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개인의 미시적 서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도-조직-시장 생태계가 유학생의 선택과 이탈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추적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선 유입 단계에서는 한국 및 전북 선택의 동기와 정보 경로의 작동 방식을 살피고, 장학금 구조나 아르바이트 시장 등 경제적 신호가 초기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 체류 및 적응 단계에서는 대학과 지역의 지원 전달체계가 정보·행정·주거·언어·근로를 어떻게 연결하거나 분절시키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가 학업 및 생활 적응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졸업 및 체류 전환 단계에서는 비자·고용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와 산·학·관 연계 구조가 실제 구직 시도나 보류, 혹은 이탈을 어떻게 가르는지 추적하되, 실질적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한 미발생 사유까지 포함하여 맥락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적응 경로의 재구성을 위해 개인 수준의 경험(역량, 의사소통), 환경 지각(정보 접근성, 차별 풍토), 구조 요인(비자 규정, 노동시장 관행)을 세 층위로 병렬하여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입국, 첫 아르바이트, 학업·노동 시간의 불일치, 비자 변경 등 사건 단위의 변화를 정책·조직의 맥락과 연결하여 적응 경로를 해석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개별 참여자의 '입국-학업-근로-졸업-전환-초기 정착'에 이르는 연속된 경험을 기록하되, 동일 기간의 제도 및 사업 변화를 평행선으로 매핑하여 개인의 선택이 당시의 정책·시장 조건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시계열적 맥락에서 해석하였다.

## 나. 주요 연구 내용

###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정책 환경 분석

전북특별자치도 내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분포·특성을 최신 통계와 최근 추세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국적, 학위과정(학부·대학원·어학), 전공군, 대학 단위의 지표를 확인하고, 정의와 범위가 통일된 경우에 한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도표로 시각화하여 이후 표집과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정책 환경 분석은 유치-교육-졸업-체류-취업-정착의 전주기 틀에 맞춰 중앙정부(법무부·교육부·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대학의 역할 및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비자, 사회통합, 장학, 취업 연계, 지역 정착 지원 등 각 제도와 사업을 공통 양식으로 정리하여 연계성 부족과 사각지대를 점검하였다. 특히 타 지역 대학의 지원 체계와 해외 사례(호주, 독일 등)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기업 연계 방식 등 전북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심층면접 및 적응 경험 분석

본 연구는 정량적 수치로 포착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적응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 및 관계자를 포함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조사는 유입 동기, 전북에서의 생활 경험, 지역 정착 의향 및 필수 조건을 핵심 축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한국·전북 선택 이유와 정보 경로, ② 전북에서의 일상·학업·관계 경험과 기대-현실 간극, ③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일자리, 비자 명료성, 생활 안정, 언어, 가족 포용성 등)을 참여자의 생생한 서사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체류 자격 변경이나 취업 등 전환 이벤트 경험 여부를 추적하고, 미경험자에 대해서는 '미시적 장벽 요인'(정보 부족, 학업·노동 시간의 불일치, 현장 언어 요건 등)을 유형화하여 이탈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대학, 지자체, 기업, 중개조직) 면담을 병행하여 전달체계의 실제 작동 실태를 확인하고, 개인의 미시적 서사를 제도·조직·시장의 거시적 맥락과 연결하여 입체적으로 해석하였다.

### 3) 전북형 유학생 정착 지원 정책모델 제안

본 절에서는 통계 분석과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체류 경로와 전북의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북형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모델'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병목 지점(정보 비대칭, 음성적 취업, 불안정한 정착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통제에서 설계로, 인력에서 이웃으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다음의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자리] 부문에서는 '체류 경로의 다변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음성적으로 형성된 유학생 노동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유학생의 입국 목적에 따라 학업형과 취업형으로 나누는 '체류 경로 이원화'를 추진하고, '전북형 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도입하여 합법적인 지역 성장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행정] 부문에서는 분절된 '지원 체계의 통합화'를 제안하였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비자·취업·생활 정보를 일원화한 '전북형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상시 소통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가동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생활·문화] 부문에서는 '지역사회의 포용화'를 통해 정착 가능성을 높였다. 기존의 1인 단기 체류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가족 동반 정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화하고, 유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광역 생활권 교통망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지역사회 매력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들이 실현되기 위한 주체별(도·시군·대학·기업)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협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

### 3. 연구 방법

#### 가. 연구 방법

#####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문서 기반의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차·교육·졸업·체류·취업·정착에 이르는 전주기 틀에 맞춰 중앙정부(법무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의 관련 제도·사업을 최신 자료로 정리하였으며, 목적·대상·요건·지원 내용·집행 주체·평가 방식을 공통 양식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동시에 호주(주정부 지명·졸업생 비자), 독일(구직비자), 대만(취업 골드카드) 등 해외 사례를 단일 프레임으로 비교하여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기업 연계, 통합적 정착 지원 패키지 구성 및 성과 추적 방식을 도출하고 전북 적용 조건을 검토하였다.

통계 분석은 공개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전북 내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분포와 국적·학위과정·전공군 지표를 최신 추세로 정리하고, 정의와 범위가 통일된 경우에 한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 지속률, 전공별 취업률, 졸업 후 체류/이탈률 등은 비교 가능한 범위에서 핵심 수치를 추출하여 질적 연구 결과의 맥락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수도권 전출입 흐름과 취업 연계 실태는 가용한 공개 지표와 선행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거시적인 현황을 진단하였다.

##### 2) 심층면접조사

질적 조사는 재학생과 최근 졸업자,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단, 전북 지역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인적 네트워크가 좁은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신원이 특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신상 정보의 기술은 지양하였다.

조사는 유입 동기, 전북에서의 생활 경험, 지역 정착 의향 및 필수 조건을 핵심 축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한국·전북 선택 이유와 정보 경로(대학·지자체·지인·유학원 등) 및 대안 지역과의 비교, ② 전북에서의 일상·학업·관계 경험과 기대·현실 간극, ③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조건(일자리, 임금, 비자 명료성, 주거, 언어, 가족 포용성 등)을 개인의 서사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체류 자격 변경이나 취업 등 주요 ‘전환 시점’에서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해당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정보 부족, 학업·노동 시간의 불일치, 현장 언어 요건 등으로 유형화하여 이탈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수집된 면접 자료는 핵심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으며, 공통된 질문 항목을 기준으로 사례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해관계자(대학 국제교류·취업 부서, 지자체, 기업, 중개조직) 면담을 통해, 전달체계의 실제 작동 실태(정보 접근성, 행정 절차, 프로그램 효용성)를 확인하고, 개인의 서사를 제도·조직·시장의 맥락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 3) 전문가 자문 및 타당성 검토

연구의 분석 과정과 정책 대안 도출 단계에서 정책 전문가 및 지역 현장 담당자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은 ① 정착 지원형 정책으로의 전환 방향성(통제→설계), ② 광역형·지역특화형 비자 등 출입국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③ 산학협력 및 가족 동반 정착 패키지 등 실행 가능한 운영 요소의 타당성 점검에 초점을 두었다. 자문 결과는 최종 보고서의 운영 원칙, 우선 개입 영역, 역할 분담 기준선 수립에 반영하여 정책 제언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나.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기존의 ‘관리’ 중심에서 ‘실질적 정착 지원’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와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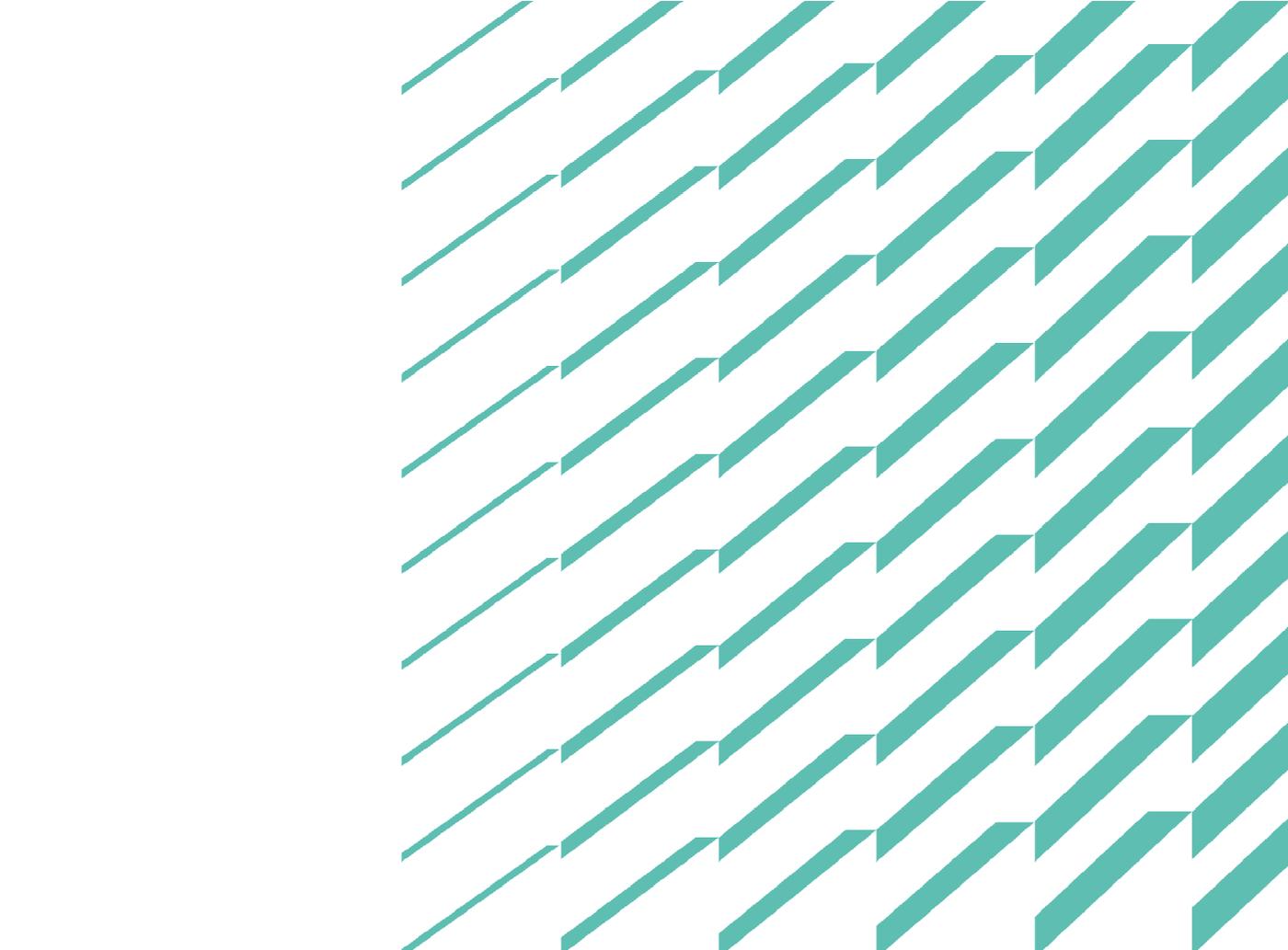
첫째, 정착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보완하였다. 기존 정량 통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유학생들의 구체적인 삶과 애로사항을 심층면접을 통해 기록하였다. 특히 정보 부족, 학업·노동 시간의 불일치, 비자 문제 등 현장의 실질적인 장벽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지자체가 인력 유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착 지원에 주목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인구

---

감소와 지역 산업계의 인력난이라는 전복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자리 경로 다변화’, ‘행정 지원 통합화’, ‘지역사회 포용화’라는 3대 핵심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이는 거창한 담론보다는 전공-직무 매칭, 통합 플랫폼 구축, 가족 동반 정착 등 실무적 요소에 집중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부서가 구체적인 세부 사업을 기획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는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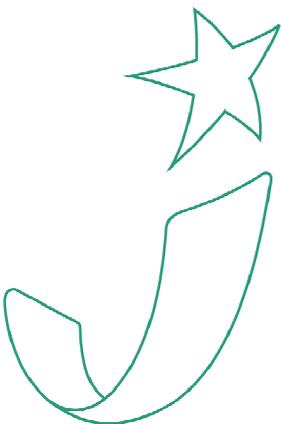
셋째,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RISE 체계 도입 및 지역 특화형 비자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유학생의 지역 정착관점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지 협력의 기준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추후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효성 있는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이민 행정 체계를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 2 장

# 외국인 유학생 정책환경 및 국내외 동향·사례분석

1. 외국인 유학생 연구동향과 핵심 쟁점
2. 국내 유학생 정책 동향
3. 지자체 및 대학 협력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4.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와 지역 적용 조건





## 제 2 장 외국인 유학생 정책환경 및 국내외 동향·사례분석

### 1. 외국인 유학생 연구동향과 핵심 쟁점

#### 가. 선행연구의 핵심 논점과 시사점

##### 1) 관점 전환: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최근 유학생 연구는 이들을 단순한 '교육 수혜자(학생)'가 아닌, 학생·노동자·생활인 등 복합적 정체성을 수행하는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재정의하는 관점이 확립되고 있다(김도혜 2019). 이들은 아시아 권역 내(Inter-Asian) 이동의 회로 속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종교,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문화·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며, 졸업 후 이 자본을 본국·한국·제3국 등 다양한 공간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적 주체로 분석된다(김도혜 2019). 이러한 시각은 유학생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단순 학업 지원을 넘어 포괄적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관점은 연구와 정책의 초점을 기존의 '유치'에서 '경로설계와 정착'으로 이동시킬 것을 강조한다. 분석 단위 역시 특정 시점의 단편적 적응이 아니라, '입국→학업→생활→졸업 후 체류→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이주 생애주기상의 주요 전환 이벤트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김도혜 2019).

또한, 이 관점은 졸업 후 취업이 곧 완전한 정착을 의미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공계 전문 인력조차 임금 격차, 입지적 소외감(주변성), 직장 내 소통 장벽으로 인해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이동 중'인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최희정 2022). 즉, 전공·언어 자본·출신국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체류 혹은 재이주를 결정하므로, 정체성의 다층성을 전제로 한 경로 분석이 필수적이다(김도혜·최희정 2021).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정책 프레임의 변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분절된 외국인 정책을 일원화된 이민 정책 프레임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며(김연홍·이성순 2020), 지역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전주기를 지역 산업 수급과 연동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서연미 외 2025). 특히 정부초청장학생(GKS)조차 취업

---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유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경로설계와 정착 지원 중심의 지원 체계로의 전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김형기 2024).

## 2) 구조적 시선의 확대: ‘개인 책임’에서 ‘제도·시장·거버넌스’로

생활 및 노동 영역에서는 유학생의 미허가·저보장 노동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던 시선에서 벗어나, 정책(비자·근로규정), 대학 및 유학원, 지역 노동시장이 맞물려 ‘불법성’이 생산되고 유지된다는 구조적 프레임이 제시되었다(Tumendemberrel·김도혜 2020). 이 접근은 초기 생계 압박, 정보 비대칭, 사업장의 법적 회피 유인이 결합할 때, 유학생이 저임금·과로·임금체불 위험에 구조적으로 노출되며 그 순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착 단계에서도 논의의 초점은 개인의 의지보다는 제도적 병목으로 확장된다. D-10(구직) 비자 연장 제한, E-7(전문취업) 발급을 위한 높은 소득 요건 및 전공 적합성 문제, 사회보장 배제, 가족 동반 불가 등 복합적인 장벽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 진로 경로(Pathway) 및 서류의 표준화, 직무 한국어 교육, 전공·직무 매칭과 같은 실무적 지원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이윤주·김명광 2023).

한편, 일부 대학의 무분별한 학사 유연화 전략(전용 트랙, 예외적 학점 인정 등)이 내·외국인 간 형평성 논란을 낳고 학위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이러한 지적은 유학생 정책이 개별 대학의 자구책을 넘어, 지역 및 국가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김도혜 2025).

## 3) 정책·거버넌스의 전환: ‘단순 유치’에서 ‘지역 정착 모델’로

국가 차원에서는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관련 법령의 정비,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김연홍·이성순 2020). 이는 유학생을 단순한 교육 서비스 수요자가 아닌, 국가 산업 인력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배치하려는 시도이다.

지역 차원, 특히 전북과 같은 지자체에서는 유학생을 잠재적 지역 정착 인구로 규정하고, 언어·주거·일자리·행정을 포괄하는 지역형 정착 지원 패키지 도입과 정책 효과성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도화가 제시되고 있다(서연미 외 2025).

현장의 미시적 증거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 전환의 시급성을 뒷받침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을 포함한 유학생 집단에서 높은 지역 정착 의향이 실제 취업이나 안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은, 수요는 충분하나 제도적 경로(행정·정보·시장)가 막혀 있는 실행 격차의 전형적인 사례이다(김형기 2024). 이는 기존의 '유치 중심'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며, 정책의 무게중심이 단순 관리에서 실질적인 '경로 설계'와 '정착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 4) 대학생활 적응: 개인역량과 캠퍼스 맥락의 결합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의 역량과 캠퍼스의 환경적 요인이 교차적으로 작동하며 결정된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내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한국어 실력보다는 자아탄력성,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유학생의 학업·사회·정서 적응 전반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경·정지혜 2016). 이는 기존 지원 정책이 '언어·지식' 주입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관계 맺기나 도움 요청, 감정 조절과 같은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개인 역량과 더불어 대학의 물리적·심리적 환경 또한 적응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대학의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유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지지를 높이는 반면, 캠퍼스 내 차별 풍토 인식은 문화 충격과 맞물려 적응을 저해한다(백성희 2016). 질적 연구에서도 입학 초기의 정보 공백과 고립감을 능동적으로 돌파하여 대학의 장학·학사 제도를 활용하는 학생만이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최현실 2018).

아울러 미디어 이용은 정보 습득과 정서 안정을 연결하는 주요한 적응 기제로 작동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미디어는 생활·학업 정보 습득과 언어 학습의 경로로, 모국 미디어는 향수병을 달래고 심리적 위안을 얻는 정서적 완충재로 기능한다(오대영 2025). 즉, 모국 미디어를 통한 정서 안정과 한국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적응이라는 두 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유학생의 개인 역량이 환경적 제약을 넘어 긍정적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5) 생활·노동과 ‘불법성’의 구조: 개인 문제에서 구조 문제로

유학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학업과 노동의 병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막상 현장의 좁은 취업문과 복잡한 요건을 마주하며 무너진다. 제도적 허용 범위와 생계를 위한 현실적 필요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 때, 유학생들은 정보 비대칭 속에서 중개인이나 민족 네트워크를 통해 저임금·고위험의 음성적 일자리로 유입된다. 즉, 유학생의 비공식 노동은 개인의 준법 의식 부재가 아니라, 정책(규제)의 경직성, 대학의 관리 방임, 지역 노동시장의 저임금 수요가 맞물려 생산해낸 구조적 산물로 이해된다(Tumendemberrel·김도혜 2020).

캠퍼스 내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균열은 뚜렷하게 감지된다. 학업·노동 시간의 구조적 불일치, 현장 한국어 요구 수준과 학업 역량의 괴리, 합법 취업 정보의 단절 등은 학생들이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게 만드는 핵심 기제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불법체류율’과 같은 관리 지표 유지에 매몰되어, 합법적 경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기보다는 통제 위주의 행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도혜 2021).

문제는 이 과정에서 덧씌워진 ‘불법’이라는 낙인이 유학생을 더욱 취약한 위치로 내몬다는 점이다. 미허가 노동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권리 주장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임금 체불, 건강 악화, 학업 소홀, 그리고 체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 접근의 제약, 학업·노동 시간의 불일치, 중개 네트워크의 개입 등이 이러한 악순환을 촉발하는 결정적 분기점임을 전제로, 개인의 경험이 제도적 모순과 만나는 지점을 면밀히 추적하는 분석 틀을 채택하였다.

## 6) 졸업 후 경로와 정착: ‘취업=완전한 안착’ 공식의 재점검

이공계 유학생들이 전공 지식과 지도교수 네트워크라는 유학 자원을 활용해 국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곧장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 기업 규모의 영세성, 수도권 대비 입지적 소외감(주변성), 그리고 직장 내 한국어 소통의 장벽 등은 유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장기적인 정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최희정 2022). 심지어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자격을 획득한 이후에도, 배우자의 취업, 자녀 교육, 부모 돌봄 등 가족적 요인에 따라 언제든지 재이주를 선택할 수 있는 ‘유동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고된다(최희정 2022).

졸업 후의 진로가 한국 잔류, 본국 귀환, 혹은 제3국 재이주로 갈리는 분기점은 개인의 전공·학위, 언어 자본(한국어/영어), 그리고 출신국 네트워크 자본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김도혜·최희정 2021). 엘리트 그룹으로 분류되는 정부초청장학생(GKS) 집단에서조차 취업·비자·정착 정보의 부족과 대학 차원의 지원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실은, ‘유치 이후’ 단계의 행정적·정보적 공백이 여전함을 시사한다(김형기 2024).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취업이 곧 정착’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유학생의 삶은 취업 이후에도 여전히 ‘이동성’과 ‘정착’이 공존하는 복잡한 경로 위에 놓여 있으며, 정책 또한 이러한 다층적 욕구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다.

## 7) 법·제도·정책 프레임: 일원화와 지역화의 동시 전환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유학생의 체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선행연구들은 유학생의 헌법 및 출입국관리법상 지위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례 조항 도입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체류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손흥기 2023).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분절된 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통합 이민법 제정,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 체류·활용·통합을 단일 프레임에서 다루는 ‘일원화 구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직종별 인력 부족 현황에 근거하여 유학생, 전문 인력, 동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김연홍·이성순 2020).

이와 동시에 지역 단위의 연구는 유학생을 ‘잠재적 노동력이자 지역 정착 인구’로 재정의하며 구체적인 실행 모형을 제시한다. 최근의 지역 연구들은 언어·주거·일자리·행정 지원을 하나로 묶은 ‘지역형 정착 패키지’의 도입과,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환류 시스템의 제도화를 강조한다. 나아가 일부 연구는 ‘유치-학업-취업-지역 정착’로 이어지는 전주기 설계를 지역 표준으로 제안하며,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된 상주형 일자리 모델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서연미 외 2025).

## 8) 데이터 환경과 분석 단위: 표준화와 비교가능성의 확보

선행연구들은 유학생 연구의 고질적인 한계로 수도권 편중과 소표본·단기 조사의 편향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이선미·김영순 2021). 더불어 대학의 학사 정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공식 통계가 상호 연계되지 않아, 특정 유학생의 ‘재학-휴학-졸업-체류 전환-이동’ 경로를 표준화된 기준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결국 ‘유치’부터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정책 효과를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한다(서연미 외 2025).

이러한 데이터 환경의 제약과 현장의 괴리는 전북의 사례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2023년 기준 전북의 외국인 유학생은 10,373명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전주시 쏠림 현상(48%)과 졸업 후 수도권 및 본국으로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설문 결과 역시 70%대에 달하는 높은 취업 의향과 달리, 인턴십이나 직무 한국어, 비자 경로에 대한 인지는 현저히 부족하며, 특히 지역 사회의 포용성 체감이 실제 잔류 및 안착 의향을 좌우한다는 단서를 제공한다(서연미 외 2025).

결과적으로 전북의 양상은 선행연구가 제시한 개인 역량, 캠퍼스 환경, 구조적 조건, 졸업 후 이동성의 상호작용 틀과 정확히 부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북 유학생의 사례를 ‘적응 요인’과 ‘정착 여건’이 교차하는 전주기 행렬로 구조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자 경로의 전환(D-2→D-10→E-7→F-2-R)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적 분기점을 포착하고, 각 요인이 결합하여 어떻게 실질적 정착 혹은 이탈로 이어지는지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실증할 것이다(이수경·정지혜 2016; 최희정 2022; 서연미 외 2025).

[표 2-1]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 목록

구분	저자	년도	제목	간략한 주요 내용	방법론
관점·이론 전환	김도혜	2019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inter-Asian 맥락, 학업 외 사회·문화자본의 재배치 ⇒ '유치→경로/정책'으로 초점 이동	동향/개념 리뷰
지역 청년 일자리 실태	이수경·정지혜	2016	외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 변인: 메타분석	자아탄력성·문제해결·의사소통 능력이 향상에 따라 적응 전반(중간 이상 효과) 확대	메타분석
	백성희	2016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물리환경·차별 풍토 인식·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양적(설문/회귀)
	최현실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초기 외로움·언어장벽·정보 공백 ⇒ 또래·장학·학사 활용 시 '수동→능동' 전환	질적
	오대영	2025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과 모국 미디어 이용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미디어=정보/언어 경로, 모국 미디어=정서 완충(이중 레버)	양적(경로분석)
생활·노동과 불법성	Battsengel Tumendemberel·김도혜	2020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정책-대학/유학원-시장 상호작용이 만드는 '생산된 불법성', 권리 취약성	질적(면접)
	김도혜	2021	한국 지방 대학 유학생들의 노동 경험	시간제 가능성(불)균형노동 의미 서사; 시간표/언어요건/정보 분기점	질적 사례연구

구분	저자	년도	제목	간략한 주요 내용	방법론
졸업 후 경로·정착	최희정	2022	이동과 정착 사이	취업 후에도 임금·입지 주변성, 소통 장벽 ⇒ '이동 가능한 상태' 지속	질적 사례연구
	김도혜·최희정	2021	지방대학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결정과 주요 요인 탐색	전공/학위·언어자본·네트워크 교차가 체류/귀국/제3국 이동을 분기	탐색적(면담)
	김형기	2024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정주에 관한 연구	높은 의향대비 전환 실적 저조의 실행격차, 정보·행정 지원 공백	사례연구
법·제도· 거버넌스	김연홍·이성순	2020	중장기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컨트롤타워-통합 이민법-지원센터, 인력부족 리스트 기반 통합 운용	정책/제도 분석
	손흥기	2023	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지위 및 유치 확대와 활용방안 연구	특례·절차 간소화, 체류경로 다변화, 예측 가능한 행정지원	법제 검토
	이윤주·김명광	202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 장벽 고찰 연구	D-10·E-7·동반가족 등 복합 장벽 유형화, 표준화·직무한국어 제안	질적(면담)
	김도혜	2025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 대학 유연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용트랙·예외적 학사 등 유연화의 형평성·학위가치 훼손 가능성	비판적 정책 검토
지역·종합	서연미 외	2025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연구	정주 패키지(언어·주거·일자리·행정), 전주기 지역 표준 제안, 전북 사례 포함	종합연구

출처: 저자정리

## 나. 시사점에 따른 연구 고려사항

### ■ 분석 관점: 선형적 단계에서 '순환적 전주기'로

본 연구는 분석의 시간축을 단순한 선형 단계가 아닌, 이주 생애주기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유치에서 지역 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류 자격 변경(D-2/D-4→D-10→E-7→F-2-R)이라는 '전환 이벤트'의 연쇄로 파악했으며, 취업 이후에도 언제든지 재이주가 가능한 '유동적 정착'의 속성을 분석의 전제로 삼았다. 이는 분석 단위를 단일 시점의 정적인 적응이 아니라, 경로가 변화하는 동적인 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김도혜 2019; 최희정 2022).

### ■ 분석 틀: 개인·환경·구조의 다층적 교차

현상을 설명하는 틀로는 개인·환경·구조의 세 층위를 입체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개인의 역량(자기효능감, 의사소통)과 캠퍼스 환경(정보 접근성, 차별 풍토)은 상호작용하며 적응의 수준을 결정하고, 비자·행정 규제나 노동시장 관행 같은 구조적 요인은 선택 가능한 경로 자체를 제약한다. 본 연구는 특정 요인 하나에 주목하기보다, 이들 세 층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다(이수경·정지혜 2016; 백성희 2016).

### ■ 현장 탐색: '생산된 불법성'과 구조적 불일치

생활 및 노동 영역의 분석은 '생산된 불법성'의 관점에서 현장의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시간제 노동의 가능성은 유학의 유인책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허용 직종의 협소함, 정보 비대칭, 학업·노동 시간의 구조적 불일치가 겹치면서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기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과 중개 채널의 작동 방식을 심층면접을 통해 서사화하고, 이를 관련 규정 및 통계와 대조하는 삼각검증을 수행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높였다(김도혜 2021; Tumendemberrel·김도혜 2020).

---

## ■ 정책 지표 및 데이터 활용의 현실화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기존의 '단순 유치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역 정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재의 통계 시스템으로는 유학생이 졸업 후 실제로 지역에 남았는지, 어떤 비자로 변경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전북특별자치도가 관리해야 할 핵심 지표로 '졸업 후 취업률', '비자 전환율(D-10→E-7)', '지역 정착률' 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의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 단계에서는 이러한 행정 데이터를 직접 연계하여 분석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통계적 분석보다는 심층면접을 통해 이탈과 안착의 구체적인 사유를 질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다(김형기 2024; 손흥기 2023).

## 2. 국내 유학생 정책 동향

### 가.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체류·비자 제도 운영 동향

#### ■ 유입에서 정착·통합의 관점으로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은 2023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단순한 유입 관리에서 벗어나 외국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정착·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과거에는 외국인을 노동력 충원의 수단으로 한정하여 체류합법성 관리와 위반 억제에 집중하였다면, 최근에는 장기 체류 경로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이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추진체계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단편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종합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법무부 2024a). 이러한 기조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학업-취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경로에서 체류자격 전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진화하고 있다.

[표 2-2] 제 4차 외국인정책의 정책 방향 전환

	1차-3차	4차
유입관점	- 노동력 충원	- 우리 사회 구성원, - 전문·숙련인력 등 다변화
정책방식	- 소극적 단순 체류 지원	- 능동적 지역 정착 유도
추진체계	- 단편적·분절적 중앙중심	- 종합적·체계적, - 중앙-지방 협력

#### ■ 유학생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은 ‘유입 관리’ 중심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통합’ 중심으로 기조가 전환되고, 이러한 관점이 외국인 유학생 분야에도 직접 확장되고 있다(법무부 2023; 2024a). 유학생을 단순한 유치 대상이 아니라 잠재 지역 정착 인재로 재정의하고, 학업 이후 “전문취업(E)”에서 “거주(F)”로 이어지는 전주기 경로의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되고 있다.

이 기조의 대표적 수단으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 도입되어, 국내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학위·연구실적 등 정량 지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거주 및 영주로의 진입을 신속화하는 경로가 마련되었다(법무부 2023). 패스트트랙은 학업→연구·산학경험→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연결을 제도화함으로써, 졸업 직후 체류 단절을 완화하고 산업·연구 현장으로의 빠른 진입과 장기 정착을 가능하게 한다.

패스트트랙의 운용은 전공·성적·연구실적, 현장실습·인턴십, 한국어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지역사회 기여 등 성과를 포인트화하여 기준 충족 시 체류자격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법무부 2024a). 전공·직무 정합성은 표준직무기술서나 NCS와의 매칭을 통해 평가되고, 대학·지자체·기업의 3자 협약을 통해 계약학과·현장실습·조건부 채용이 패키지로 연동되어 실질적 정착을 유도한다.

2025년에는 기존 이공계 특성화기관 중심의 적용 범위를 지방거점 국립대 및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보도되었다(연합뉴스 2025). 이는 유학생의 분류 경로를 특정 기관·권역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대학으로 분산·확대함으로써, 지역 정착 중심 구조와 지역 인력 수요 간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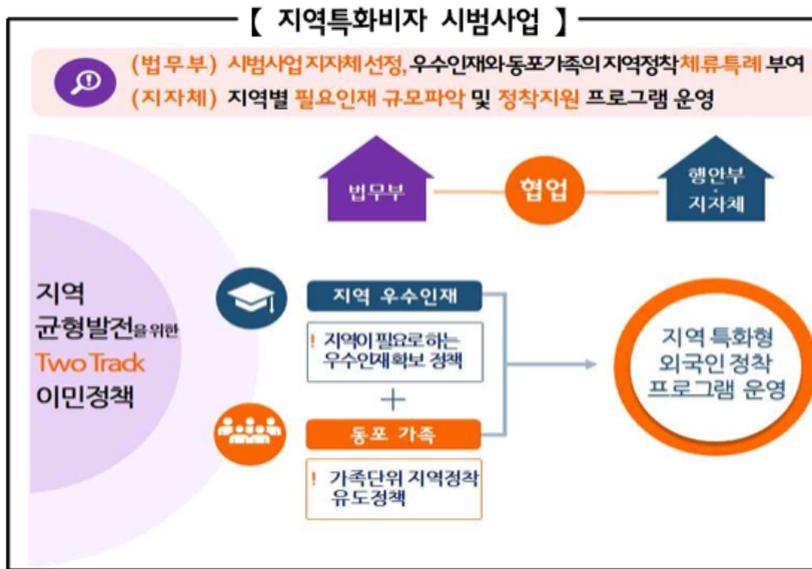
출처: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그림 2-1]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 ■ 지역특화형 비자(F-2-R): 유학생 지역 정착 경로의 제도화

지역특화형 비자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신설된 제도로, 지자체장이 추천한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R)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법무부 2022). 초기 운영에서 한국어능력(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일정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계약과 실거주 요건이 제시되었고, 이는 지역 대학 졸업 유학생이 학력·언어·고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지역 취업→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졸업 후 진로 설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법무부 2022).



출처: 법무부, (2022).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실시

[그림 2-2]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2025년에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운영이 다년도 계획으로 전환되고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었다(법무부 2025a).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해 대상 권역을 넓히고, 참여 기초지자체와 배정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수요 대응력을 높였으며, 유학생 관점에서는 한국어 기준을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 4단계로 상향해 현장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부족 업종 전반으로 취업 가능 범위를 넓혀 초기 취업 기회를 넓혔다(법무부 2025a). 아울러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설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의 전환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유학생이 졸업 후 전문취업 또는 숙련트랙으로 진입해 일정한 경력·언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R)로 전환하는 중·장기 사다리가 보완되었다(법무부 2025a).

종합하면 지역특화형 비자는 2022년의 시범 도입으로 유학생의 지역 정착 경로를 제

도화하고, 2025년의 확대·개편을 통해 언어·취업·고용환경 요건을 현실화함으로써 D-2/D-4(유학)→E-7-1/E-7-4R(취업)→F-2-R(거주)로 이어지는 유학생 본류 경로를 한 층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법무부 2022; 법무부 2025a).

##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권역 단위 연계와 유학생 경로 확장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특화형 비자(F-2-R)의 설계를 권역 단위로 확장해, 동일 광역권 내에서 거주와 취업의 연계를 유연하게 허용하는 모델이다(법무부 2024b).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기초 아래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되,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전역에서 취업·거주 연계를 가능하게 하여 이동성을 확대했다(법무부 2024b).

유학생 관점에서 광역형은 학업 단계의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D-2/D-4(유학)→E-7-1/E-7-4R(전문취업)→F-2-R(거주)”로 이어지는 전환 경로를 권역 차원에서 촘촘히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법무부 2024b). 재정능력 심사 합리화,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학기 중 인턴십 허용 등은 학업-현장경험의 연속성을 높여 졸업 직후 단절을 줄이고 전문취업으로의 진입을 촉진한다(법무부 2024b).

전북권은 광역형 시범사업을 D-2 트랙과 연동해 운영 중이며, 외국인전용 계약학과·지역특화학과·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권역 단위 쿼터 670명을 배정하여 유입과 정착을 함께 확대하고 있다(법무부 2025b). 전북 모델은 학기 중 인턴십+시간제 취업→E-7-1/E-7-4R 진입→F-2-R 전환으로 이어지는 학업-현장경험-정규고용-지역 정착의 패키지형 경로를 지향한다(법무부 202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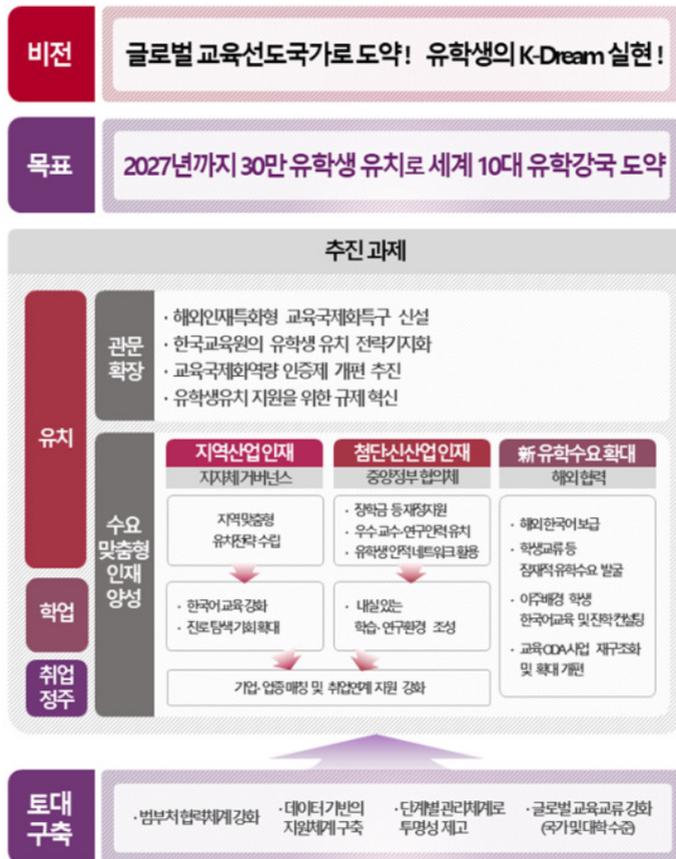
요컨대, 광역형 시범사업은 지역특화형의 현장 맞춤 구조를 유지하면서 권역 단위 이동성과 고용 범위를 넓혀 유학생 유입 확대와 지역 정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적 실험으로 평가된다.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초 변화에 따라, 유학생 관련 최근 제도들은 학업-취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경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패스트트랙), 지역대학·지방정부·기업을 매개로 한 지역 분산형 정착 경로(지역특화형·광역형)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 특히 광역형은 권역 내 이동성과 고용 범위를 넓혀 졸업 직후 단절 완화와 전문취업 진입 촉진에 기여한다.

## 나. 교육부: 고등교육 국제화와 유학생 지원 정책

### ■ Study Korea 300K: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관리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인재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 정책을 유치 중심에서 유치·양성·지역 정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발표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수립되었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3.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보도자료

[그림 2-3]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비전 및 핵심과제

이 사업은 단순한 유학생 수 확대가 아니라 질적 제고를 핵심으로 하며, △첨단·신산업 분야 석·박사급 우수인재 전략적 유치, △유학생 유치 경로 다변화 및 한국어 교육 확대, △지자체·대학·기업 연계형 현장실습·인턴십 기회 제공을 통해 학업-취업-지역 정착 경로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3). 전북의 경우 2023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7.3%)보다 높은 8.7%로 나타나, Study Korea 300K의 지역 수요형 인재양성 과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역산업 연계형 인재양성과 정착 기반 조성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지역 정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역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산업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지역RISE센터가 사업 기획과 성과관리, 산학협력 지원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중앙RISE센터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성과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RISE는 산업 맞춤형 교육(CUBE), 지역전략산업 공동 R&D(RAPID) 등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기업 연계를 촉진하며, 성과지표에는 지역 정착, 취업 증가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학생의 취업·정착 경로 설계에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교육부 2025). 전북 RISE 기본계획에도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 관련 과제가 반영되어 있어, 지역 유학생 정착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다.

[표 2-3] 시도별 RISE 사업 대표 과제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과제명

지역	대표 과제명	유학생 관련 과제 유무	외국인 유학생 관련 단위 과제명
서울	-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 첨단·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	- 첨단·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부산	-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 첨단·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	- 지역 및 대학 글로벌 경쟁력 제고
대구	- 디 프런티어 현장 캠퍼스 운영 * D5: 대구 5대 미래산업	○	- 유학생 전주기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
인천	-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원도심 가치 재창조	○	- 재외동포청 연계 외국유학생 정착 지원
광주	- 연구개발(R&D) 기반 혁신 실증 스튜디오 운영	X	

지역	대표 과제명	유학생 관련 과제 유무	외국인 유학생 관련 단위 과제명
대전	- 출연연 연구협력	○	- 외국인 교육·정주도시 구축
울산	- 지역산단 고위험 복합재난 대응 안전 교육 플랫폼 구축 - 지역혁신 선도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	X	
세종	- 한두리캠퍼스(One-Campus) 구축 및 운영	X	
경기	- 초격차 산·학·연 얼라이언스(GAIA) 고도화 * GAIA: 경기도 산학연 얼라이언스	○	-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강원	- 자·랩 기반 강원엘알에스(LRS) 공유 대학 운영	○	- 외국인 유학생 시티즌(CITIZEN) 프 로젝트
충북	- 충북 3대 전략산업(반도체, 바이오, 이 차전지) 핵심인재 양성	○	- 충북형 K-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 원
충남	- 지역 취업보장 충남형 계약학과 운영	○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전북	- 제이비(JB)-스타트업(새싹기업) 캠퍼스 구축	○	-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 지원
전남	- 전남·시군 동반 성장 프로젝트	○	-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양성 선도대학 -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양성 선도전문 대학 - 글로벌 전남 K-컬처 인재양성
경북	- 케이(K) 유시티(U) 프로젝트	○	- 해외인재 유치
경남	- G10 지역전략산업 특성화 대학 육성 * G10: 경남 10대 전략산업 : 우주항 공, 조선 등	○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제주	- 글로벌 케이 교육·연구 연계이션 플랫 폼 조성 사업	○	- Study Jeju 지역 정착 해외인재 유치·양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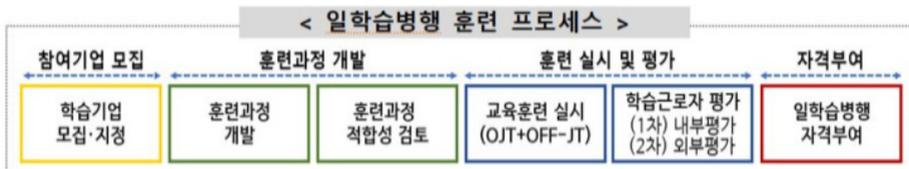
출처: 서연미 외, 2025. 49쪽 인용

종합하면, 교육부의 Study Korea 300K와 RISE는 각각 전국 차원의 유학생 유치·질 제고 전략과 지역 주도의 정착·취업 연계 체계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두 정책은 전북에서 유학생을 단순한 유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정착형 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실제 성과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 사회 수용성 제고 여부에 달려 있다.

## 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유학생 취업·기업연계·창업 연계 정책

###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현장기반 취업 연계 장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선채용-후훈련 방식으로 숙련인력으로 양성하고, 학업에서 취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4a; 2024b). 이 제도는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훈련(OJT)과 대학·공동훈련센터에서의 이론훈련(Off-JT)을 결합하는 구조로, 한국산업인력공단(HRDK)이 주관해 대학·공동훈련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관리하며, 재학 유학생뿐 아니라 졸업 후 구직(D-10) 체류자격 보유자까지 포함하는 트랙을 병행한다(HRDK 2024). 2024년 예산안 단계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124억 원, 1,000명 목표)된 이후, 고용서비스 고도화 및 외국인력 양성 패키지의 한 축으로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고, 운영기관 공모와 기업 매칭을 통해 현장 수요와 연계된 훈련-채용의 선순환을 지향한다(고용노동부 2024a; HRDK 2024).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mnSeq=328&seq=157900>

[그림 2-4] 일학습병행 훈련 프로세스

제도 운영은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업을 전제로 지역 단위 채용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2024년 10월 31일 충북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는 유학생 전용 온라인 매칭 플랫폼(K-WORK) 운영을 병행하며 지역기업 수요와 유학생 구직을 직접 연결하는 장으로 기능했다(중소벤처기업부 2024). 이러한 협업 사례는 교육부의 Study Korea 300K(유치·질 제고)와 RISE(지역 주도 정착·취업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혀, 학업-현장경험-취업-지역 정착을 한 흐름으로 엮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다만 초기 집행 과정에서는 참여 저조 등 시행착오가 보고되었다. 2025년 8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째 모집 규모 대비 신청 인원이 낮고 예산 집행행률이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법무부의 전문취업(E-7) 전환 특례 등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부족이 유학생·기업의 참여 유인을 약화시킨 결과로 해석되었다(세계일보 2025). 제도의 효과성은 결국 비자·체류(법무부), 대학·거버넌스(교육부), 훈련·고용서비스(고용노동부) 간 세부 요건·절차·KPI의 정합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RISE 거버넌스와 연계한 전공·직무 매칭, 학기 중 현장실습→졸업 후 D-10→E-7 전환의 단계 설계를 통해 실효를 높일 필요가 있다.

### 3. 지자체 및 대학 협력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가. 서울특별시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현재 지역의 외국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토대로 주요 키워드를 글로벌 확장 가능성과 풍부한 우수 인재 등으로 설정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자 한다. 특히 12개의 세부사업들 중 첨단·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해외 인재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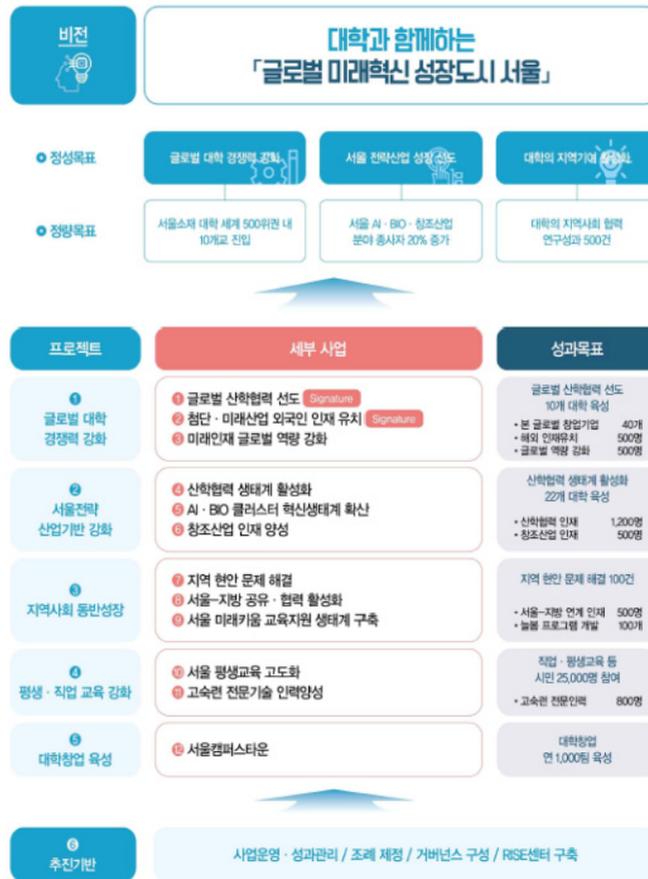
첨단·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부족한 현실이나 유학생의 유치는 대부분 어학 등 인문사회계열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석·박사급 유학생의 경우 이공계열이 4% 수준에 불과하여 첨단·미래산업 분야의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국내 취업 및 정착이 제조한 현실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외국인 인재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재 유치, 전문적인 교육, 취업으로의 연계 및 정착지원을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라이즈 기본계획에서는 첨단산업 인재유치 대학을 육성하고, 2029년까지 500명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산업 협력 취업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래산업분야 기업 중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해외 우수 인재를 공급하여 해외 인재의 정착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인재(특히 석사 이상 고급인재)를 유치하며 학위과정 운영, 한국어 연수 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하고, 산학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 연계 및 유학생 맞춤 기숙사 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는 서울글로벌센터를 통하여 기업 발굴, 취·창업 지원, 비자 등 인프라 구축, 홍보 지원과 같은 유학생 정착패키지 사업을 시행하며 서울글로벌센터 내 외국인의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유학생 전용 기숙사를 제

공하는 등 정착을 지원하며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 및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대학 창업 육성 프로젝트에서는 대학 창업 육성을 학생 창업과 교원 창업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창업까지 확대하여 유학생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인의 취업 뿐 아니라 창업 지원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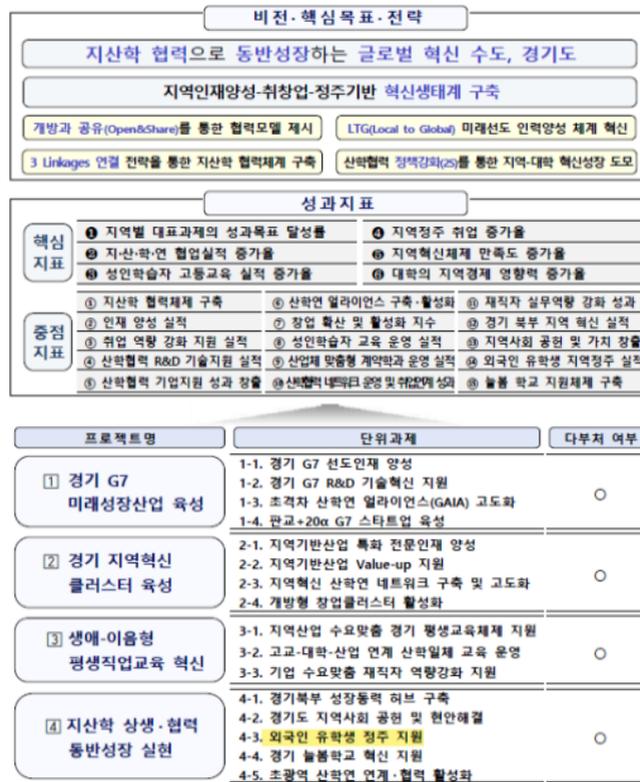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혁신 성장 기본계획  
[그림 2-5] 서울특별시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나. 경기도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경기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기본계획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록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라이즈 계획의 과제로 포함하였다. 4개 프로젝트, 16개의 단위과제 중 지식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 프로젝트의 단위 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선정하였다.



자료: 경기도, 경기도 GRAND-RISE 기본계획

[그림 2-6] 경기도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경기도와 도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학생 유치와 더불어 유학생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안착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육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기도 라이즈 기본계획에서는 2029년까지 매년 200명씩, 1,000명의 외국

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연구 중심 인력인 석·박사 과정 유학생의 유치를 지원하고, 유학생 전담 학과 및 영어강의 확대를 통한 특화 수업 개설 등을 진행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매결연 도시나 대학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 중점산업과 연계된 유학생을 유치하고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학생에 특화된 취업 관련 멘토링, 채용박람회 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 라이즈 참여 대학 중 한국공학대학교의 경우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착율이 낮은 이유를 유학생의 전공이 대부분 인문 분야로 E7 비자(숙련기능인력)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서 낮은 적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공학기술교육 학위과정 개설 및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의 현장실습 참여를 의무화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한 인력공급망 확충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서 정착하는 인재가 되도록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 대전광역시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속적인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에 따른 지원 체계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기본계획에 담았다. 대전광역시는 2017년 대비 2023년의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율이 8.4%로 전국 평균(6.6%)을 웃돌며 전체 대학/대학원 재적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대전지역 특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중점 추진과제에서 우수한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지자체의 환경을 토대로 라이즈 기본계획의 12개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 교육·정착도시 구축을 선정하여 대전광역시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도시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조기에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기

존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통합 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학생을 유치하여 교육하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라이즈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가상 박람회를 통해 유학생 출신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고도화 및 장학 프로그램(대전형 초청장학제도 등)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 및 한국 체류 기간에 따른 맞춤형 교과/비교과 커리큘럼 제공과 더불어 유학생에게 현장실습 및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실무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유학생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학생을 위한 행정, 의료, 심리상담 등 원스톱지원센터를 구축하며,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해 유학생의 타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 기회를 제고할 예정이다.

대전 일류 대학교육 혁신				
비전	(A-B-C-D+QR)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목표	교육혁신 기반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기반 동반성장	일류경제과학도시 기반 정주혁신	
	①대표과제 달성률 ③성인학습자 실적	②지산학연 협업실적 ⑥지역혁신체제 만족도	④지역정주 취업 ⑤대기업의 지역경제연동력	
	지표 D1: 대전형 '360°'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혁신지수 지표 D2: 수평적 협력적 동반성장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지수 지표 D3: 일류경제과학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D-Triple(D1+D2+D3) 대전 RISE 생태계 지수			
추진전략	Strategy 1 질벽을 허무는 대전형 '360°' 추진체계	Strategy 2 Middle-up-down 대전형 '360°' 운영체계	Strategy 3 출연연 연구협력으로 완성하는 대전형 '360°' 대표과제	
추진과제	프로젝트명	단위과제명	핵심	자율
	1 지역선도형 대학교육 특성화	1-1 미래인재 양성 1-2 현장인재 양성	1000 1000	D1
	2 지역정주형 취·창업 활성화	2-1 얼리버드 취업지원 2-2 지역창업 촉진 2-3 지역정주 활성화	1000 1000 100	
	3 지속발전형 지·산·학·연 협력 고도화	3-1 출연연 연구협력 3-2 대학간 교육협력 3-3 지역자원 산학협력	10000 1000 1000	D2
	4 생애성장형 직업·평생교육 강화	4-1 산업인력 재교육 4-2 시민 평생교육	10000 10000	
5 RISE 추진형 지역인재 해결	5-1 외국인 교육·정주도시 구축 5-2 지역현안해결 및 품질도시 조성	100 100	D3	

자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서

[그림 2-7] 대전광역시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라. 전북특별자치도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내 외국인 인구는 15년간 약 5.3배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도 전국 7위 수준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다만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이탈률이 전국에서 5번째(9.2% 수준)로 높아 유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라이즈 기본계획의 4대 프로젝트, 14개의 단위과제 중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프로젝트의 단위 과제 중 하나로 유학생 유치·교육·취업·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 지원을 선정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1개 시군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외국인의 유치 및 정착 지원을 통한 생활인구의 증가가 필요하다. 또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력 활용 수요조사 결과, 전체 502개의 응답기업 중 152개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35개의 기업이 고용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여 기업의 채용의사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 취업률을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학에서 양성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전북특별법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활용하여 연구기관·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에 대한 선순환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공동유치 체계를 구축하여 도와 대학이 협력하여 JB국제교류를 지원하며 거점국가별 JB 새만금 한글학당을 확산하는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학생 유치를 강화한다. 또한 국제문화연수센터를 운영하고 유학생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제조업의 현장 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지역기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를 위하여 대학별로 유학생 역량개발 및 취업·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대학은 산업계와의 연계 취업 약정을 통해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는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에 이은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특화비자를 연계하여 전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북특별법상 지구 및 특구 내 기업·연구기관에 취업할 시 비자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취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착 지원금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일자리 경쟁력	일반대/전문대	과제규모	컨소시엄 여부
1 생명·전환산업 혁신 (JB-SPARK)	1. 생명·전환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일반대	대	가능
	2. 미래수요대응 JST 공유대학 육성	일반대 전문대	대	가능
	3. JB-RISE 연구 클러스터 구축	일반대 전문대	대	필수
2 지역 주력산업 성장 (JB-ROOT)	1. 주력산업 밀착형 인재양성	전문대	대	가능
	2. JB-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일반대 전문대	중·소	가능
	3. 해외 우수인재 윈스톱 지원	일반대 전문대	중·소	가능
3 평생교육 가치확산 (JB-EverLearn)	1.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 구축	일반대 전문대	대	가능
	2. J-커뮤니티 캠퍼스 구축	일반대 전문대	소	필수 (대학·시군)
	3. 지역산업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	전문대	대	필수 (대학·시군)
4 동행협력 지역발전 (JB-TEAM)	1. 지역현안 리빙랩 활성화	일반대 전문대	소	필수 (대학·시군)
	2. 로코노미 거점 조성	일반대 전문대	소	필수 (대학·시군)
	3. 지역품은 대학·초·중·고교 이음 활성화	일반대 전문대	소	필수 (대학·시군)
	<+1>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	일반대	중·소	가능
	<+2> 지역자원 연계 늘봄학교 지원	일반대 전문대	소	필수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2025-202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계획서

[그림 2-8]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주요사업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 중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은 한 권역으로 묶여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지역산업 육성 가속화를 위한 공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한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해외유학생 유치 국제화 인프라 조성 및 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을 선정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지역 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북특별법 외국인 체류자격 등 특례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한 지원(정착 유도를 위한 주거비 등)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사업에는 전주시와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임실군, 순창군이 한 권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중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운영 및 외국인 유치 지원 확대에 대한 사업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산업의 일자리를 연계하고자 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조례'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공공·민간기업에 대한 인턴십을 운영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 마. 강원특별자치도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커지는 외국인 유입 규모에 반해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1.6% 수준으로 적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대책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기본계획에 담았다. 강원특별자치도 라이즈 기본계획은 5대 프로젝트의 13개 프로젝트 중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을 중점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외국인 유학생 시티즌(CITIZEN) 프로젝트를 설정하였다.

---

외국인 유학생 시티즌(CITIZEN) 프로젝트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습과 일의 연결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시민화를 추진한다. 또한 도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및 교육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유학생 유치기반 조성, 유학생 적응 지원, 유학생 정착 지원이 있다. 먼저 유학생 유치기반 조성은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유학생의 유치를 위하여 도내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유학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유학생을 유치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서비스센터를 개설 및 운영하며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업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학계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지원한다.

유학생에 대한 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권역별 강원 한글학당을 운영한다. 도내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한국어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유학생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한글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를 전파 및 확산하기 위한 재외문화원 특별전 등을 개최하고 멘토 지원, 지역문화 탐방, 기업 탐방 등을 통해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유학생 대상 취업 박람회나 유학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세미나, 지역기업으로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이후 취·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지속적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커리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우며, 지자체에서 연계하여 취업자의 주거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착율이 향상됨으로써 지역의 인력난이 해소됨과 동시에 지역 활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문화다양성이 확대되는 대학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비전</b>	<b>대학-지역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b>			
<b>목표</b>	<b>지·산·학·연 혁신 동력 「대학도시」 생태계 실현</b>			
	<b>일 자리</b>		<b>삶의 질</b>	
<b>정량</b>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정주 환경	도민 행복
	첨단산업 기업 매출액 1조 원 증가	첨단산업 전문인재 1만 명 양성	지역정주를 20%+ 달성	주민행복지수 전국 TOP 3
<b>추진 전략</b>	<b>지역혁신</b>	<b>대학혁신</b>	<b>산업혁신</b>	
	▶ 청년 지역 정주여건 조성 ▶ 도 전역의 캠퍼스화	▶ 유연한 학사 구조 운영 ▶ 수요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	▶ 강원형 핵심산업 육성 ▶ 지·산·학·연 협업체계 가동	
<b>거버넌스</b>				
<b>프로젝트</b>	<b>5대 프로젝트</b>	<b>13 단위과제</b>	<b>다부처</b>	<b>공간범위</b>
	<b>1] 더 특별한 도약</b> 강원 전략산업 육성	① 자산·학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 ② 대학-기업 연계 시군 특화산업 육성	○	광역, 권역 기초
	<b>2] 더 특별한 변화</b>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① 지역 취업-정주형 특성화 대학 육성 ② G-Lab기반 강원·RS공유대학 운영 (5년 단위과제) ③ 지역협력기반 늘봄학교 체계 구축 ④ G-의료체계 고도화	○	광역 광역 광역
	<b>3] 더 특별한 성장</b> 강원형 스타트업 허브 조성	① 기술창업 허브 구축 ② 로컬창업 큐브 운영	○	광역 광역
	<b>4] 더 특별한 배움</b> 강원형 직업·평생교육 체계 구축	① 자산·학 연계 평생교육 클러스터 조성 ② 지역수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③ 지역산업 선도 전문인재 양성	○	광역, 권역 기초, 광역 기초, 광역
<b>5] 더 특별한 동행</b> 대학주도형 지역연안 해결	① 지역유기대응 공동연구소 G-Lab 구축 ② 외국인 유학생 시타존(CITIZEN) 프로젝트	○	기초 기초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2025-2029 강원 RISE 기본계획

[그림 2-9] 강원특별자치도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주요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미래 청정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상 중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공존할 수 있는 국제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삼척시에 강원도권 글로벌 한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향후 현재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국한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등학생까지 유치하고자 한다.

## 바. 경상북도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경상북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기본계획에서는 4대 프로젝트, 17개 단위과제 중 하나로 해외인재 유치를 선정하였다. 경북지역 대학의 2024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11,383명으로 전체 제적생의 6.8%를 구성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교육정책에서 외국인 우수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특화비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이후 현재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 글로벌 학당,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K-GKS 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K-social 교과과정,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등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며 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통하여 졸업 후 취업과 비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경상북도 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에서의 지원은 경상북도 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산업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확산되고, 외국인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 발맞춘 것이다. 더 나아가 경상북도 라이즈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취업과 지역 정착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라이즈 기본계획 중 해외인재 유치 과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과 교육, 정착까지 해결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며, 단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1만 명까지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정부초정 장학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경상북도에서 외국인 우수인재를 확보하고자 한다. 문화교류 체험학습이나, 문화학습 강좌 등을 운영하여 외국인이 한국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국인 한글학당 운영 및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을 매칭하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지원을 돕는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도내 산업과 기업에 취업하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매년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 지수를 2%씩 증가시키는 것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료: 경상북도, 2025-2029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그림 2-10] 경상북도 라이즈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주요사업

경상북도 영천시시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교육 혁신 및 지역 밀착형 평생파트너, 영천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자원과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전 기관과 시민이 합심하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을 제시하였고 그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 계약학과 신설을 선정하였다. 지역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전형 및 산업체 취업 연계 계약학과를 신설하며,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 4.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와 지역 적용 조건

---

### ■ 호주: 유학생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간주

호주는 국제교육을 대표적 서비스 수출로 위치시키며, 유학생을 경제·인력정책의 핵심 축으로 다룬다. 2024년 기준 교육수출 규모는 515억 호주달러로, 수업료 217억과 생활 지출 296억의 합이며, 서비스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ustralia 2025; RBA 2025). 유학생 구성은 중국·인도 비중이 크지만, 정부는 이민전략 조정과 학업 후 체류경로 준비를 통해 출신국 다변화와 질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RBA 2025).

졸업 후 취업경로(Temporary Graduate 비자·Subclass 485)는 2024년 7월 1일부터 학위 수준에 맞춘 스트림(Post-Higher Education Work/Post-Vocational Education Work)으로 재편되었으며, 체류기간은 대체로 2-3년 범위로 정렬되었다(학위 수준에 따라 상이). 이에 따라 졸업생은 표준화된 기간 동안 취업탐색·경력형성을 하고, 이후 고용주 스폰서나 숙련이민 경로로 전환을 모색하는 구조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4a).

호주의 고용주 스폰서 비자(employer-sponsored visa)는 호주 내 기업이 국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특정 직무를 ‘지명(nomination)’하면, 그 지명을 바탕으로 외국 인재가 합법적으로 근로·체류할 수 있게 설계된 경로다. 정부는 이때 직무 적합성(직업분류·학력·경력·영어)과 함께 임금이 시장임금과 정부 최저임금선(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TSMIT)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즉 ‘회사 제안서+자격요건+임금요건’이 동시에 맞아야 승인되는 구조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5a).

핵심 임시 스폰서 비자는 “Skills in Demand(SID) 비자(서브클래스 482)”로, 국내에서 적절한 호주 근로자를 구할 수 없을 때 기업이 해외 숙련 인력을 직무 목록(Core Skills Occupation List)과 임금 기준에 맞춰 스폰서 할 수 있게 한다. 이 경로는 노동력 부족을 신속 보완하는 용도이며, 졸업생이 임시 취업(취업경로비자 서브클래스 485)을 통해 경력을 시작한 뒤 정규 고용으로의 발판을 마련할 때 널리 활용된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5b; 2025c).

지역 정착(regional settlement)과 직접 연결되는 비자는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Visa(이하 서브클래스 494)이다. 서브클래스 494는 지정 지역(regional area)의 고용주가 인력부족 직무로 지명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최장 5년 유효의 임시 취업 비자로, 비자 조건상 지역에서의 거주·근로가 전제된다. 이 경로의 핵심 가치는 영주로의 제도적 사다리가 함께 설계돼 있다는 점으로, 서브클래스 494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근로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비자인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비자(서브클래스 191)”로 전환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4b; 2025d; 2025c).

정책 설계의 방향성도 지역 잔존·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서브클래스 494 등 지역 비자군 안내에서 “지역에서 일하고 거주한 실적”이 영주 전환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고용주 스폰서 전반에 대해 임금 원칙(시장임금+TSMIT)을 강화해 저임금 유인·경로 남용을 막는다. 이는 실재하는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전제로 회사·사람·지역을 하나의 묶음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결과적으로 취업과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5a; 2025d; 2025e).

요약하면, 호주 고용주 스폰서 경로는 “Skills in Demand(SID) 서브클래스 482”로 신속한 고용 연계를, 서브클래스 494→191로 지역에서의 경력·생활을 영주로 연결하는 2단 사다리를 제공한다. 유학생은 졸업 후 임시 취업(485) 구간에서 경력을 쌓은 뒤 지역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지역 근로·거주 실적을 확보함으로써 영주 전환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 때문에 고용주 스폰서 경로가 곧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5b; 2024b; 2025d).

## ■ 독일: 전문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유학생 유치·정착 확대

독일은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에 대응해 유학생을 노동시장 핵심 자원으로 포섭하는 기조를 강화해 왔다. 규모 면에서도 2020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 세계 4위(비영어권 1위)로 파악되며, 인재확보 전략의 한 축으로 졸업 후 체류·취업·지역 정착 경로의 예측 가능성을 제도화했다(OECD 2020).

체류·비자 연계는 크게 세 단계로 요약된다. 첫째, 독일 내 대학을 졸업하면 최대 18개월의 구직 체류허가(job-seeking residence)를 받아 어떤 형태의 취업도 가능한 상태

에서 전공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다(BAMF 2025; Make it in Germany 2025a). 둘째, 취업이 성사되면 일반 취업체류나 EU 블루카드 등으로 전환할 수 있고, 최근 졸업 3년 이내의 신입에게 적용되는 블루카드 연봉 문턱(2025년 기준 €43,759.80) 등 완화된 진입 요건이 마련돼 초기 진입성을 높였다(Make it in Germany 2025b). 셋째, 독일 밖에서 바로 취업을 탐색하려는 경우에는 오퍼튜니티 카드(Opportunity Card: Chancenkarte)로 최장 1년 구직 체류가 가능하고(점수제),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한 졸업자는 ‘거주법 §20(구직 체류허가)’에 따라 최대 18개월 동안 근로 제한 없이 구직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취업 시 취업체류·EU 블루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Make it in Germany 2025c). 이러한 장치는 졸업 직후의 ‘완충 구간’을 제도화해 노동시장 진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 체류로의 전환 발판을 제공한다(BAMF 2025). 전체적으로 독일은 유학생→졸업생→숙련인력의 전환을 빠르게 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업데이트하는 추세다.

#### ■ 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위기에 대응한 유학생 유치·정책 확대

대만은 반도체·금융·STEM 등 전략산업의 숙련인력 부족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인 인재풀로 간주하고, 인턴십 중심의 현장경험-취업 연계를 전면에 세우고 있다(서연미 외 2025). 대표적으로 교육부·대학이 운영하는 TEEP(TEEP, Taiwan Experience Education Program)은 장학금·인턴십 수당·기숙사 지원을 결합해 참여 장벽을 낮추고, 중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을 묶어 ‘언어·직무·생활’의 초기 적응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는 대만 내 취업에 필요한 언어·직무 스킬 습득과 졸업 전 기업 접점을 동시에 강화하는 장치로 설계되어 있다(서연미 외 2025).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인턴십 파일럿은 해외 대학 재학생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삼아 R&D 분야 유학생을 조기에 유치·연구현장에 배치하고, 이후 대만 유학·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사전경험→본 학위/취업’ 경로를 제시한다(서연미 외 2025).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유학생을 단순한 교육소비자가 아니라 지역 산업생태계의 예비 인력으로 위치 짓는 정책기조를 뒷받침한다(서연미 외 2025).

졸업 후 정착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매칭·네트워킹이 두드러진다. 신베이시의 ‘기업-외국인 인재 매칭 플랫폼’은 요구진단-정보세션-기업방문-채용박람회로 이어지는 4단계 프로세스로, 지역 핵심 산업 수요에 맞춘 매칭과 현장 채용을 촉진한다

(서연미 외 2025). 타이중시도 상공회의소·대학과 함께 국제학생-지역기업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해 다수 대학·유학생이 기업 정보와 대만 생활·취업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접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방정부 모델은 유학생의 ‘캠퍼스→산업단지’ 이동 경로를 구체화해 지역정착의 마찰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서연미 외 2025).

종합하면, 대만은 중앙정부(교육·과학기술)-대학-지방정부가 연결된 ‘인턴십-언어·생활 지원→현장매칭→채용’ 사다리를 통해 유학생을 전략산업의 숙련인력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책의 주안점은 (1) 재학 중 현장경험의 제도화(TEEP·NSTC), (2) 지방정부 주도의 수요기반 매칭과 채용행사 상시화, (3) 초기 체류·생활비용을 낮추는 장학·기숙사·정보제공 패키지에 있으며, 이는 졸업 직후의 이행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서연미 외 2025).

[표 2-4] 국가별 해외의 유학생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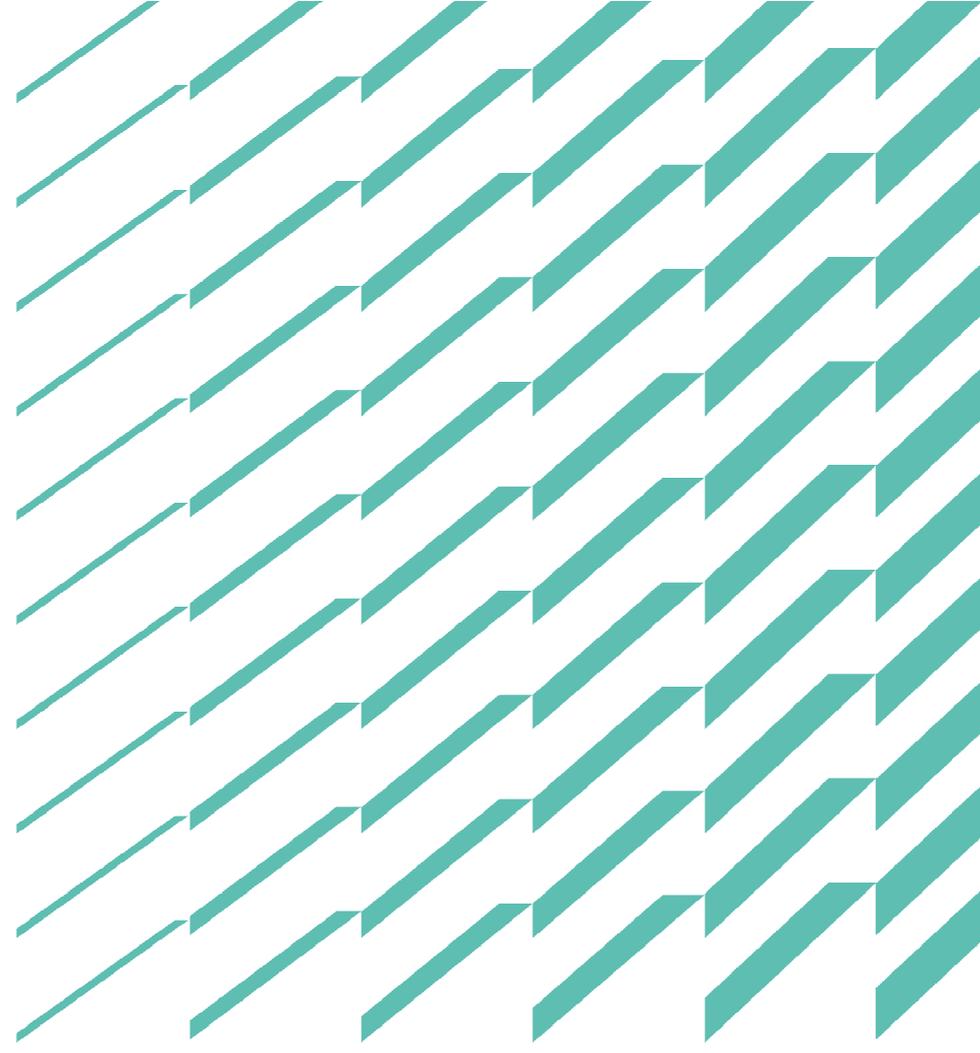
구분	호주 (남호주·서호주)	독일	대만
정책 기초	- 유학생을 지역경제에 필요한 숙련인력으로 육성하고 이민 연계 유도	- 졸업 후 취업 기반의 체류 연장 지원을 통해 정착 유도	- 유학생의 취업정착 장려 및 우수인재 유입 확대
비자 연계	- 졸업 후 기술이민 비자(Subclass 190/491)로 전환 가능주정부 지명제도 활용	- 졸업 후 18개월 체류 비자 → 취업 시 일반 취업비자 전환	- 졸업 후 1년 체류 가능 → 일정 조건 충족 시 고급인재 체류증 등으로 전환 가능
정책 특징	- 주정부 지명 기반 - 기술·언어 요건 반영 - 지역 내 일정기간 거주 조건 부과	- 졸업생 전용 체류 비자 제도 - 언어 능력 및 취업 의지 중심의 전환 프로세스 적용	- 산업 인력 연계형 체류 제도 운영 - 정착 유도형 고급인재제도와 연계
지역정착 유도	- 주정부 지명 시 지역 내 정착 요건 부과 - 정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부 지역 중심의 고용시장 연계형 체류 제도 도입	- 지역대학 중심의 정착형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확대기업 매칭 및 채용 연계 강화
대학 역할	- 정주 스트림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정부와 협력한 취업 추천제도 마련	- 진로 멘토링 및 고용 플랫폼 제공 - 경력개발 중심 지원 강화	- 진로 설계 컨설팅 및 취업 연계 교육 - 정착 유도형 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

[표 2-5] 특성별 해외 유학생 정책

분류 기준	공통점 내용	주요 적용 국가
1. 유입→정착 경로 (진입-이행체계)	- 유학생을 학업→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 학업 후 체류 비자, 취업비자 전환, 고급인재 전환제도 운영	- 일본, 호주, 독일, 대만
2. 노동시장 연계 (고용체계 연계성)	- 전공 일치 요건, 연봉 요건 등 노동시장 매칭 기준 마련 - 인턴십, 취업매칭, 기업-대학 연계 제도 도입	- 독일(블루카드), 일본(전공-직무 연계), 대만
3. 지방정부 및 지역 연결성 (정치지 분산정책)	- 수도권 집중 방지 및 지역 인재 정착 유도 - 지역 비자, 주정부 지명, 지역 기업 연계 지원 확대	- 호주(주정부 지명), 독일 일부 주, 한국(광역형 비자 시범)
4. 비자 체계의 유연화 (체류자격의 다양화 및 완충제도)	- 조건부 체류 연장(예: Designated Activities), 창업 비자 등 도입 - 비자 전환 시 유연한 포인트제 운영	- 일본(포인트제), 호주(Subclass 190/491), 대만
5. 예측 가능한 행정 지원 체계 (정책 인프라)	- 유학생 대상 다국어 정보제공, 상담, 통합포털 구축 - 비자 절차 간소화 및 졸업 후 진로 안내 체계 마련	- 대만(Study in Taiwan), 일본(JASSO), 독일(Daad)
6. 통합적 유학생 전략 (정책 간 연계성)	- 고등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이민정책이 연계되어 설계됨 - 유학생을 교육소비자가 아닌 '이주주체'로 재정의	- 호주, 대만

## ■ 지역 적용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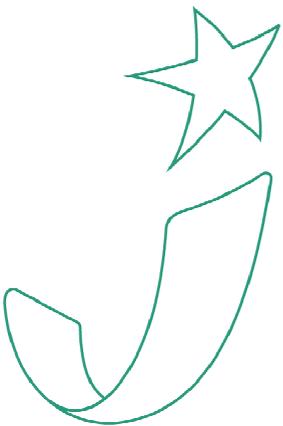
종합하면 해외 사례는 졸업 직후의 완충 구간(구직·현장경험), 지역 거버넌스와의 결합, 체감 가능한 정착 인센티브라는 공통 구조를 보여준다. 한국 역시 Study Korea 300K·RISE·광역형/지역특화형 비자·유학생 일학습병행 등으로 유사한 방향을 추진 중이며, 전복은 이를 학업-현장경험-취업-지역 정착의 전주기 패키지로 엮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절차의 예측 가능성(체류·비자 전환 타임라인)과 운영의 일관성(도-대학-기업-출입국 협업)이 성패를 가를 요소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내국 청년과의 혼합형 훈련·공동프로젝트를 기본값으로 두어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3장

###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통계 분석

1. 전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2.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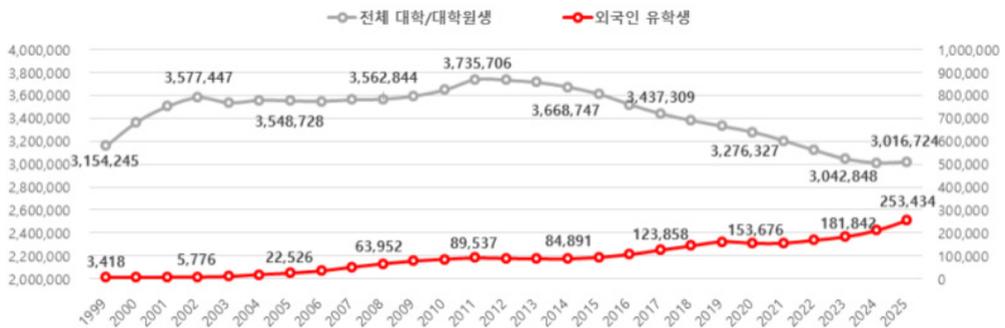


# 제3장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통계분석

## 1. 전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 ■ 외국인 유학생 규모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대학원생은 2011년 3,735,706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1999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1999년 3,418명에서 2025년 253,434명으로 약 74배 늘었고,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CAGR)은 약 18.0%이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 KESS 교육통계시스템

[그림 3-1] 전체 대학/대학원 제적생 및 외국인유학생 수 변화(1999-2025년)

2025년 기준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확인해보면, 서울특별시가 82,91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49,040명, 부산광역시 18,630명, 경상북도 16,109명 순으로 나타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은 8,650명으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2020년 대비 2025년 외국인 유학생의 시도별 증감정도를 보면, 경기도가 31,896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대비 2025년 유학생 수가 823명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정도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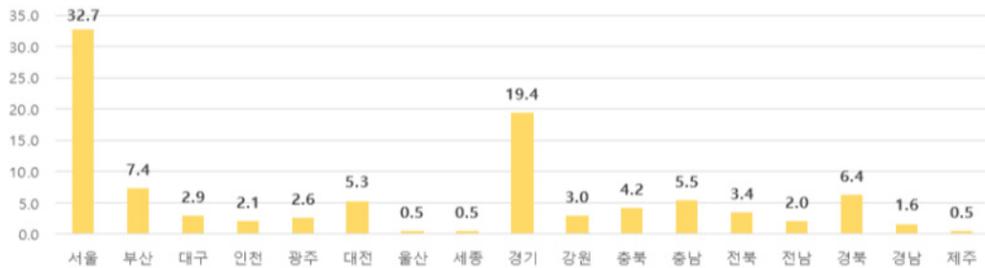
[표 3-1] 시도별 유학생 수(2000-2025년)

단위: 명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전국	3,980	22,526	83,842	91,332	153,676	253,434
서울특별시	2,091	8,895	33,406	42,648	61,481	82,911
부산광역시	207	1,630	6,090	6,533	10,814	18,630
대구광역시	134	701	2,783	3,193	6,824	7,457
인천광역시	117	442	1,813	1,850	4,397	5,440
광주광역시	68	698	2,765	3,191	5,549	6,640
대전광역시	155	1,080	4,918	5,558	7,749	13,478
울산광역시	0	115	401	826	1,706	1,333
세종특별자치시	-	-	-	595	1,217	1,169
경기도	216	1,233	6,705	7,466	17,144	49,040
강원특별자치도	78	795	1,934	1,980	3,258	7,565
충청북도	88	695	2,963	2,486	3,646	10,537
충청남도	308	1,600	5,978	4,503	8,369	13,871
전북특별자치도	136	1,067	4,239	2,894	7,827	8,650
전라남도	81	864	1,835	1,219	2,232	5,126
경상북도	179	1,951	5,176	3,789	6,959	16,109
경상남도	86	659	1,984	1,460	2,293	4,162
제주특별자치도	36	101	852	1,141	2,211	1,31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 KESS 교육통계시스템

2025년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54.2%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비수도권에는 45.8%가 분포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4%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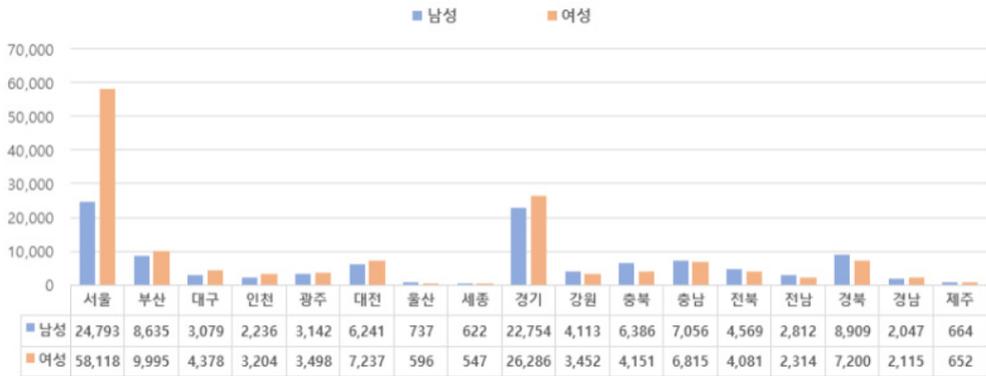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 KESS 교육통계시스템

[그림 3-2] 외국인 유학생의 시도별 분포(2025년)

2025년 기준 전체 유학생 중 남성은 108,795명, 여성은 144,639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 14.2%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성별 유학생을 나누어보면,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6개의 특별·광역시에는 남성보다 여성 유학생이 많았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유학생 중 남성은 24,793명인데 반해 여성은 58,118명으로 2배 이상 여성 유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와 경남은 제외한 7개의 광역자치도는 여성보다 남성 유학생이 더 많았으며, 충청북도가 남성 유학생 6,386명, 여성 유학생 4,151명으로 성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8,650명의 유학생 중 남성은 4,569명(52.8%), 여성은 4,081명(47.2%)으로 여성보다 남성 유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 KESS 교육통계시스템

[그림 3-3] 성별 시도별 유학생 수(2025년)

전국의 고등교육(대학/대학원) 재적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2025년 기준 8.4%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대전광역시가 9.3%로 뒤를 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5년 기준 전체 대학/대학원 재적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7.6%로 나타나 17개 시도 중 9번째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00년 대비 2025년의 유학생 비중 증감을 비교해보면, 경기도의 경우 2020년 유학생 비중이 3.6%에서 2025년 10.0%로 약 6.4%p가 증가하여 증가 정도가 가장 컸으며 충청북도는 2020년 2.8%에서 2025년 9.1%로 6.3%p가 증가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0년 5.8%에서 2025년 7.6%로 약 1.8%p가 증가하였다.

[표 3-2] 시도별 고등교육 재적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2000-2025년)

단위: %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전국	0.1	0.6	2.3	2.5	4.7	8.4
서울특별시	0.2	0.9	3.2	4.1	6.3	9.0
부산광역시	0.1	0.6	2.0	2.2	4.2	8.6
대구광역시	0.1	0.5	2.0	2.2	5.2	6.3
인천광역시	0.1	0.5	2.1	2.2	5.7	6.3
광주광역시	0.0	0.5	2.1	2.4	4.6	6.4
대전광역시	0.1	0.7	3.1	3.2	4.8	9.3
울산광역시	0.0	0.3	1.1	2.0	4.5	4.0
세종특별자치시	-	-	-	2.2	5.0	5.0
경기도	0.0	0.2	1.2	1.5	3.6	10.0
강원특별자치도	0.1	0.6	1.4	1.4	2.6	7.0
충청북도	0.1	0.5	2.1	1.7	2.8	9.1
충청남도	0.2	0.7	2.3	2.0	4.1	7.9
전북특별자치도	0.1	0.7	2.8	2.0	5.8	7.6
전라남도	0.1	0.8	2.0	1.4	3.0	8.9
경상북도	0.1	0.8	2.0	1.6	3.4	8.6
경상남도	0.1	0.4	1.4	1.0	1.9	4.2
제주특별자치도	0.1	0.3	2.7	3.4	7.1	5.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 KESS 교육통계시스템

## ■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2025년 기준 전체 유학생 중 학위과정인 유학생은 179,190명이며 비학위과정인 유학생은 74,244명이다. 학위과정 중 학부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사 과정이 120,150명으로 가장 많고, 석사 과정이 41,278명, 박사 과정이 17,762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학위과정 중에서는 어학연수가 58,764명으로 많았으며 기타연수는 15,480명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8,650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학위과정은 6,293명, 비학위과정은 2,357명으로 나타났다. 학위과정 유학생 중 학부는 4,368명, 석사는 994명, 박사는 931명이며, 비학위과정 중 어학연수는 1,922명, 기타연수는 435명으로 나타났다.

[표 3-3] 시도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단위: 명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전문학사/학사	석사	박사	어학연수	기타연수		
전국	179,190	120,150	41,278	17,762	74,244	58,764	15,480
서울특별시	57,194	34,461	17,510	5,223	25,717	17,867	7,850
부산광역시	13,086	9,183	2,715	1,188	5,544	4,147	1,397
대구광역시	4,331	3,123	754	454	3,126	2,712	414
인천광역시	3,849	2,878	782	189	1,591	1,131	460
광주광역시	4,056	2,478	1,007	571	2,584	2,000	584
대전광역시	9,035	5,895	1,683	1,457	4,443	3,578	865
울산광역시	874	475	163	236	459	306	153
세종특별자치시	1,009	627	348	34	160	121	39
경기도	35,047	25,377	6,372	3,298	13,993	12,494	1,499
강원특별자치도	6,240	4,723	889	628	1,325	1,052	273
충청북도	8,559	6,119	1,840	600	1,978	1,740	238
충청남도	9,692	6,417	2,476	799	4,179	3,684	495
전북특별자치도	6,293	4,368	994	931	2,357	1,922	435
전라남도	3,959	2,220	898	841	1,167	1,060	107
경상북도	12,566	9,665	2,039	862	3,543	3,138	405
경상남도	2,476	1,577	566	333	1,686	1,510	176
제주특별자치도	924	564	242	118	392	302	9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 KESS 교육통계시스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별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전문학사/학사가 47.4%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사는 16.3%, 박사는 7.0%,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은 29.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 중 비학위과정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41.9%), 경상남도(40.5%), 광주광역시(38.9%)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외국인 중 전문학사/학사 비중은 50.5%, 석사 11.5%, 박사 10.8%, 비학위과정 27.2%로 나타나 비학위과정보다는 학위과정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표 3-4] 시도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2025년)

단위: %

	계	전문학사/학사	석사	박사	비학위과정
전국	100.0	47.4	16.3	7.0	29.3
서울특별시	100.0	41.6	21.1	6.3	31.0
부산광역시	100.0	49.3	14.6	6.4	29.8
대구광역시	100.0	41.9	10.1	6.1	41.9
인천광역시	100.0	52.9	14.4	3.5	29.2
광주광역시	100.0	37.3	15.2	8.6	38.9
대전광역시	100.0	43.7	12.5	10.8	33.0
울산광역시	100.0	35.6	12.2	17.7	34.4
세종특별자치시	100.0	53.6	29.8	2.9	13.7
경기도	100.0	51.7	13.0	6.7	28.5
강원특별자치도	100.0	62.4	11.8	8.3	17.5
충청북도	100.0	58.1	17.5	5.7	18.8
충청남도	100.0	46.3	17.9	5.8	30.1
전북특별자치도	100.0	50.5	11.5	10.8	27.2
전라남도	100.0	43.3	17.5	16.4	22.8
경상북도	100.0	60.0	12.7	5.4	22.0
경상남도	100.0	37.9	13.6	8.0	40.5
제주특별자치도	100.0	42.9	18.4	9.0	29.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 KESS 교육통계시스템

2025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을 성별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57.1%, 남성이 42.9%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전문학사/학사의 경우 여성이 54.0%, 남성이 46.0%로 나타났고, 석사는 여성이 59.8%, 남성이 40.2%로 나타났다. 박사의 경우 여성이 51.8%, 남성이 48.2%로 다른 학위과정에 비해 성별 격차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학위과정의 경우 여성이 61.8%, 남성이 38.1%로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유학생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52.8%, 여성이 47.2%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위과정별로 비교해 보면, 전문학사/학사의 경우 남성이 2,444명(56.0%), 여성이 1,924명(44.0%)으로 남성이 더 많았던 반면, 석사는 여성이

500명(50.3%), 남성이 494명(49.7%)으로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유학생은 남성이 509명(54.7%), 여성이 422명(45.3%)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으며, 비학위과정은 여성이 1,235명(52.4%)으로 남성(1,122명, 47.6%)보다 조금 더 많았다.

[표 3-5] 시도별 학위과정별 성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단위: 명

	계		전문학사/학사		석사		박사		비학위과정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국	108,795	144,639	55,301	64,849	16,607	24,671	8,565	9,197	28,322	45,922
서울특별시	24,793	58,118	10,312	24,149	5,272	12,238	2,058	3,165	7,151	18,566
부산광역시	8,635	9,995	4,846	4,337	1,189	1,526	580	608	2,020	3,524
대구광역시	3,079	4,378	1,361	1,762	260	494	241	213	1,217	1,909
인천광역시	2,236	3,204	1,154	1,724	352	430	86	103	644	947
광주광역시	3,142	3,498	1,091	1,387	512	495	328	243	1,211	1,373
대전광역시	6,241	7,237	2,779	3,116	842	841	830	627	1,790	2,653
울산광역시	737	596	281	194	90	73	154	82	212	247
세종특별자치시	622	547	349	278	155	193	23	11	95	65
경기도	22,754	26,286	12,405	12,972	2,791	3,581	1,565	1,733	5,993	8,000
강원특별자치도	4,113	3,452	2,732	1,991	414	475	314	314	653	672
충청북도	6,386	4,151	4,081	2,038	962	878	320	280	1,023	955
충청남도	7,056	6,815	3,484	2,933	1,352	1,124	430	369	1,790	2,389
전북특별자치도	4,569	4,081	2,444	1,924	494	500	509	422	1,122	1,235
전라남도	2,812	2,314	1,254	966	475	423	441	400	642	525
경상북도	8,909	7,200	5,602	4,063	1,047	992	439	423	1,821	1,722
경상남도	2,047	2,115	838	739	273	293	187	146	749	937
제주특별자치도	664	652	288	276	127	115	60	58	189	20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 KESS 교육통계시스템

### ■ 전북특별자치도 대학별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2024년 기준 도청 내부 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3,09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2,740명, 우즈베키스탄 711명, 몽골 460명, 네팔 385명, 미얀마 284명, 방글라데시 22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국가별로 대학분포를 확인하면, 베트남의 경우 호원대에 28.0%가 분포하여 가장 많았으며, 전주비전대와 전주기전대가 각각 14.0%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우석대(33.5%), 전북대(30.4%)에 과반이 넘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우석대에 29.3%, 전북대에 24.8%가 재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국가의 경우 특정대학에 대다수가 분포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얀마의 경우 전체 284명의 유학생 중 77.5%인 220명이 전주비전대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네팔은 385명의 유학생 중 90.6%인 349명이 예원예술대에 재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는 79.7%가 전북대, 인도네시아는 79.4%가 전북대, 키르키즈스탄은 71.9%가 예원예술대, 파키스탄은 70.4%가 전북대에 재학하고 있었다.

[표 3-6] 대학별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4년)

단위: 명

대학명	계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키르키즈스탄	일본	대만	기타
계	8,441	3,098	2,740	711	460	284	385	222	54	34	32	30	19	372
전북대	1,879	186	832	176	114	23	32	177	38	27	8	14	14	238
우석대	1,310	98	919	208	69	0	0	6	0	0	0	1	4	5
호원대	1,050	866	33	137	2	0	0	1	0	0	0	0	0	11
예원예술대	827	100	5	127	159	8	349	25	6	0	23	0	0	25
국립군산대	767	63	653	5	10	1	1	5	8	3	0	4	0	14
전주비전대	667	364	0	2	66	220	0	6	0	0	0	0	0	9
군장대	495	433	7	37	0	0	1	0	0	3	1	0	0	13
전주대	489	219	214	6	10	30	0	0	0	0	0	1	0	9
전주기전대	441	434	3	0	1	1	0	0	0	0	0	1	0	1
전북과학대	171	163	3	0	1	0	1	0	0	1	0	0	0	2
한일장신대	141	139	0	0	0	0	0	0	2	0	0	0	0	0
원광대	116	30	47	13	16	1	0	2	0	0	0	0	0	7
원광보건대	24	3	4	0	12	0	0	0	0	0	0	0	0	5
기타	64	0	20	0	0	0	1	0	0	0	0	9	1	33

자료: 전북특별자치도청 내부자료

## 2.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sup>1)</sup>

### ■ 외국인 유학생 인적특성별 현황

2025년 전북자치도의 학위과정을 외국인 유학생은 남성이 3,341명(55.0%), 여성이 2,729명(45.0%)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 별로 살펴보면 전주시의 경우 남성(50.7%)과 여성(49.3%)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61.6%), 완주군(57.5%), 임실군(63.2%)은 남성이 절반 이상, 익산시(54.6%), 정읍시(65.8%)는 여성이 절반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그림 3-4] 시군별 성별 유학생 수(2025년)

2025년 전북자치도의 연령대별 외국인 유학생을 분석한 결과, 20~24세가 56.0% (3,401명)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25~29세는 20.2%(1,225명), 20세 미만은 13.9%(843명), 30~34세는 5.7%(346명), 35~39세는 2.4%(147명), 40세 이상은 1.8%(10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외국인 유학생 중 20세 미만 비중이 군산시(19.4%)와 완주군(26.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정읍시의 경우 전체 유학생 중 20~24세 연령대가 88.6%에 육박하였다. 임실군은 25~29세가 48.3%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의 경우 30~34세 12.7%, 35~39세 4.9%, 40세 이상 7.8%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유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활용하여 재분석한 데이터로, 분석대상은 학위과정 유학생임

[표 3-7] 시군별 연령대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단위: 명, %

	전체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북자치도	6,070	843	13.9	3,401	56.0	1,225	20.2	346	5.7	147	2.4	108	1.8
전주시	2,353	101	4.3	1,434	60.9	608	25.8	136	5.8	48	2.0	26	1.1
군산시	1,865	361	19.4	1,097	58.8	270	14.5	75	4.0	46	2.5	16	0.9
익산시	425	42	9.9	155	36.5	120	28.2	54	12.7	21	4.9	33	7.8
정읍시	79	1	1.3	70	88.6	1	1.3	1	1.3	2	2.5	4	5.1
완주군	1,261	337	26.7	608	48.2	184	14.6	73	5.8	30	2.4	29	2.3
임실군	87	1	1.1	37	42.5	42	48.3	7	8.0	0	0.0	0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2025년 기준 학위과정에 있는 전국의 외국인 유학생 170,64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7,645명(45.5%)의 출신대륙은 동북아시아이며 동남아시아 48,745(28.6%), 서남아시아·태평양 19,283명(11.3%), 러시아·중앙아시아 17,721명(10.4%), 아프리카 2,300명(1.3%), 유럽 2,219명(1.3%), 북미 1,499명(0.9%), 중남미 679명(0.4%), 중동 554명(0.3%)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대륙이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전체 유학생의 67.6%), 서울(전체 유학생의 63.0%)이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대전(48.1%), 충남(43.4%), 대구(40.1%), 광주(39.8%), 전남(38.5%)에서 전체 유학생 중 해당 대륙 출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서남아시아·태평양 대륙 출신 유학생은 전국적으로는 전체 유학생의 11.3%에 불과하였으나 제주의 경우 전체 유학생의 49.4%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울산이 39.2%로 뒤를 이었다. 러시아·중앙아시아는 충북이 25.2%, 인천이 21.6%로 나타나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해당 출신대륙 유학생의 비중이 높았으며 아프리카의 경우 세종이 8.4%로 높은 편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학위과정 유학생 6,070명 중 43.3%(2,626명)는 동북아시아 대륙 출신이었으며, 동남아시아 33.2%(2,016명), 러시아·중앙아시아 13.0%(789명), 서남아시아·태평양 9.0%(546명), 북미 0.5%(30명), 아프리카 0.5%(29명), 중남미 0.2%(14명), 유럽 0.2%(11명), 중동 0.1%(9명) 순으로 유학생 출신대륙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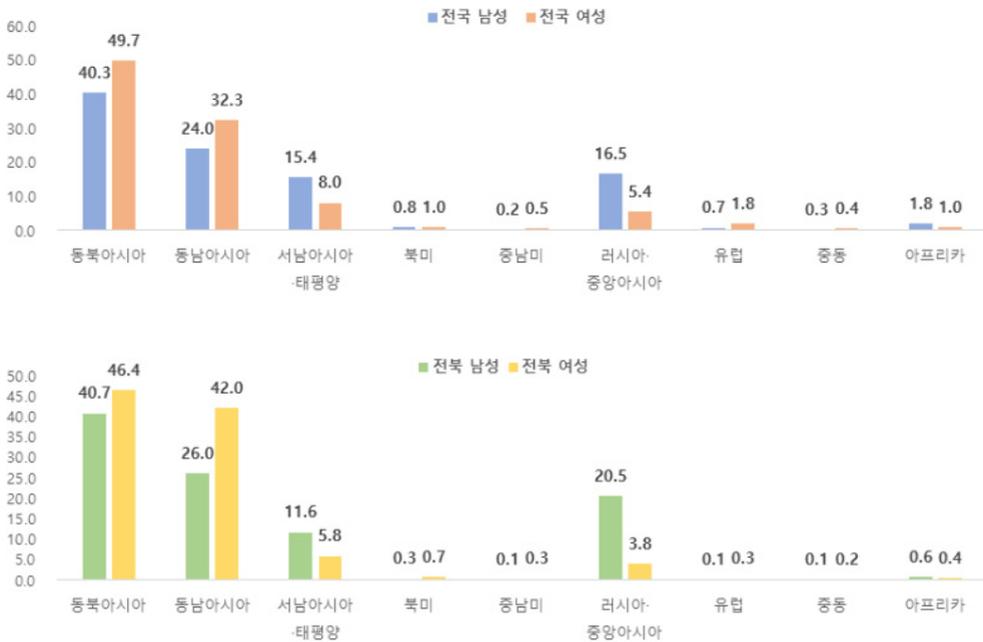
[표 3-8] 시도별 출신대륙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동북 아시아	동남 아시아	서남아시아 ·태평양	북미	중남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체	명	170,645	77,645	48,745	19,283	1,499	679	17,721	2,219	554	2,300
	%	100.0	45.5	28.6	11.3	0.9	0.4	10.4	1.3	0.3	1.3
서울	명	53,480	33,703	9,556	3,671	1,059	313	2,698	1,365	265	850
	%	100.0	63.0	17.9	6.9	2.0	0.6	5.0	2.6	0.5	1.6
부산	명	12,743	3,016	4,363	3,428	34	56	1,602	98	23	123
	%	100.0	23.7	34.2	26.9	0.3	0.4	12.6	0.8	0.2	1.0
대구	명	4,115	1,561	1,649	361	19	34	341	44	13	93
	%	100.0	37.9	40.1	8.8	0.5	0.8	8.3	1.1	0.3	2.3
인천	명	3,684	1,659	751	218	61	26	797	89	31	52
	%	100.0	45.0	20.4	5.9	1.7	0.7	21.6	2.4	0.8	1.4
광주	명	3,906	1,688	1,554	276	12	6	294	22	7	47
	%	100.0	43.2	39.8	7.1	0.3	0.2	7.5	0.6	0.2	1.2
대전	명	8,492	1,965	4,086	966	63	61	867	222	40	222
	%	100.0	23.1	48.1	11.4	0.7	0.7	10.2	2.6	0.5	2.6
울산	명	829	90	199	325	6	7	116	36	8	42
	%	100.0	10.9	24.0	39.2	0.7	0.8	14.0	4.3	1.0	5.1
세종	명	977	660	81	73	4	22	17	7	31	82
	%	100.0	67.6	8.3	7.5	0.4	2.3	1.7	0.7	3.2	8.4
경기	명	33,366	14,795	10,377	4,038	93	52	3,495	223	68	225
	%	100.0	44.3	31.1	12.1	0.3	0.2	10.5	0.7	0.2	0.7
강원	명	6,062	1,985	2,062	1,347	17	14	454	6	9	168
	%	100.0	32.7	34.0	22.2	0.3	0.2	7.5	0.1	0.1	2.8
충북	명	8,390	3,608	1,602	969	13	14	2,114	19	7	44
	%	100.0	43.0	19.1	11.5	0.2	0.2	25.2	0.2	0.1	0.5
충남	명	9,235	2,515	4,012	1,023	34	30	1,469	21	16	115
	%	100.0	27.2	43.4	11.1	0.4	0.3	15.9	0.2	0.2	1.2
전북	명	6,070	2,626	2,016	546	30	14	789	11	9	29
	%	100.0	43.3	33.2	9.0	0.5	0.2	13.0	0.2	0.1	0.5
전남	명	3,797	1,237	1,460	630	4	2	446	4	1	13
	%	100.0	32.6	38.5	16.6	0.1	0.1	11.7	0.1	0.0	0.3
경북	명	12,256	5,312	3,907	758	32	18	2,016	35	16	162
	%	100.0	43.3	31.9	6.2	0.3	0.1	16.4	0.3	0.1	1.3
경남	명	2,413	983	937	244	11	7	178	12	10	31
	%	100.0	40.7	38.8	10.1	0.5	0.3	7.4	0.5	0.4	1.3
제주	명	830	242	133	410	7	3	28	5	0	2
	%	100.0	29.2	16.0	49.4	0.8	0.4	3.4	0.6	0.0	0.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전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성별 출신대륙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전국과 전북을 비교하면 전북이 전국보다 러시아·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대륙 출신 유학생의 비중이 높고, 서남아시아·태평양 대륙 출신 유학생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전북이 전국보다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 비중이 10%p나 높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그림 3-5] 전국 및 전북 성별 외국인유학생 출신대륙(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대륙을 비교해보면, 전주시의 경우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42.5%, 서남아시아·태평양 출신 유학생이 12.6%로 타 시군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군산시는 러시아·중앙아시아의 비중이 22.8%로 전북자치도 평균보다 10%p 높았다. 익산시의 경우 동남아시아(39.5%), 서남아시아·태평양(13.6%), 북미 (3.3%) 출신 유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정읍은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전체의 88.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완주군 역시 동북아시아 출신 유학생 비중이 79.9%로 매우 높았으며 임실은 러시아·중앙아시아 대륙 출신이 33.3%로 높게 나타났다.

[표 3-9] 시군별 출신대륙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동북 아시아	동남 아시아	서남아시아 ·태평양	북미	중남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체	명	170,645	77,645	48,745	19,283	1,499	679	17,721	2,219	554	2,300
	%	100.0	45.5	28.6	11.3	0.9	0.4	10.4	1.3	0.3	1.3
전북	명	6,070	2,626	2,016	546	30	14	789	11	9	29
	%	100.0	43.3	33.2	9.0	0.5	0.2	13.0	0.2	0.1	0.5
전주	명	2353	826	1001	296	12	11	166	6	9	26
	%	100.0	35.1	42.5	12.6	0.5	0.5	7.1	0.3	0.4	1.1
군산	명	1865	594	704	135	3	1	426	0	0	2
	%	100.0	31.8	37.7	7.2	0.2	0.1	22.8	0.0	0.0	0.1
익산	명	425	162	168	58	14	1	16	5	0	1
	%	100.0	38.1	39.5	13.6	3.3	0.2	3.8	1.2	0.0	0.2
정읍	명	79	6	70	1	1	1	0	0	0	0
	%	100.0	7.6	88.6	1.3	1.3	1.3	0.0	0.0	0.0	0.0
완주	명	1261	1008	49	52	0	0	152	0	0	0
	%	100.0	79.9	3.9	4.1	0.0	0.0	12.1	0.0	0.0	0.0
임실	명	87	30	24	4	0	0	29	0	0	0
	%	100.0	34.5	27.6	4.6	0.0	0.0	33.3	0.0	0.0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전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국적 상위 10개국을 확인해 본 결과, 전국의 경우 중국이 37.3%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3.3%, 우즈베키스탄 7.9%, 네팔 7.3%, 몽골 5.9%, 미얀마 2.5%, 방글라데시 1.7%, 일본 1.5%, 인도네시아 1.0%, 파키스탄 0.9%, 기타국가 10.4%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국과 비교하여 상위 3개국에 비중이 더욱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이 39.1%, 베트남 28.0%, 우즈베키스탄 12.5%로 3개국 유학생의 비중이 79.6%로 전국(68.5%)보다 10%p 이상 비중이 높았다. 그 외에 미얀마 3.9%, 몽골 3.8%, 방글라데시 3.3%, 네팔 3.2%, 파키스탄 0.9%, 인도 0.8%, 스리랑카 0.5% 순이었으며 기타국가는 3.9%로 나타났다.

전국		전북특별자치도	
1순위	중국 (37.3%)	1순위	중국 (39.1%)
2순위	베트남 (23.3%)	2순위	베트남 (28.0%)
3순위	우즈베키스탄 (7.9%)	3순위	우즈베키스탄 (12.5%)
4순위	네팔 (7.3%)	4순위	미얀마 (3.9%)
5순위	몽골 (5.9%)	5순위	몽골 (3.8%)
6순위	미얀마 (2.5%)	6순위	방글라데시 (3.3%)
7순위	방글라데시 (1.7%)	7순위	네팔 (3.2%)
8순위	일본 (1.5%)	8순위	파키스탄 (0.9%)
9순위	인도네시아 (1.0%)	9순위	인도 (0.8%)
10순위	파키스탄 (0.9%)	10순위	스리랑카 (0.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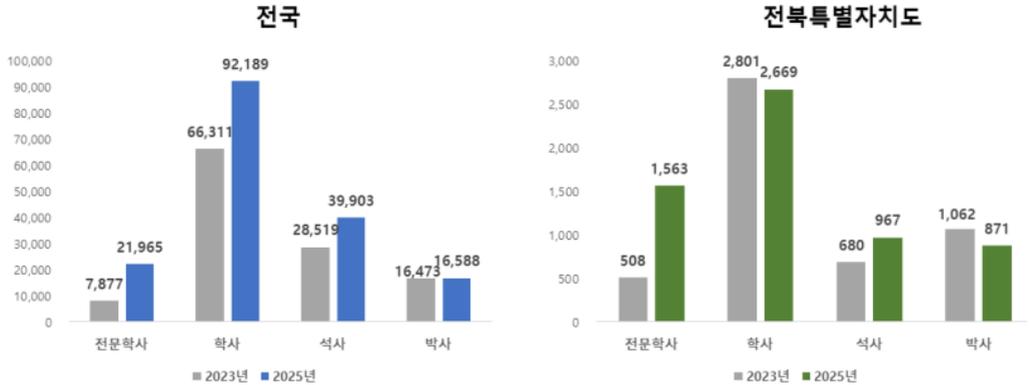
[그림 3-6]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상위국적(2025년)

### ■ 외국인 유학생 학업 현황

2023년 대비 2025년 전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학사부터 박사까지 전 학위과정에서 증가하였다. 가장 큰 증가는 학사학위과정에서 나타났으며 2025년 유학생은 92,189명으로 2023년 대비 25,87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였다. 전문학사는 2025년 기준 21,965명으로 2023년 대비 14,088명이 증가하였으며, 석사는 2023년 대비 11,384명 증가하여 2025년 기준 39,903명으로 나타났다. 박사는 2023년 대비 2025년 115명이 증가한 16,588명으로 다른 학위과정에 비해 큰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은 2023년 대비 2025년 유학생이 전문학사와 석사는 증가하였으나 학사와 박사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학사의 경우 2023

년 508명에서 2025년 1,56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석사학위 유학생은 2025년 967명으로 2023년 대비 287명이 증가하였다. 학사학위 유학생의 경우 2025년 2,669명으로 2023년(2,801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박사학위 유학생 역시 2023년 1,062명 대비 2025년 871명으로 191명 감소하였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그림 3-7] 전국 및 전북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추이(2023년 vs 2025년)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을 분석한 결과, 전주 시의 경우 학사의 비중이 다소 낮고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학사부터 박사까지 전 학위과정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었다. 군산시의 경우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전문학사 비중이 39.5%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문학사와 학사 학위 비중이 81.4%로 나타난 반면 익산시의 경우 전체 유학생 중 석사 학위과정 비중이 47.8%로 가장 높아 석사와 박사 학위 비중이 62.9%로 나타났다. 완주군의 경우 학사 학위과정 유학생이 69.9%로 가장 높았다.

[표 3-10] 시군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단위: 명, %

	전체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명	명	%	명	%	명	%	명	%	
전북자치도	6,070	1,563	25.7	2,669	44.0	967	15.9	871	14.3	
전주시	2,353	689	29.3	821	34.9	441	18.7	402	17.1	
군산시	1,865	736	39.5	781	41.9	104	5.6	244	13.1	
익산시	425	59	13.9	99	23.3	203	47.8	64	15.1	
정읍시	79	79	100.0	0	0.0	0	0.0	0	0.0	
완주군	1,261	0	0.0	881	69.9	219	17.4	161	12.8	
임실군	87	0	0.0	87	100.0	0	0.0	0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을 분석한 결과, 사회계열 전공자가 77,288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5.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학계열이 29,652명으로 17.4%, 인문계열 25,714명(15.1%), 예체능계열 21,716명(12.7%), 자연계열 7,413명(4.3%), 교육계열 4,446명(2.6%), 의약계열 3,324명(1.9%), 무전공 1,09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공학계열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48.0%), 경남(34.5%), 대전(3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도 29.4%로 높은 편이었다. 교육계열의 경우 전체 유학생의 2.6%만이 전공하고 있었으나 광주(15.0%)와 전남(12.4%)에서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의약계열 역시 전체 유학생 중 1.9%만이 전공하고 있으나 경북의 경우 6.7%가 전공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사회계열은 제주(62.2%), 세종(53.8%), 서울(52.2%) 지역에서 전체 유학생 중 해당 전공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 예체능 계열은 강원이 19.2%로 타 지역보다 예체능 전공 유학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인문계열은 충남(20.4%)과 인천(18.1%), 충북(18.0%)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울산(4.7%)에서는 타 지역보다 해당 전공자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자연계열의 경우 울산(11.7%)과 제주(11.0%)에서 비중이 높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사회계열 전공자가 34.9%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29.4%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예체능계열(17.3%), 인문계열(8.0%), 자연계열(4.0%), 의약계열(3.0%), 교육계열(2.7%), 무전공(0.8%) 순으로 유학생 전공 비중이 나타났다.

[표 3-11] 시도별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공학계열	교육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무전공
전체	명	170,645	29,652	4,446	77,288	21,716	3,324	25,714	7,413	1,092
	%	100.0	17.4	2.6	45.3	12.7	1.9	15.1	4.3	0.6
서울	명	53,480	5,104	998	27,938	7,302	607	9,181	1,986	364
	%	100.0	9.5	1.9	52.2	13.7	1.1	17.2	3.7	0.7
부산	명	12,743	2,498	260	6,612	1,081	141	1,816	307	28
	%	100.0	19.6	2.0	51.9	8.5	1.1	14.3	2.4	0.2
대구	명	4,115	1,158	350	1,526	321	146	269	345	0
	%	100.0	28.1	8.5	37.1	7.8	3.5	6.5	8.4	0.0
인천	명	3,684	650	38	1,770	132	87	665	154	188
	%	100.0	17.6	1.0	48.0	3.6	2.4	18.1	4.2	5.1
광주	명	3,906	491	584	1,573	497	83	436	211	31
	%	100.0	12.6	15.0	40.3	12.7	2.1	11.2	5.4	0.8
대전	명	8,492	2,729	66	3,245	914	114	681	609	134
	%	100.0	32.1	0.8	38.2	10.8	1.3	8.0	7.2	1.6
울산	명	829	398	5	248	19	21	39	97	2
	%	100.0	48.0	0.6	29.9	2.3	2.5	4.7	11.7	0.2
세종	명	977	103	0	526	157	8	103	80	0
	%	100.0	10.5	0.0	53.8	16.1	0.8	10.5	8.2	0.0
경기	명	33,366	6,670	631	13,148	5,453	411	5,666	1,355	32
	%	100.0	20.0	1.9	39.4	16.3	1.2	17.0	4.1	0.1
강원	명	6,062	774	44	2,759	1,165	145	699	453	23
	%	100.0	12.8	0.7	45.5	19.2	2.4	11.5	7.5	0.4
충북	명	8,390	2,056	143	3,314	1,075	62	1,514	223	3
	%	100.0	24.5	1.7	39.5	12.8	0.7	18.0	2.7	0.0
충남	명	9,235	2,102	363	3,335	843	240	1,882	470	0
	%	100.0	22.8	3.9	36.1	9.1	2.6	20.4	5.1	0.0
전북	명	6,070	1,785	161	2,117	1,050	182	486	242	47
	%	100.0	29.4	2.7	34.9	17.3	3.0	8.0	4.0	0.8
전남	명	3,797	542	469	1,938	167	139	307	165	70
	%	100.0	14.3	12.4	51.0	4.4	3.7	8.1	4.3	1.8
경북	명	12,256	1,676	308	5,948	1,272	816	1,655	442	139
	%	100.0	13.7	2.5	48.5	10.4	6.7	13.5	3.6	1.1
경남	명	2,413	833	21	775	214	111	262	183	14
	%	100.0	34.5	0.9	32.1	8.9	4.6	10.9	7.6	0.6
제주	명	830	83	5	516	54	11	53	91	17
	%	100.0	10.0	0.6	62.2	6.5	1.3	6.4	11.0	2.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로 외국인의 전공계열을 비교해보면, 전주시는 공학계열에 전체 유학생의 40.4%가, 군산시는 공학계열에 전체 유학생의 40.1%가 분포되어 있어 전북 평균보다 20%p 이상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주군의 경우 사회계열 전공자가 전체 유학생의 63.5%로 편중되어 있으며 익산시 역시 53.2%가 사회계열을 전공하고 있고 8.2%는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해당 전공 유학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의 경우 인문계열에 전체 유학생의 69.6%가 분포되어 있고, 의약계열에도 10.1%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임실군의 경우 전체 외국인 유학생이 예체능 계열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시군별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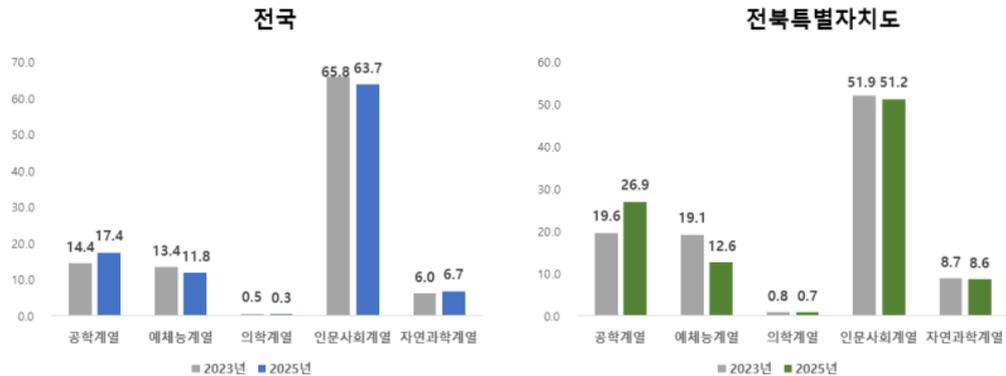
지역		전체	공학계열	교육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무전공
전체	명	170,645	29,652	4,446	77,288	21,716	3,324	25,714	7,413	1,092
	%	100.0	17.4	2.6	45.3	12.7	1.9	15.1	4.3	0.6
전북	명	6,070	1,785	161	2,117	1,050	182	486	242	47
	%	100.0	29.4	2.7	34.9	17.3	3.0	8.0	4.0	0.8
전주	명	2,353	950	78	599	319	74	184	148	1
	%	100.0	40.4	3.3	25.5	13.6	3.1	7.8	6.3	0.0
군산	명	1,865	748	25	488	353	44	151	56	0
	%	100.0	40.1	1.3	26.2	18.9	2.4	8.1	3.0	0.0
익산	명	425	13	6	226	96	35	39	10	0
	%	100.0	3.1	1.4	53.2	22.6	8.2	9.2	2.4	0.0
정읍	명	79	1	0	3	9	8	55	3	0
	%	100.0	1.3	0.0	3.8	11.4	10.1	69.6	3.8	0.0
완주	명	1,261	73	52	801	186	21	57	25	46
	%	100.0	5.8	4.1	63.5	14.8	1.7	4.5	2.0	3.6
임실	명	87	0	0	0	87	0	0	0	0
	%	10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교육부에서 분류하는 5대 전공계열을 기준으로 전국 외국인 유학생의 2023년 대비 2025년 전공 비중을 비교해보면,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을 제외한 전공계열에서 유학생 비중이 감소하였다. 공학계열은 2025년 전공자 비중이 17.4%로 2023년 대비 3.5%p 증가하고, 자연과학계열은 동기간 0.7%p가 증가한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2.1%p, 예체능계열은 1.6%p 의학계열은 0.2%p가 감소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동기간 공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의 5대 전공계열 중 2023년 대비 2025년 비중이 늘어난 전공계열은 공학계열이며 의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이 비슷한 수준,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공학계열은 2025년 전체 유학생의 26.9%가 분포하여 2023년 대비 7.3%p가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예체능계열은 6.5%p, 인문사회계열은 0.7%p 감소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첨단·미래 신산업 분야 및 지역의 뿌리산업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 및 육성하고자 하는 현재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변화임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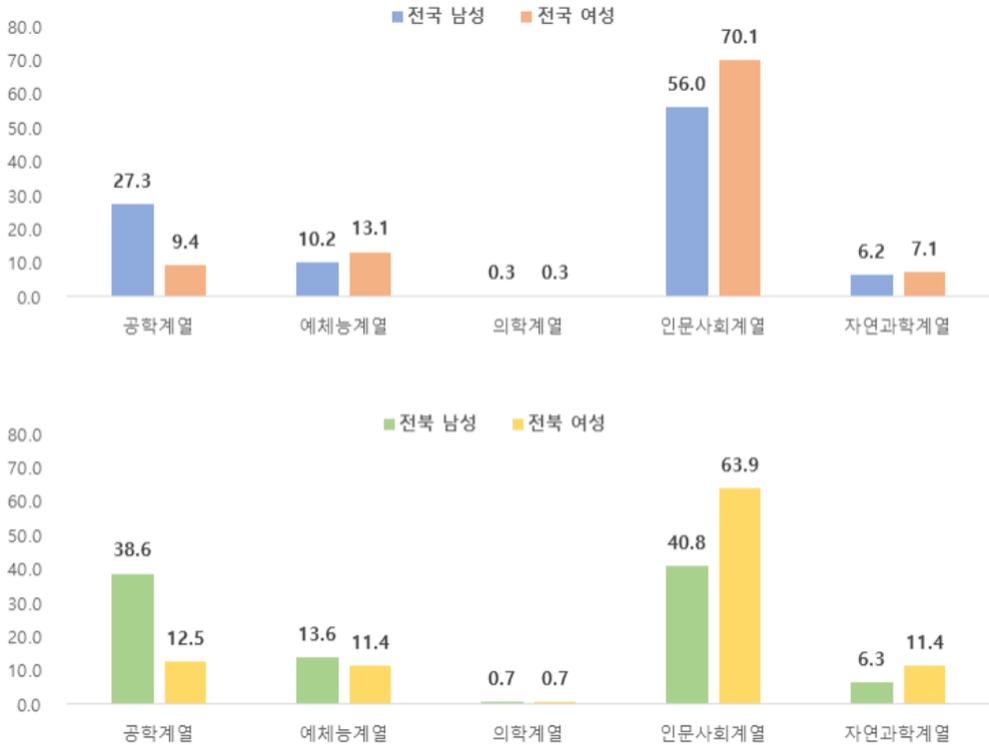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그림 3-8] 전국 및 전북 교육부 5대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추이(2023년 vs 2025년)

전공계열을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전국은 공학계열의 경우 남성 유학생 중 27.3%(20,943명), 여성 유학생 중 9.4%(8,798명)가 전공하고 있어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여성 유학생 중 전공자가 70.1%(65,851명), 남성 유학생 중 전공자가 56.0%(42,926명)로 나타나 여성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의학계열은 성별 간 비중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체능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남성은 유학생의 38.6%가 공학계열을 전공하는 반면 여성은 12.5%만이 분포하고 있었고,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남성은 40.8%에 불과한 반면 여

성은 63.9%가 전공하여 두 계열의 성별 격차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과 마찬가지로 의학계열에서의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예체능 계열은 남성이 13.6%, 여성이 11.4%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여성이 11.4%로 남성(6.3%)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그림 3-9] 성별 교육부 5대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비중

2025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구분을 살펴보면, 신입학이 전체의 90.9%(155,108명), 편입학이 9.1%(15,466명), 재입학이 0.0%(71명)으로 나타난다.

17개 시도별로 외국인 유학생의 신입학/편입학/재입학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울산(97.7%)과 전남(97.7%)은 타 지역에 비해 신입학 비중이 높은 편이며, 경북(23.3%), 충북(19.7%), 광주(17.3%)는 재입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93.9%(5,699명)가 신입학이며 편입학

은 6.1%(370명), 재입학은 0.0%(1명)로 나타났다.

[표 3-13]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입학구분(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체	명	170,645	155,108	15,466	71
	%	100.0	90.9	9.1	0.0
서울	명	53,480	49,594	3,839	47
	%	100.0	92.7	7.2	0.1
부산	명	12,743	11,784	955	4
	%	100.0	92.5	7.5	0.0
대구	명	4,115	3,722	393	0
	%	100.0	90.4	9.6	0.0
인천	명	3,684	3,534	150	0
	%	100.0	95.9	4.1	0.0
광주	명	3,906	3,229	674	3
	%	100.0	82.7	17.3	0.1
대전	명	8,492	8,033	456	3
	%	100.0	94.6	5.4	0.0
울산	명	829	810	18	1
	%	100.0	97.7	2.2	0.1
세종	명	977	946	29	2
	%	100.0	96.8	3.0	0.2
경기	명	33,366	30,569	2,795	2
	%	100.0	91.6	8.4	0.0
강원	명	6,062	5,820	242	0
	%	100.0	96.0	4.0	0.0
충북	명	8,390	6,740	1,649	1
	%	100.0	80.3	19.7	0.0
충남	명	9,235	8,648	583	4
	%	100.0	93.6	6.3	0.0
전북	명	6,070	5,699	370	1
	%	100.0	93.9	6.1	0.0
전남	명	3,797	3,710	87	0
	%	100.0	97.7	2.3	0.0
경북	명	12,256	9,402	2,852	2
	%	100.0	76.7	23.3	0.0
경남	명	2,413	2,069	344	0
	%	100.0	85.7	14.3	0.0
제주	명	830	799	30	1
	%	100.0	96.3	3.6	0.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별로는 정읍과 임실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신입학 비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편입학 비율이 높은 지역은 완주(10.3%)와 익산(9.9%)이었다.

[표 3-14]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 입학구분(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체	명	170,645	155,108	15,466	71
	%	100.0	90.9	9.1	0.0
전북	명	6,070	5,699	370	1
	%	100.0	93.9	6.1	0.0
전주	명	2,353	2,257	96	0
	%	100.0	95.9	4.1	0.0
군산	명	1,865	1,762	102	1
	%	100.0	94.5	5.5	0.1
익산	명	425	383	42	0
	%	100.0	90.1	9.9	0.0
정읍	명	79	79	0	0
	%	100.0	100.0	0.0	0.0
완주	명	1,261	1,131	130	0
	%	100.0	89.7	10.3	0.0
임실	명	87	87	0	0
	%	100.0	100.0	0.0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방식은 주간이 93.4%(159,339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야간 5.7%(9,701명), 원격 0.9%(1,592명), 계절제 0.0%(13명)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방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울산(99.8%)과 강원(99.6%), 충북(98.3%)은 주간수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야간수업의 경우 제주가 15.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충남(13.7%), 전남(12.5%) 순으로 야간수업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원격수업은 서울(2.3%)과 충남(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97.2%(5,902명)가 주간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비해 주간수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수업 2.0%(123명), 원격수업 0.7%(45명)이었고, 계절제수업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은 없었다.

[표 3-15]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업방식(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주간	야간	원격	계절제
전체	명	170,645	159,339	9,701	1,592	13
	%	100.0	93.4	5.7	0.9	0.0
서울	명	53,480	48,406	3,870	1,204	0
	%	100.0	90.5	7.2	2.3	0.0
부산	명	12,743	12,388	300	54	1
	%	100.0	97.2	2.4	0.4	0.0
대구	명	4,115	3,951	114	50	0
	%	100.0	96.0	2.8	1.2	0.0
인천	명	3,684	3,332	352	0	0
	%	100.0	90.4	9.6	0.0	0.0
광주	명	3,906	3,588	318	0	0
	%	100.0	91.9	8.1	0.0	0.0
대전	명	8,492	8,120	360	11	1
	%	100.0	95.6	4.2	0.1	0.0
울산	명	829	827	2	0	0
	%	100.0	99.8	0.2	0.0	0.0
세종	명	977	901	76	0	0
	%	100.0	92.2	7.8	0.0	0.0
경기	명	33,366	31,629	1,729	8	0
	%	100.0	94.8	5.2	0.0	0.0
강원	명	6,062	6,040	22	0	0
	%	100.0	99.6	0.4	0.0	0.0
충북	명	8,390	8,246	138	0	6
	%	100.0	98.3	1.6	0.0	0.1
충남	명	9,235	7,787	1,269	177	2
	%	100.0	84.3	13.7	1.9	0.0
전북	명	6,070	5,902	123	45	0
	%	100.0	97.2	2.0	0.7	0.0
전남	명	3,797	3,322	474	0	1
	%	100.0	87.5	12.5	0.0	0.0
경북	명	12,256	11,893	318	43	2
	%	100.0	97.0	2.6	0.4	0.0
경남	명	2,413	2,305	108	0	0
	%	100.0	95.5	4.5	0.0	0.0
제주	명	830	702	128	0	0
	%	100.0	84.6	15.4	0.0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시군별로 살펴보면, 군산시는 야간수업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4.3%로 타 지역보다 높았고, 익산시는 원격수업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10.6%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지역들은 주간수업을 듣는 유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정읍과 임실의 경우 전체 외국인 유학생이 모두 주간수업을 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6]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 수업방식(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주간	야간	원격	계절제
전체	명	170,645	159,339	9,701	1,592	13
	%	100.0	93.4	5.7	0.9	0.0
전북	명	6,070	5,902	123	45	0
	%	100.0	97.2	2.0	0.7	0.0
전주	명	2,353	2,321	32	0	0
	%	100.0	98.6	1.4	0.0	0.0
군산	명	1,865	1,784	81	0	0
	%	100.0	95.7	4.3	0.0	0.0
익산	명	425	380	0	45	0
	%	100.0	89.4	0.0	10.6	0.0
정읍	명	79	79	0	0	0
	%	100.0	100.0	0.0	0.0	0.0
완주	명	1,261	1,251	10	0	0
	%	100.0	99.2	0.8	0.0	0.0
임실	명	87	87	0	0	0
	%	100.0	100.0	0.0	0.0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형태는 자비가 94.0%(160,361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초청 2.6%(4,405명), 우리정부초청 2.1%(3,666명), 기타 0.9%(1,600명), 자국정부파견 0.4%(6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유학형태를 비교해보면, 전체 유학생 중 대학초청이 2.6%에 불과한 것에 비해 울산은 대학초청이 55.7%에 육박하였으며 세종(13.3%)과 대구(11.8%)도 대학초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우리정부 초청은 대구(6.2%), 광주(5.0%)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국정부파견은 세종(3.2%)과 경남(2.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비유학의 경우 전남이 99.0%로 가장 높은 반면 대학초청 비중이 높은 울산은 37.5%에 불과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97.0%(5,890명)가 자비유학이었으며,

우리정부초청 1.4%(82명), 기타 1.6%(98명)으로 유학형태가 나타났다.

[표 3-17]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유학형태(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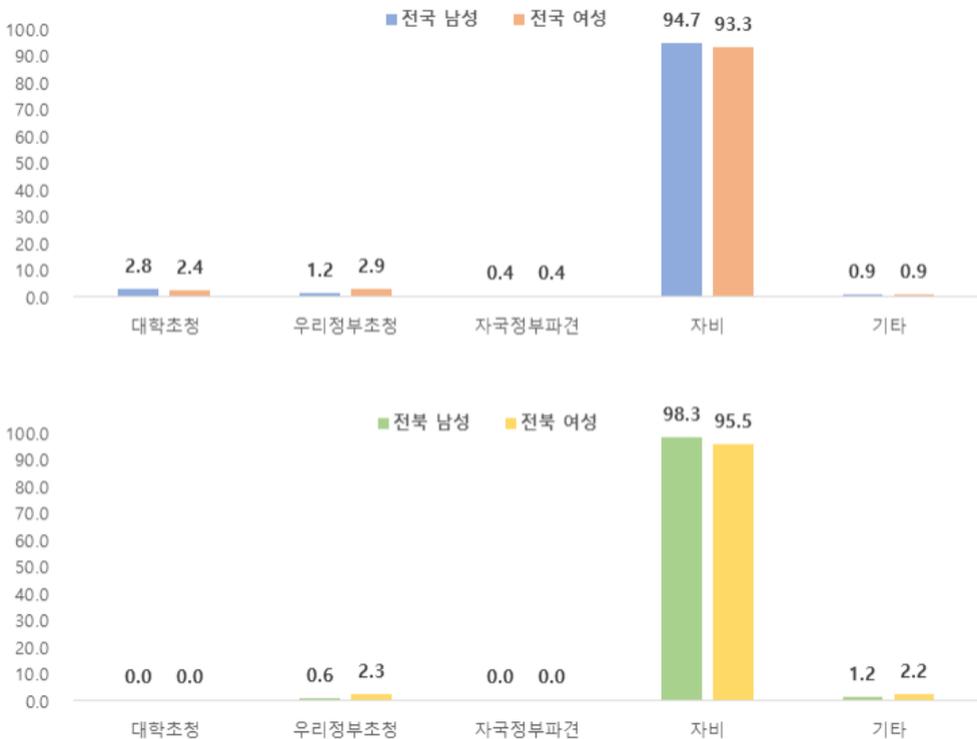
단위: 명, %

지역		전체	대학초청	우리정부초청	자국정부파견	자비	기타
전체	명	170,645	4,405	3,666	613	160,361	1,600
	%	100.0	2.6	2.1	0.4	94.0	0.9
서울	명	53,480	1,343	1,450	386	49,726	575
	%	100.0	2.5	2.7	0.7	93.0	1.1
부산	명	12,743	5	447	0	12,174	117
	%	100.0	0.0	3.5	0.0	95.5	0.9
대구	명	4,115	486	256	0	3,369	4
	%	100.0	11.8	6.2	0.0	81.9	0.1
인천	명	3,684	26	34	32	3,563	29
	%	100.0	0.7	0.9	0.9	96.7	0.8
광주	명	3,906	51	197	1	3,655	2
	%	100.0	1.3	5.0	0.0	93.6	0.1
대전	명	8,492	837	193	11	7,374	77
	%	100.0	9.9	2.3	0.1	86.8	0.9
울산	명	829	462	14	0	311	42
	%	100.0	55.7	1.7	0.0	37.5	5.1
세종	명	977	130	25	31	721	70
	%	100.0	13.3	2.6	3.2	73.8	7.2
경기	명	33,366	597	338	73	32,317	41
	%	100.0	1.8	1.0	0.2	96.9	0.1
강원	명	6,062	148	113	0	5,798	3
	%	100.0	2.4	1.9	0.0	95.6	0.0
충북	명	8,390	41	60	14	8,031	244
	%	100.0	0.5	0.7	0.2	95.7	2.9
충남	명	9,235	106	215	0	8,903	11
	%	100.0	1.1	2.3	0.0	96.4	0.1
전북	명	6,070	0	82	0	5,890	98
	%	100.0	0.0	1.4	0.0	97.0	1.6
전남	명	3,797	2	32	0	3,760	3
	%	100.0	0.1	0.8	0.0	99.0	0.1
경북	명	12,256	162	122	0	11,835	137
	%	100.0	1.3	1.0	0.0	96.6	1.1
경남	명	2,413	9	85	65	2,116	138
	%	100.0	0.4	3.5	2.7	87.7	5.7
제주	명	830	0	3	0	818	9
	%	100.0	0.0	0.4	0.0	98.6	1.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자비유학 비중이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우리정부 초청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 데이터를 통해 보면, 남성의 경우 94.7%가 자비 유학이며, 대학초청은 2.8%, 우리정부초청은 1.2%인 반면, 여성의 경우 93.3%가 자비 유학이고, 대학초청은 2.4%, 우리정부초청은 2.9%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유학생 역시 성별로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성 유학생의 98.3%는 자비 유학생인 반면 여성은 95.5%로 자비 유학생의 비중이 약간 더 낮았고, 우리정부초청은 여성이 2.3%, 남성이 0.6%로 남성의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났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그림 3-10] 성별 유학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비중

## ■ 외국인 유학생 어학역량 및 생활환경 현황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연수과정 이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유학생 중 83.4%는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16.6%만이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곳은 경남(37.8%), 광주(30.3%), 대전(27.9%), 충남(27.6%) 등으로 나타난 반면 세종(0.7%), 울산(8.8%), 충북(10.0%) 등은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연수과정 이수율이 낮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6,070명의 학위과정 유학생 중 22.9%인 871명이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4.3%(4,511명)는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과정 이수여부(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이수하지 않음		이수함	
		명	%	명	%
전체	170,645	142,253	83.4	28,392	16.6
서울	53,480	47,464	88.8	6,016	11.2
부산	12,743	10,750	84.4	1,993	15.6
대구	4,115	3,277	79.6	838	20.4
인천	3,684	3,240	87.9	444	12.1
광주	3,906	2,721	69.7	1,185	30.3
대전	8,492	6,124	72.1	2,368	27.9
울산	829	756	91.2	73	8.8
세종	977	970	99.3	7	0.7
경기	33,366	27,801	83.3	5,565	16.7
강원	6,062	5,380	88.7	682	11.3
충북	8,390	7,554	90.0	836	10.0
충남	9,235	6,685	72.4	2,550	27.6
전북	6,070	4,511	74.3	1,559	25.7
전남	3,797	2,926	77.1	871	22.9
경북	12,256	9,898	80.8	2,358	19.2
경남	2,413	1,502	62.2	911	37.8
제주	830	694	83.6	136	16.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별로 유학생의 어학연수과정 이수여부를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연수과정 이수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정읍시에서 학위를 진행하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88.6%가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88.6%), 전주(36.3%), 군산(27.3%)은 전북 평균보다 어학연수 이수율이 높았으며 임실(3.4%), 익산(4.0%), 완주(8.5%)는 어학연수 이수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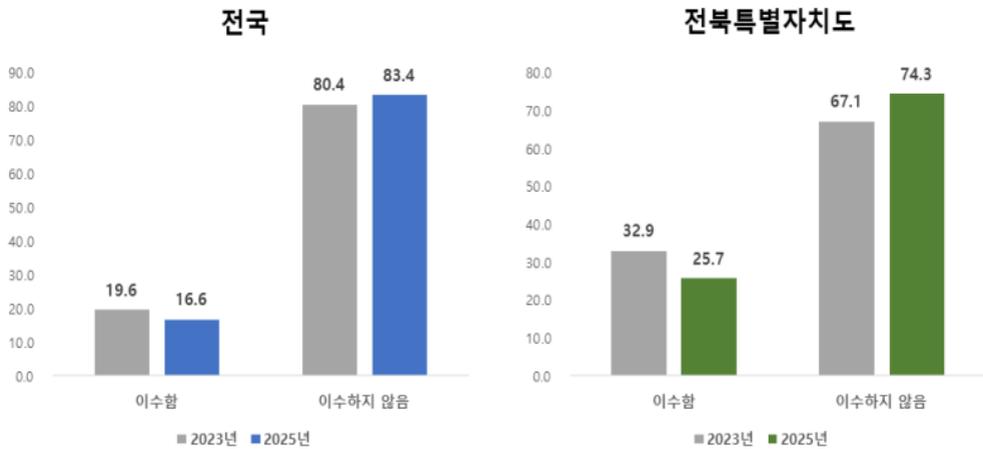
[표 3-19]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과정 이수여부(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이수하지 않음		이수함	
		명	%	명	%
전체	170,645	142,253	83.4	28,392	16.6
전북	6,070	4,511	74.3	1,559	25.7
전주	2,353	1,500	63.7	853	36.3
군산	1,865	1,356	72.7	509	27.3
익산	425	408	96.0	17	4.0
정읍	79	9	11.4	70	88.6
완주	1,261	1,154	91.5	107	8.5
임실	87	84	96.6	3	3.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2023년과 2025년의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과정 이수여부를 비교해 보면, 전국과 전북특별자치도 모두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연수과정 이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19.6%였던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연수과정 이수율이 2025년 16.6%로 약 3.0%p 감소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연수 이수율은 32.9%로 전국 대비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2025년 25.7%로 약 7.2%p 감소하여 동기간 전국의 감소분의 두 배 이상이 감소하였다.



주 : 2023년의 경우 어학연수과정 이수여부 응답이 필수응답 문항이 아니었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그림 3-11] 전국 및 전북 어학연수과정 이수여부 추이(2023년 vs 2025년)

2025년 기준 전국의 외국인 유학생 170,645명 중 83.9%인 143,176명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6.1%인 27,46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누어 보면, 17개 시도 중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이 높은 지역은 광주(32.1%), 세종(30.2%), 인천(27.3%) 등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10.2%), 부산(13.8%), 경기(14.6%) 등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중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은 20.8%로 전국 전체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보다는 높은 편이었으나 여전히 대다수인 4,808명(79.2%)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0]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여부(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기숙사 비거주		기숙사 거주	
		명	%	명	%
전체	170,645	143,176	83.9	27,469	16.1
서울	53,480	48,008	89.8	5,472	10.2
부산	12,743	10,983	86.2	1,760	13.8
대구	4,115	3,287	79.9	828	20.1
인천	3,684	2,680	72.7	1,004	27.3
광주	3,906	2,652	67.9	1,254	32.1
대전	8,492	6,659	78.4	1,833	21.6
울산	829	615	74.2	214	25.8
세종	977	682	69.8	295	30.2
경기	33,366	28,488	85.4	4,878	14.6
강원	6,062	5,038	83.1	1,024	16.9
충북	8,390	6,660	79.4	1,730	20.6
충남	9,235	7,576	82.0	1,659	18.0
전북	6,070	4,808	79.2	1,262	20.8
전남	3,797	2,821	74.3	976	25.7
경북	12,256	9,804	80.0	2,452	20.0
경남	2,413	1,785	74.0	628	26.0
제주	830	630	75.9	200	24.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별로는 정읍시가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40.5%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숙사 수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군산시의 기숙사 수용률이 34.5%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임실군의 경우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모두 기숙사에 비거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산시의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1.6%에 그쳤다. 그 외에 전주(15.7%), 완주(16.7%) 지역은 전북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숙사 수용률을 보여주었다.

[표 3-21]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여부(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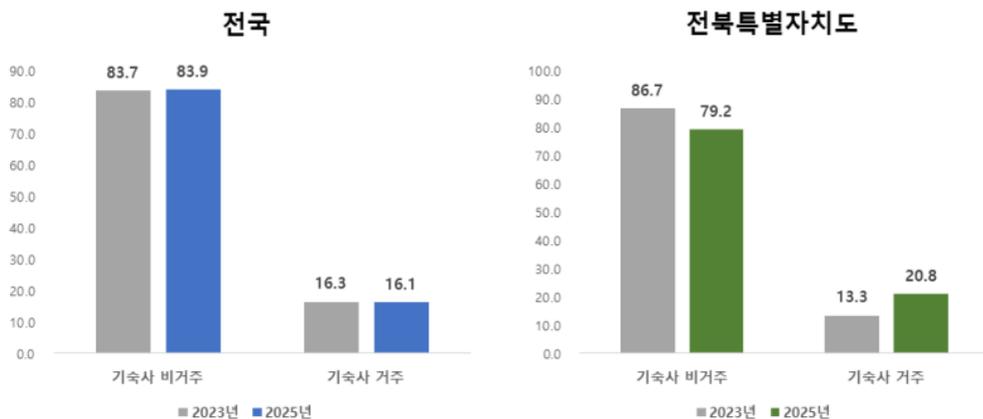
단위: 명, %

지역	전체	기숙사 비거주		기숙사 거주	
		명	%	명	%
전체	170,645	143,176	83.9	27,469	16.1
전북	6,070	4,808	79.2	1,262	20.8
전주	2,353	1,984	84.3	369	15.7
군산	1,865	1,221	65.5	644	34.5
익산	425	418	98.4	7	1.6
정읍	79	47	59.5	32	40.5
완주	1,261	1,051	83.3	210	16.7
임실	87	87	100.0	0	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전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숙사 수용여부를 2023년과 2025년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전국의 경우 2023년 기숙사 수용률이 16.3%였고, 2025년에는 기숙사 수용률이 16.1%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3년 13.3%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2025년 20.8%로 약 7.5%p 증가하였다.



주 : 2023년의 경우 기숙사 수용여부 응답이 필수응답 문항이 아니었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그림 3-12] 전국 및 전북 기숙사 수용여부 추이(2023년 vs 2025년)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등급을 확인한 결과, 1급 0.5%(806명), 2급은 4.2%(7,105명), 3급은 8.7%(14,838명), 4급은 13.3%(22,679명), 5급은 8.5%(14,446명), 6급은 6.3%(10,757명)로 나타났으며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58.6%는 해당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TOPIK은 급수에 따라 TOPIKI(1~2급)과 TOPIKII(3~6급)로 나뉘며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과정을 입학하거나 E-7 취업사증을 받기 위한 기준이 3급 이상이기 때문에 3급 이상 TOPIK 등급을 가진 학생을 비율을 기준으로 17개 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55.6%)과 대구(54.1%)는 3급 이상의 급수를 가진 학생의 비율이 과반을 넘었으며 광주(40.4%)도 전국 평균 수치인 36.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1급은 0.2%(12명)에 불과하였고, 2급은 13.4%(814명), 3급은 9.0%(548명), 4급은 9.6%(582명), 5급은 4.5%(276명), 6급은 4.5%(276명)로 나타났으며 해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0.9%(3,694명)로 나타났다. 전북의 3급 이상 TOPIK 등급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25.5%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3-22]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TOPIK 등급(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해당없음
전체	명	170,645	806	7,105	14,838	22,679	14,446	10,757	100,014
	%	100.0	0.5	4.2	8.7	13.3	8.5	6.3	58.6
서울	명	53,480	49	334	4,252	10,159	7,909	7,376	23,401
	%	100.0	0.1	0.6	8.0	19.0	14.8	13.8	43.8
부산	명	12,743	75	537	1,193	1,278	901	498	8,261
	%	100.0	0.6	4.2	9.4	10.0	7.1	3.9	64.8
대구	명	4,115	22	251	655	802	516	255	1,614
	%	100.0	0.5	6.1	15.9	19.5	12.5	6.2	39.2
인천	명	3,684	3	29	290	391	287	230	2,454
	%	100.0	0.1	0.8	7.9	10.6	7.8	6.2	66.6
광주	명	3,906	3	199	583	606	257	131	2,127
	%	100.0	0.1	5.1	14.9	15.5	6.6	3.4	54.5
대전	명	8,492	89	563	473	701	361	158	6,147
	%	100.0	1.0	6.6	5.6	8.3	4.3	1.9	72.4
울산	명	829	0	11	35	37	39	12	695
	%	100.0	0.0	1.3	4.2	4.5	4.7	1.4	83.8
세종	명	977	0	0	30	40	33	34	840
	%	100.0	0.0	0.0	3.1	4.1	3.4	3.5	86.0

지역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해당없음
경기	명	33,366	46	1,608	3,888	4,678	2,176	1,052	19,918
	%	100.0	0.1	4.8	11.7	14.0	6.5	3.2	59.7
강원	명	6,062	19	205	242	413	239	109	4,835
	%	100.0	0.3	3.4	4.0	6.8	3.9	1.8	79.8
충북	명	8,390	18	628	316	420	255	121	6,632
	%	100.0	0.2	7.5	3.8	5.0	3.0	1.4	79.0
충남	명	9,235	292	566	918	1,003	507	275	5,674
	%	100.0	3.2	6.1	9.9	10.9	5.5	3.0	61.4
전북	명	6,070	12	814	548	582	276	144	3,694
	%	100.0	0.2	13.4	9.0	9.6	4.5	2.4	60.9
전남	명	3,797	51	200	307	250	117	61	2,811
	%	100.0	1.3	5.3	8.1	6.6	3.1	1.6	74.0
경북	명	12,256	84	915	831	949	363	192	8,922
	%	100.0	0.7	7.5	6.8	7.7	3.0	1.6	72.8
경남	명	2,413	38	219	222	280	155	70	1,429
	%	100.0	1.6	9.1	9.2	11.6	6.4	2.9	59.2
제주	명	830	5	26	55	90	55	39	560
	%	100.0	0.6	3.1	6.6	10.8	6.6	4.7	67.5

주 : 해당없음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학생에게 입학, 졸업, 취업, 비자 등 공식적으로 TOPIK 성적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

TOPIK 등급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한 경우는 1) 영어트랙, 2) 한국어 연수과정 3급 이상 수료자, 3) 조 건부 합격(입학 후 1년 이내 등급 제출), 4) 예체능 계열 일부 전공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별로는 3급 이상 TOPIK을 가진 유학생의 비율이 정읍시가 44.4%로 가장 높고, 전주시 35.1%, 군산시 22.9%, 익산시 21.3%, 임실군 17.1%, 완주군 12.3% 순으로 뒤를 이었다. TOPIK 등급에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분류된 비율은 완주가 85.2%로 가장 높았으며, 임실(80.5%), 익산(78.4%), 군산(53.4%), 전주(51.6%), 정읍(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 시군별 외국인 유학생 TOPIK 등급(2025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해당없음
전체	명	170,645	806	7,105	14,838	22,679	14,446	10,757	100,014
	%	100.0	0.5	4.2	8.7	13.3	8.5	6.3	58.6
전북	명	6,070	12	814	548	582	276	144	3,694
	%	100.0	0.2	13.4	9.0	9.6	4.5	2.4	60.9
전주	명	2,353	0	313	256	300	174	96	1,214
	%	100.0	0.0	13.3	10.9	12.7	7.4	4.1	51.6
군산	명	1,865	10	433	189	173	47	18	995
	%	100.0	0.5	23.2	10.1	9.3	2.5	1.0	53.4
익산	명	425	1	0	24	32	20	15	333
	%	100.0	0.2	0.0	5.6	7.5	4.7	3.5	78.4
정읍	명	79	0	36	24	7	4	0	8
	%	100.0	0.0	45.6	30.4	8.9	5.1	0.0	10.1
완주	명	1,261	1	30	48	66	28	14	1,074
	%	100.0	0.1	2.4	3.8	5.2	2.2	1.1	85.2
임실	명	87	0	2	7	4	3	1	70
	%	100.0	0.0	2.3	8.0	4.6	3.4	1.1	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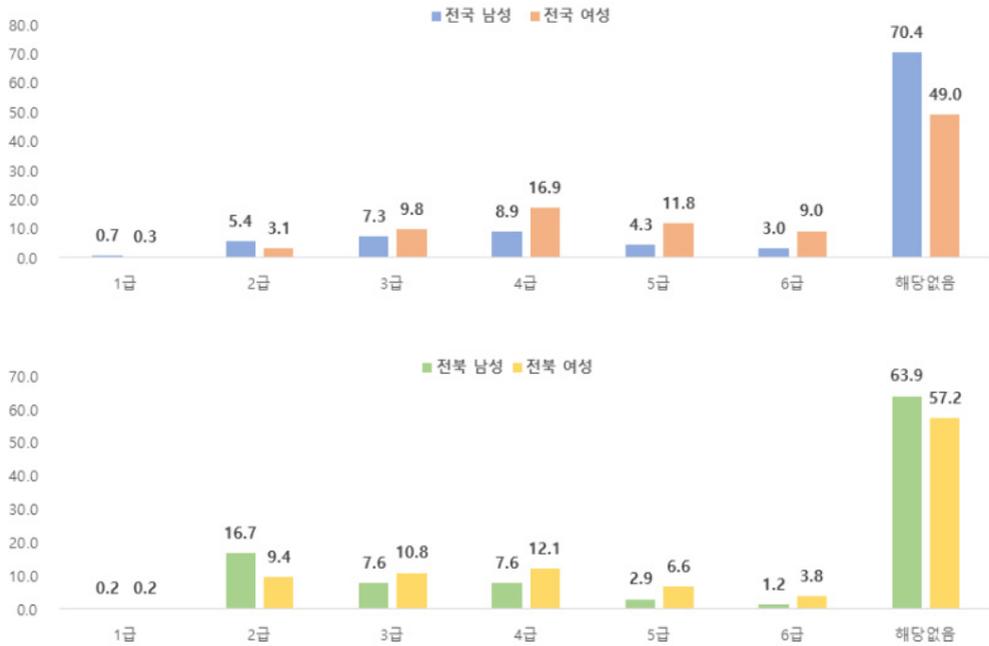
주 : 해당없음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학생에게 입학, 졸업, 취업, 비자 등 공식적으로 TOPIK 성적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

TOPIK 등급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한 경우는 1) 영어트랙, 2) 한국어 연수과정 3급 이상 수료자, 3) 조 건부 합격(입학 후 1년 이내 등급 제출), 4) 예체능 계열 일부 전공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TOPIK 등급이 높은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남성은 TOPIK 2급 이하가 6.1%였고, 3급 이상은 23.5%였으며 여성은 TOPIK 2급 이하가 3.4%, 3급 이상이 47.5%로 나타났다. TOPIK 등급 해당없음 비율은 남성이 70.4%로 여성(49.0%)보다 20%p 이상 높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성별로 나누어보면 전국의 유학생과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성 유학생 중 2급 이하의 TOPIK 등급을 가진 비율은 16.9%였고, 3급 이상 등급을 가진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유학생 중 2급 이하의 TOPIK 등급을 가진 비율은 9.6%로 나타났고, 3급 이상 등급을 가진 비율은 33.3%로 나타났다. 해당없음 비율의 경우 남성은 63.9%, 여성은 57.2%로 남성이 여성보다 6.7%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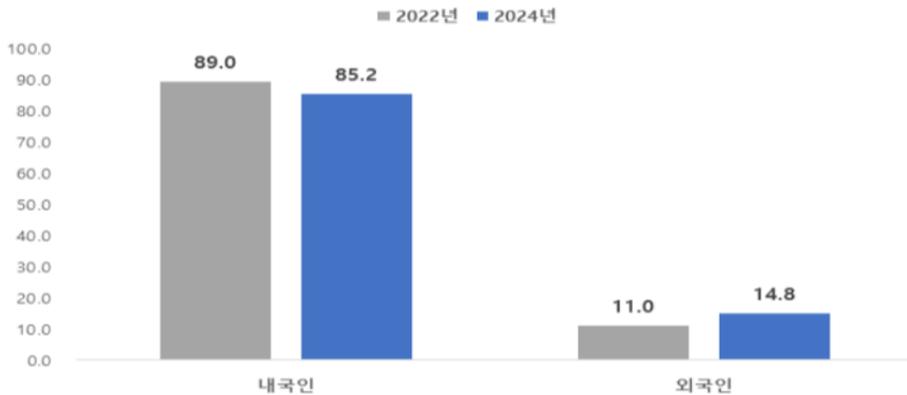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그림 3-13] 성별 TOPIK등급별 외국인 유학생 비중(2025년)

## ■ 외국인 졸업생의 졸업 후 상황<sup>2)</sup>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대비 2024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내국인은 89.0%, 외국인은 11.0%였으나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내국인은 85.2%, 외국인은 14.8%로 나타나 2022년 대비 2024년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3.8%p 증가하였다.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활용하여 재분석한 데이터로, 졸업 후 상황은 2022년까지만 조사하여 2022년 데이터를 활용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그림 3-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내/외국인 비중 추이(2022년 vs 2024년)

2022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분석해보면, 미상(44.8%)을 제외하면 본국 귀국이 24.5%로 가장 많고, 기타 13.2%, 국내 진학 10.7%, 취업 6.5%, 국외 진학 0.4%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외국인 졸업자의 취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50.4%), 대구(18.0%)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진학은 충북(23.3%), 경기(21.5%) 지역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외국인 졸업생의 90.3%는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48.0%), 광주(47.6%)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미상)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69.1%), 서울(68.8%), 인천(68.1%)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2년 외국인 졸업자 846명 중 본국 귀국이 28.3%(239명)로 가장 많았고, 미상(26.5%), 기타(19.5%), 국내 진학(14.4%), 취업(10.2%), 국외 진학(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2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취업	국내 진학	국외 진학	본국 귀국	기타	미상
전체	명	16221	1051	1731	62	3973	2138	7266
	%	100.0	6.5	10.7	0.4	24.5	13.2	44.8
서울	명	6675	272	272	19	1132	388	4592
	%	100.0	4.1	4.1	0.3	17.0	5.8	68.8
부산	명	1089	86	170	4	414	236	179
	%	100.0	7.9	15.6	0.4	38.0	21.7	16.4
대구	명	490	88	94	1	148	89	70
	%	100.0	18.0	19.2	0.2	30.2	18.2	14.3
인천	명	273	5	6	0	65	11	186
	%	100.0	1.8	2.2	0.0	23.8	4.0	68.1
광주	명	758	65	134	2	361	94	102
	%	100.0	8.6	17.7	0.3	47.6	12.4	13.5
대전	명	897	104	118	15	235	59	366
	%	100.0	11.6	13.2	1.7	26.2	6.6	40.8
울산	명	226	8	3	0	204	11	0
	%	100.0	3.5	1.3	0.0	90.3	4.9	0.0
세종	명	113	57	2	1	2	0	51
	%	100.0	50.4	1.8	0.9	1.8	0.0	45.1
경기	명	2013	130	433	3	440	601	406
	%	100.0	6.5	21.5	0.1	21.9	29.9	20.2
강원	명	256	8	43	3	110	38	54
	%	100.0	3.1	16.8	1.2	43.0	14.8	21.1
충북	명	391	9	91	0	99	69	123
	%	100.0	2.3	23.3	0.0	25.3	17.6	31.5
충남	명	794	62	84	0	191	83	374
	%	100.0	7.8	10.6	0.0	24.1	10.5	47.1
전북	명	846	86	122	10	239	165	224
	%	100.0	10.2	14.4	1.2	28.3	19.5	26.5
전남	명	248	6	24	0	119	60	39
	%	100.0	2.4	9.7	0.0	48.0	24.2	15.7
경북	명	662	33	79	2	121	148	279
	%	100.0	5.0	11.9	0.3	18.3	22.4	42.1
경남	명	312	17	46	0	76	75	98
	%	100.0	5.4	14.7	0.0	24.4	24.0	31.4
제주	명	178	15	10	2	17	11	123
	%	100.0	8.4	5.6	1.1	9.6	6.2	69.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전북특별자치도의 2022년 외국인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14.4% 중 6.9%는 대학원 졸업 후 상급학위로 진학하였으며, 0.1%는 전문대학/대학 졸업 후 국내 대학 진학, 7.4%는 전문대학/대학 졸업 후 국내 대학원 진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1.2% 중 0.9%는 대학원 졸업 후 상급학위로 진학한 경우이며 0.2%는 전문대학/대학 졸업 후 국외 대학원으로 진학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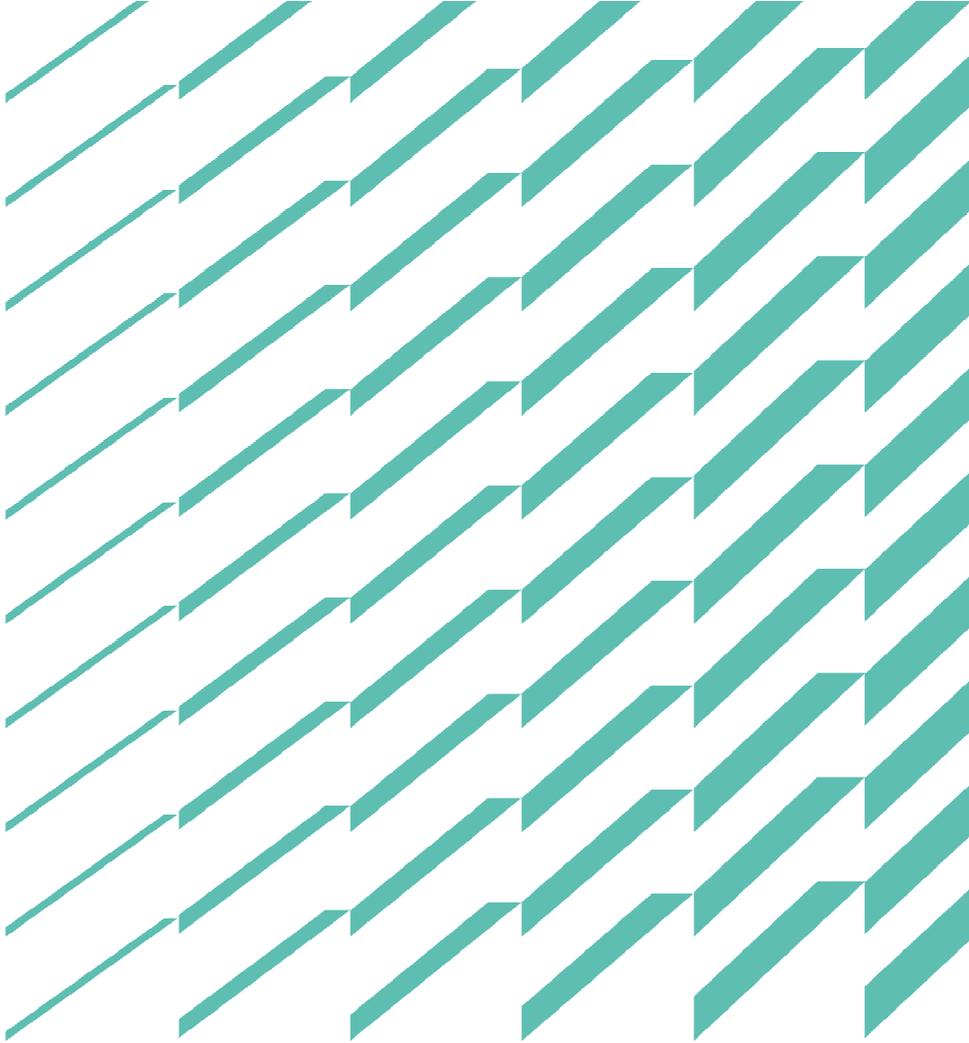
졸업 후 상황이 취업으로 확인 된 10.2% 중 7.6%는 졸업 후 신규로 취업하였으며, 2.6%는 졸업 전에 취업이 되어 있던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표 3-25] 전국 및 전북 외국인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2년)

단위: 명, %

	전국		전북특별자치도		
	명	%	명	%	
전체	16,221	100.0	846	100.0	
본국 귀국	3,973	24.5	239	28.3	
대학원 졸업 후	진학-국내	383	2.4	58	6.9
전문대학/대학 졸업 후	진학-국내 대학	350	2.2	1	0.1
	진학-국내 대학원	983	6.1	63	7.4
	진학-국내 전문	15	0.1	0	0.0
대학원 졸업 후	진학-국외	30	0.2	8	0.9
전문대학/대학 졸업 후	진학-국외 대학	1	0.0	0	0.0
	진학-국외 대학원	31	0.2	2	0.2
취업	취업-기취업	271	1.7	22	2.6
	취업-신규	780	4.8	64	7.6
기타		2,138	13.2	165	19.5
미상		7,266	44.8	224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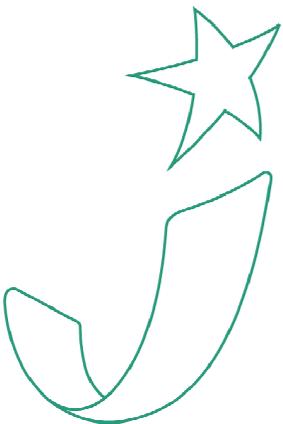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데이터 오픈랩을 통하여 연구진 재분석



## 제4장

###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경험 분석

1. 조사 설계, 대상 개요 및 분석틀
2. 유학생의 학업·생활·정서적 적응 경험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 제4장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경험 분석

### 1. 조사 설계, 대상 개요 및 분석틀

#### 가. 조사 설계 및 대상개요

본 연구는 전북지역 대학에 재학 또는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생활, 정서 적응과 지역 정착 경로를 전주기적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해 설계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반구조화 개별 심층면접과 초점집단 면접(FGI)을 병행하는 혼합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개별 심층면접은 각 유학생의 고유하고 심층적인 경험을 포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초점집단면접(FGI)은 여러 참가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된 주제나 집단 내의 논쟁적 지점들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의 상호보완적 활용은 유학생 경험에 대한 풍부하고 다면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실제로 면접 진행에 있어서는 초점집단면접이 이루어진 경우는 동일 나라에서 온 같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혹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로 인터뷰 섭외의 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어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경우 다른 참가자를 통해 통역을 제공하거나 혹은 좀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대학(국제처, 취업처), 지역 기업(HR), 지자체 관계자 등 정책 실행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하여,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실행자의 현실적 한계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표면적인 문제 너머에 숨겨진 정책적 갭을 발굴하고자 했다.

연구 표본은 학위 과정, 국적 권역, 체류 자격, 전공 계열, 성별, 한국어 수준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세분화된 표본 할당은 단순히 연구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특정 집단에만 나타나는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일반론적인 현황을 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은 특정 집단의 미시적 어려움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했다.

[표 4-1] 응답자 구성의 요소

구분	인원배정	비고
학위	전문대/학사/석사/박사/졸업생	전문대, 학사 중심
국적	중국, 베트남, 몽골 등	교육부 분류 준용
체류자격	D-2/D-10/E-7라인/F-2-R	유학생 중심 졸업 후 비자 자격 고려
전공계열	STEM/인문계/상경/예술/기타	졸업 후 경로 가능성
성별	성별 균형 접근	

자료: 저자작성

심층면접 질문의 구성은 연구 참여자의 배경을 파악하는 기본정보 확인을 시작으로, 한국 및 전북을 선택하게 된 ‘유학 경로’, 본 연구의 핵심 분석 틀인 ‘적응-정착 교차 모듈’에 기반한 심층 질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 안착 의향 및 정책 제언’의 순서로 구조화하였다.

[표 4-2]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관련 면접조사 내용 및 구체적인 질문

구분	세부구분	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과정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li> <li>- 전공계열 (STEM, 인문사회, 상경, 예체능)</li> <li>- 국적</li> <li>- 체류단계 (재학, 졸업)/체류자격 (비자 종류)</li> <li>- 한국어수준</li> <li>- 대학 및 거주 지역</li> <li>- 주거형태 (기숙사, 자취, 원룸 등)</li> <li>- 노동경험 (아르바이트, 인턴, 현장실습 등)</li> </ul>
	한국(전북) 유학 결정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선택 동기 (전공, 장학금, 취업, K-문화, 안전, 가족지인, 등)</li> <li>- 정보획득 경로 (대학/국제처, 정부·장학재단, 유학박람회, 유학원/에이전트, SNS, 친구·선배 등)</li> <li>- 지원, 합격, 비자 획득, 입국 시간</li> <li>- 지원과정 중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li> <li>- 재정 지원 및 장학금 여부</li> <li>- 유학원 이용 경험 및 만족도</li> <li>- 전북 지역 대학 선택 이유</li> <li>-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주거, 통신, 은행, 외국인 등록 등)</li> <li>- 기대와 현실의 차이</li> </ul>

구분	세부구분	내용
학업	언어	- Q1. 전공 수업과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한국어(또는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느끼셨는지요? 최근 사례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Q2. 학교의 여학수업·튜터링·영어트랙 등이 실제 학업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부족했다면 어떤 점이었는지요?
	주거	- Q1. 주거 환경(기숙사·원룸 등)이 과제·시험 준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요? (소음, 인터넷, 공부 공간 등) - Q2. 입주·계약·보증 관련 절차에서 학업에 영향을 줄 만큼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경제/일자리	- Q1. 아르바이트·현장실습이 학업과 병행될 때 시간·에너지 측면에서 어떤 균형 문제가 있었나요? - Q2. 전공과 관련된 인턴/현장실습 기회를 찾는 과정과 결과는 어떠셨나요?
	사회관계	- Q1. 스터디·팀프로젝트에서 내·외국인 학생들과 협업하는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 Q2. 교수·조교·또래와의 관계에서 과제 수행이나 진로 탐색에 실제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행정/비자	- Q1. 수강신청·장학·졸업요건 등 학사 행정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 Q2. (해당 시) D-2→D-10 등 비자 전환 준비가 학업 일정과 충돌한 적이 있었나요?
생활	언어	- Q1. 일상생활(은행·병원·쇼핑·행정)에서 언어 때문에 곤란했던 최근 경험이 있으실까요? - Q2. 번역앱·지인 도움·학교 지원 중 무엇이 가장 실용적이었나요?
	주거	- Q1. 방을 구하고 유지하는 과정(계약·보증·집주인 소통)에서 어떤 어려움/도움을 경험하셨나요? - Q2. 생활비(보증금·관리비 등) 부담이 생활 안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경제/일자리	- Q1. 생활비 충당을 위해 선택한 아르바이트 유형과 시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 Q2. 노동시간이 건강·학업·여가에 미친 영향은 어땠나요?
	사회관계	- Q1. 지역에서 친구·지인·도움 요청할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하셨나요? - Q2. 동아리·봉사·종교·취미 모임 등 참여 경험과 그 영향은 어떠했나요?
	행정/비자	- Q1. 주소 이전, 건강보험, 세무·은행 등 생활 행정에서 가장 복잡했던 절차는 무엇이었나요? - Q2. 안내 언어·서류 준비·예약 시스템은 이용하기 편하셨나요?

구분	세부구분	내용
정서	언어	- Q1. 언어 문제로 인해 불안·위축·좌절을 느낀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 Q2. 반대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는 긍정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주거	- Q1. 주거 환경이 정서 안정·수면·건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 Q2. 혼자 사는 외로움/안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경제/일자리	- Q1. 경제적 부담(등록금·월세·생활비)이 감정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Q2. 일(아르바이트/인턴)에서 받은 피드백·대우가 자존감·동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사회관계	- Q1. 외로움·문화충격·갈등을 느꼈던 순간과, 이를 완화한 사람·자원은 무엇이었나요? - Q2.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경험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비자	- Q1. 비자·행정 절차가 불안·긴장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였나요? - Q2.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어떤 정보·위로·확인이 도움이 되었나요?
비자 전환과정		- Q1. 졸업 전후 퍼널(인턴/현장실습→D-10→E-7)이 잘 작동했나요?”
정착 의향		- 전북 지속 거주 의향 및 조건 - 전북의 매력적인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

자료: 저자작성

심층면접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고, 유학생, 졸업생, 대학 내 유학생지원기관, 기업관계자, 공공기관 등 유학생 및 외국인 관련자를 만났다. 면접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고, 일대일 면담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그룹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유학생들은 한국어에 꽤 능숙한 상황이었으나, 유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출신국가의 유학생과 같이 면접을 진행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명명은 유학생(S: Student), 노동자(W: Worker), 기업 인사담당자(HR: Human Resources), 공공기관(P: Public Officials), 민간 중개업자(A: Agency), 대학 담당자(U: University Staff) 정도로 구분했다.

[표 4-3] 심층면접 대상자

연번	이름	직책	분야	기관명	비자 경로	거주지역/학력	성별	출신지역	한국어 자격	혼인 여부	면접일
1	HR1	책임 매니저	기업 HR	자동차 관련			남	한국			25.09.26
2	HR2	차장	기업 HR	식품산업 관련			남	한국			25.10.23
3	P1	팀장	공공기관	외국인 업무 지원기관			여	한국			25.11.05
4	W1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	자동차 관련 기업	D-2→ E-7-4→ F-2-R	김제/ 대졸(자동차 전공)	남	네팔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혼	25.09.26
5	W2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	식품산업 관련 기업	D-2→ D-10→ F-2-R	부안/ 전문대졸(미용 전공)	여	미얀마	TOPIK	미혼	25.10.23
6	W3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	농업 관련 기업	E-9→ F-2-R	정읍/고졸	남	네팔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혼	25.10.25
7	U1	과장	국제처	OO대학교			남	한국			25.11.05
8	U2	주무관	국제처	△△대학교			여	한국			25.11.06
9	U3	센터장	국제처	□□대학교			남	한국			25.11.07
10	U4	원장	국제협력원	◎◎대학교			여	한국			25.11.10 25.11.13

연 번	이름	직책	분야	기관명	비자 경로	거주지역/학력	성별	출신지역	한국어 자격	혼인 여부	면접일
11	A1	대표	민간	유학원, 여행사		전주/석사	여	몽골			25.11.11
12	S1	학부 2학년	글로벌산업 기술과	□□대학교	D-4, D-2	전주/전문학부	여	베트남		미혼	25.11.10
13	S2	학부 4학년	2차전지소 재부품학과	□□대학교	D-4, D-2	전주/전문학부	남	베트남		미혼	25.11.10
14	S3	학부 4학년	영화학과	OO대학교	D-4, D-2	전주/학부	여	중국		미혼	25.11.13
15	S4	학부 4학년	경영학과	OO대학교	D-4, D-2	전주/학부	여	중국		미혼	25.11.13
16	S5	학부 4학년	물류무역학과	OO대학교	D-4, D-2	전주/학부	남	중국		미혼	25.11.13
17	S6	학부 2학년	컴퓨터공학	△△대학교	어학연수 학부입학	전주/학부	남	러시아	TOPIK 4급	미혼	25.11.27
18	S7	박사과정	농업경제학	△△대학교	교환학생, 편입, 석사, 박사	전주/대학원	여	베트남	TOPIK 6급	미혼	25.11.28

자료: 저자작성

## 나. 분석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내 정착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특히, 유학 비자(D-2/D-4)에서 구직 비자(D-10)를 거쳐 취업 비자(E-7)로 이어지는 이행 경로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브레이크 포인트(Break Points, BP)’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은 유학생의 ‘초기 적응’과 ‘장기 정착’ 경험을 교차하여 입체적으로 구조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차원을 ‘3대 적응 영역(학업·생활·심리)’과 ‘5대 정착 여건(언어·주거·경제/일자리·사회관계·행정/비자)’으로 나누어 3X5의 분석 매트릭스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은 학업 난이도, 주거 불안정성, 심리적 고립감과 같은 개인 차원의 미시적 애로사항이, 어떻게 장기적인 지역 안착 의향이나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거시적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인과관계의 선순환 혹은 악순환 고리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이 접근법은 개별적인 사례들이 갖는 파편적 의미를 구조적인 정책 맥락 속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현재의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그 실패 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정책 진단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4-4] 외국인 유학생 적응-정착 경험 분석틀

	언어	주거	경제/일자리	사회관계	행정/비자
학업	사례/지원	통학/환경	근로시간	멘토, 동료	학사/비자
생활	의료, 은행	계약/비용	소득, 지출	동아리/종교	절차/대기
정서	불안, 회복	안전, 소음	스트레스	환대/차별	불확실성

자료: 저자작성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학위 과정, 전공 계열, 체류 자격 등 핵심 변인별로 나타나는 유학생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층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이공계 전공자가 겪는 실험·연구 환경의 특수성이나, 졸업 후 구직 비자(D-10) 전환기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정보 단절 및 행정적 지연 사례는 단순한

---

애로사항을 넘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핵심 지점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현장 사례는 향후 정책 수립 시 유학생의 전공과 체류 단계를 고려한 정교한 진로 설계 지원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구조적 장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단순한 양적 유입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정착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유학생의 학업·생활·정서적 적응 경험

### 가. 유입 단계: 왜곡된 동기와 경제적 장벽

#### ■ 왜 그들은 전북에 왔고, 출발선의 차이는 무엇을 결정하는가

본 절은 유학생 유입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불일치와 구조적 장벽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학업’이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입국하지만, 심층 면접 결과 상당수의 유학생 이면에는 취업 및 경제적 이득이라는 실질적 동기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특히 유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구조는 입국 초기부터 유학생들을 노동 시장으로 유인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며, 이는 향후 학업과 생활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선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 1) ‘코리안 드림’의 실체: 이해관계의 구조적 불일치

유학생, 대학, 지자체는 ‘유학’이라는 제도를 공유하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실질적 목표는 서로 다른 지점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불일치는 유입 단계부터 구조적 긴장을 유발한다.

첫째, 유학생의 동기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 재구성된다. 많은 유학생이 K-컬처에 대한 호감으로 한국을 선택하지만, 출신국의 경제 여건과 개인의 계층적 배경에 따라 유학 비자(D-2·D-4)는 점차 한국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합법적 통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에게 학업은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능한다.

둘째, 대학은 재정 확보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유학생을 수용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역 대학은 충원을 유지와 재정 확충을 위해 유학생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엄격한 학사 관리가 자칫 유학생의 이탈(중도 포기 및 타 대학 이동)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딜레마를 토로하며, 이는 학업 이탈에 대한 소극적 관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생이 수업 중에 뒤에 창문을 열고 점프해서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고... (이 대학에서는) 어학 연수과정을 오전으로 뺐어요. 점심 이후 장사부터는 알바를 할 수 있으니... (심층면접 U3)

셋째, 지자체는 인구 통계 방어와 산업 인력 충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에게 유학생 유입은 지역 청년 인구 급감을 완화하는 통계적 수단이자, 지역 제조업 및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대체 자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 정착 여건 조성보다는, 당장의 유치 숫자를 늘리는 단기적 목표(양적 확대) 달성에 행정 역량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학업(명분)’, ‘재정 확보(대학)’, ‘인구·노동력 충원(지자체)’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가 맞물리면서, 정책의 의도와 현장의 실행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 2) 고비용 진입 구조와 노동의 필연성: ‘투자’로서의 부채

유학생들이 감당하는 막대한 초기 비용과 부채는 단순히 브로커의 착취 결과라기보다, 한국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유학생 스스로가 감수한 ‘투자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증빙이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한다. 한국 정부는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으로 약 800만 원~2,000만 원 상당의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한다<sup>3)</sup>. 현지 소득 수준에서 이 목돈을 일시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브로커에게 소위 ‘쇼머니(Show Money, 잔고 증명용 단기 차입금)’를 빌려 심사를 통과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학비와 비자 대행료가 합쳐져 막대한 초기 진입 비용이 형성된다.

둘째, 부채는 노동 이주를 위한 입장료(Entry Fee)로 기능한다. 유학생들이 본국 연소득을 상회하는 이 비용을 빚(가족 자산 담보 등)을 내면서까지 지불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에서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이 비용을 상회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즉, 이들에게 유학은 순수한 학업이라기보다, ‘학생 비자’라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우회적 노동 이주의 성격을 띤다.

한국 오려고 2,300만 원 냈어요. 1년 안에 다 갚아야 해서 매일 식당에서 6시간씩 일해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심층면접 S1)

3) 재정능력 입증 기준은 유학과정, 체류기간, 대학 소재기에 따라 상이하나, 학위과정의 경우 수도권 소재의 대학은 연간 2,000만원, 지방소재 대학은 연간 1,600만원이고, 어학연수과정은 수도권 소재 1,000만원, 지방소재의 경우 800만원을 요구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서도 연간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학생이라는 신분은 상환을 위한 수단이 된다. 결국 입국과 동시에 시작되는 생계형 노동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필연적 경로이다. 입국 직후부터 매달 상환 압박에 직면한 이들에게 학업은 체류 자격(비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고, 노동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우즈벡 평균 임금이 부모가 잘 벌어야 1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는 유학생을 케어할 수 없죠. 그 학생들은 오면 일만 하는 것이죠. (심층면접 U3)

이 지점에서 유학 제도는 사실상 고비용을 지불하고 입장하는 노동 시장의 또 다른 입구로 기능하게 된다.

### 3) ‘유학생’이라는 단일 명칭의 함정: 두 개의 다른 트랙

현행 제도는 D-2 체류 자격 소지자를 모두 ‘유학생’으로 통칭하지만, 심층면접 결과 경제적 기반과 유학 목적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집단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첫째, 부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자산 기반 학업형(Track A)’이다. 이들은 본인의 학문적 필요에 따라 유학을 결정하며, 입국 과정에서 현지 유학원(에이전시)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비자 서류 처리를 위한 단순 행정 대행 수준에 그친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에서의 학비와 생활비를 부모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입국 후 경제적 압박이 없어 생계형 아르바이트보다는 교내 활동이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에 집중할 여력을 갖는다. 이들에게 전복은 더 나은 교육 환경(서울/부산 등)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된다.

부모님이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다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심층면접 S3)

학부를 졸업하면 서울이나 부산 쪽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심층면접 S4)

둘째, 고비용 중개료를 빚으로 떠안은 ‘부채 기반 생계형(Track B)’이다. 이들은 가정형편상 유학비용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입국 비용 전체를 대출이나 가족 자산 담보로 마련한 그룹이다. 이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시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단순 대행료를 넘어, 사실상 한국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막대한 투자금의 성격을 띤다. 입국과 동시에 학생 신분은 매달 돌아오는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며, 학업 지원보다 합법적인 노동 시간 확보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에게

---

는 빛을 갠기 위한 노동이 학교 출석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문제는 정책 대상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불일치에 있다. 생계형 노동이 절실한 집단(Track B)에게 학업 전념을 강요하며 시간제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반대로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는 집단(Track A)에게 단순 노무직 중심의 비자(F-2-R 등)를 제안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유학생 집단 내의 이중 구조를 직시하고, 각 트랙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4) 대학의 위상과 모집 전략의 유형화

대학의 모집 전략은 해당 대학이 가진 시장 지배력(인지도 및 학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된다.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 대학이 처한 생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적 행동으로 분석된다.

첫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사립대와 전문대학은 생존을 위해 ‘현지 밀착형 전략’을 취한다. 이들 대학에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곧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전북자치도와 연계하여 ‘새만금 한글학교’와 같은 현지 한글 교육 거점을 직접 설치하거나, 베트남 등 주요 송출국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공격적으로 학생을 발굴(Scouting)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는 대학이 선발의 주도권을 쥐고 한국 생활에 적응 가능한 학생을 직접 검증하여 선발하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부실 유학생을 양산하는 브로커 의존도를 낮추려는 적극적인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체적인 모집 역량은 부족하나 충원을 확보가 시급한 한계 대학들은 ‘브로커 의존형 전략’을 이용한다. 현지에 거점을 마련할 재정적·행정적 여력이 없는 이들 대학은 검증 시스템 없이 현지 대형 유학원(에이전시)에 모집을 전적으로 위탁하거나 혹은 학교에 특정 국가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유학생 충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생 수의 확대에 급급한 결과, 학업 의지보다는 고액의 수수료와 부채를 안고 입국하여 노동을 통해 이를 상환하려는 노동 목적 유학생이 대량으로 유입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셋째, 거점국립대는 우월적 지위에 기반한 ‘평판 기반 선별형’ 전략을 유지한다. 거점국립대의 소극적 태도는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저렴한 학비와 ‘국립대’라는 브랜드 파워에서 비롯된 시장 우위를 반영한다. 별도의 공격적인 마케팅 없이도 우수 자원의 자발적 지원이 이어지기에, 대학은 지원자를 엄격히 평가하여 걸러내는 ‘문지기(Gatekeeper)’ 기능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접근은 급변하는 유치 경쟁 환경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입학 단계의 ‘질 관리’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유학생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비전 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거점국립대는 우수한 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학문적 명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유학생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지역 정착 플랫폼’으로서의 매력도는 경쟁 대학들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거점국립대의 모델은 단순히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하는 전통적 기능을 넘어, 입학 단계부터 적극적인 취업 연계와 구체적인 진로 로드맵을 제시하는 ‘통합적 경력 개발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기존의 학문적 명성에 졸업 후 지역 안착 가능성이라는 실질적 효용 가치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지역 거점 대학은 유학생 유치와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5]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유형별 특성 비교

	유형 A: 현지 밀착형	유형 B: 브로커 의존형	유형 C: 인지도 기반 선별형
대표 모델	특성화 사립/전문대	한계 대학	거점 국립대
핵심 동력	생존 본능(Push)	상업적 이윤(Profit)	브랜드 파워(Pull)
주요 약점	재정/행정력 소모 큼	이탈/불법체류 위험	‘졸업 후 비전’ 제시 부족
과제	공공 지원 모델화	엄격한 관리 감독	‘교육+취업’ 패키지 강화

자료: 저자작성

## 5) 선발의 윤리적 딜레마: ‘적응’이라는 이름의 편견

대학이 현지에 거점을 마련하고 직접 선발하는 ‘적극적 전략’은 브로커를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그 이면에는 선발 지역의 편중과 기준의 왜곡이라는 또 다른 윤리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 ■ ‘공급 주도형 수요’와 기획된 유입

실제적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동남아를 비롯한 특정 국가 현지에서 전북의 지방 전문대학을 알고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이들의 유입은 대학이 특정 지역을 타겟팅하여 홍보했기에 만들어진 ‘공급 주도형 수요’이다. 즉, 학생이 대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 생존을 위해 특정 지역 학생들을 기획적으로 호출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모집을 위해 한국의 장밋빛 미래만을 강조(선진)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입국 후 학생들이 겪을 현실과의 괴리를 키우는 원초적 원인이 된다.

## ■ 편의주의적 지역 편중과 프로파일링

대학이 거점을 설치하는 지역은 무작위가 아니다. “A지역 출신들이 생활력이 강해서 도망 안 가고 잘 버틴다”거나, “B지역 학생들은 순둥순둥해서 관리가 편하다”는 식의 경험이 작용한 결과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교육적 잠재력이 아닌, ‘한국 사회(특히 노동 현장)에서의 순응성’을 기준으로 학생을 프로파일링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말하는 ‘적응을 잘한다’는 평가는 사실상 ‘힘든 노동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버틴다’는 기능적 유용성을 포장한 말일 수 있다. 과연 대학이 학생의 가능성이 아닌, ‘관리의 편의성’과 ‘노동 적합성’을 기준으로 특정 지역 청년들을 집단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온당한가? 유학생 유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캠퍼스의 ‘게토화(Ghettoization)’

이러한 편중된 선발의 결과, 대학 캠퍼스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제화 공간이 아니라,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 출신이 집단 거주하는 ‘게토(Ghetto)’로 변질된다. 각 대학에서 특정 국가의 학생들을 선호함에 따라 특정 국가의 유학생의 비중은 높은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이나 문화적 교류는 더 어렵게 된다. 이는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고립되는 결과를 낳으며, 결국 대학이 스스로를 고립된 섬으로 만드는 역설을 초래한다.

## 6) 선발의 구조적 한계: 의지를 압도하는 현실의 벽

대학의 노력 여부나 전략의 차이를 넘어, 유학생 유입 과정에는 개별 대학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난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현장의 인터뷰들은 대학의 선발 의지가 국가 간 행정 격차와 제도적 문턱 앞에서 어떻게 좌절되고 변형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디지털 행정의 공백’이 ‘인적 중개’를 강제한다. 대학이 직접 선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뢰의 인프라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등 주요 송출국의 학력 서류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학이 모든 현지 지원자의 ‘종이 서류’를 직접 확인할 행정력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행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현지 사정에 밝은 중개인의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증 비용은 고스란히 유학생의 부채로 전가된다.

(왜 인터넷 지원 안 받고 물어보면) 베트남은 전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수기로 쓴 서류를 공증을 받아야 해요. 원본서류를 한 번 받으면 재발급도 어렵고 이걸 대행해주는 대행사가 있으니 그나마 하는 건데 직접 하게 한다는 건 유학생 안 받는다는 것이죠. (심층면접 U3)

둘째, 제도의 문턱(재정 증빙)이 금융비용을 유발한다. 대학이나 지자체가 ‘새만금 한글 학교’처럼 현지에 직접 거점을 마련하여 중개 수수료 거품을 걷어내려 노력해도,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비자 발급의 높은 문턱(재정 증빙)은 여전히 존재한다. 개발도상국 출신의 평범한 학생이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은행 잔고를 자력으로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리 투명한 경로로 선발된 학생이라도, 이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적 금융(대출, 친인척 차입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7) 유입 단계의 귀결: 출발선의 단절과 신분의 전락 - 학생의 가면을 쓴 채무자들의 예견된 이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입 단계의 구조적 모순(Track B의 부채, 선발 시스템의 한계)은 유학생들이 전복에 도착하자마자 학업과 노동의 병행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만든다. 합법적인 시간제 취업(주 20~25시간)으로는 매달 돌아오는 고액의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이들에게 규정 위반(불법 취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다.

(종교단체에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해줘서 가끔 나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물이라면 ‘바보같이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니냐, 나는 학교 안가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법체류자는 생각보다 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요. 집중단속기간에만 불안하고....(심층면접 U3)

이 결정적 순간, 유학 제도의 본질은 변질된다.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체류 자격(비자)을 유지해 주는 행정적 숙주로 축소되고, 유학생은 미래를 꿈꾸는 인재가 아니라, 빛을 갚기 위해 학교 담장을 넘어야 하는 잠재적 미등록 체류자의 지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상시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신분의 전환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일탈이 아니라, 왜곡된 출발선이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

## 나. 체류 및 학업 단계: 가성비와 안락함과 제도의 사각지대

입국 관문을 통과한 유학생들에게 전복은 거친 타국 생활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 수도권 대비 압도적인 주거 가성비와 초국적 물류가 제공하는 생활의 편의는 유학생들의 초기 정착을 돕는 핵심 기반이다. 또한 대학은 AI 기술 도입과 학과 구조 개편(계약학과 등)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산업 인재로 키워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락함과 노력의 이면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한 일자리 알선의 공백과 교육 현장의 평가 딜레마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전복 유학 생활의 빛(필요로운 생활·학습 지원)과 그림자(불안한 노동·학위 신뢰성)가 공존하는 이중적 실태를 분석한다.

### 1) 주거의 경제학: 전복이 주는 ‘공간적 보너스’

유학생들이 체감하는 전복의 가장 확실한 비교우위는 주거비용의 효율성(가성비)에서 온다. 입국 초기 기숙사를 거쳐 독립하게 되는 학교 밖 주거(자취) 환경은 수도권과 극명한 삶의 질 격차를 보여준다.

(25만 원 vs 70만 원의 격차) 수도권 대학가의 경우 월 70만 원을 지불해도 비좁은 고시원이나 반지하 방을 면하기 어렵지만, 전복 지역 대학가에서는 그 절반 수준인 25만 원정도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완비된 ‘풀옵션 원룸’을 구할 수 있다. 실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조금 더 큰 공간을 빌려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월세는) 25만원, (보증금은) 100만원이요. 원룸이나 혼자 살기는 괜찮아요. 방, 주방,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침대와 책상도 있고요... 친구와 같이 살면 더 저렴하지만 혼자 사는 게 더 좋아서 혼자 살아요. (심층면접 S1, S2)

제 보증금은 100만 원, 투룸 월세는 45만원이예요. (심층면접 S3)

저는 보증금 50만 원 월세는 42만 원 정도예요. 투룸이예요. 편하게 살고 있어요. (기숙사도) 싫지 않아요. 근데 밖에서 살면 더 편리해요. 요리할 때도 편하고 또 냉장고도 스스로 사용하고... (심층면접 S4)

이러한 저렴한 주거비는 유학생들의 고정 지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전북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가치분 소득과 쾌적한 개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타 지역 유학생들이 겪는 ‘주거 빈곤’ 문제에서 전북 유학생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강점으로 자리할 수 있다.

## 2) 초국적 물류와 디지털 소비: 식문화 장벽의 붕괴

전북의 저렴한 주거비용이 유학생들에게 물리적인 공간의 안락함을 제공한다면, 최근 급격히 발달한 초국적 물류 시스템과 한국의 고도화된 배송 인프라는 이들의 가장 큰 난제였던 식문화와 생활양식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바야흐로 유학생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본국의 생활 방식을 한국으로 일정정도 유지하여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직구’의 일상화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국경 없는 장바구니’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 등 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생필품을 조달하며 한국과 중국의 상품으로 선택지를 확대하고 있다. 휴지, 세제, 의류 등 일상용품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자신들에게 익숙한 품질의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한국 휴지 너무 비싸고.. 질도 별로예요. (중국 휴대용 티슈의 두께를 보여주며) 저히는 그냥 중국 앱으로 시켜요. 배송비도 무료고 며칠이면 바로 와요. (심층면접 S4)

이러한 소비 패턴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선다. 낯선 타국 생활에서 오는 이질감을 본국의 익숙한 물건들로 채우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 이른바 소비의 초국적화 전략이 유

학생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한국 내 물류 혁명은 유학생들의 식탁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과거에는 방학 때마다 캐리어 가득 고향의 향신료와 식자재를 싸 들고 와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사라졌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플랫폼을 통하면 마라 소스, 고수, 베트남 느억맘(액젓) 등 현지 식재료를 오늘 밤 주문해 다음 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마트들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아시아 마트 2~3개 있어서 충분해요. 아시아 마트가 ○○에 2~3개 생겼어요. 처음엔 하나였는데 지금은 3개 정도 있어요. (심층면접 W3)

이처럼 온·오프라인으로 획기적으로 확대된 식재료 접근성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되찾아주는 것을 넘어, 유학생들이 한국 적응 과정에서 겪는 가장 원초적인 스트레스인 음식 문제를 제거해 주는 든든한 기술적·환경적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북의 유학생들은 몸은 전북에 있지만, 소비는 글로벌하게 향유하는 삶을 살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물류의 비약적인 발전은 유학생들이 한국의 생활양식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는 ‘동화’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본국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며 한국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는 전북뿐만 아니라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의 초기 적응 비용과 심리적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

### 3) 강의실의 진화: 조교(TA)와 시가 만든 소통의 다리

언어 장벽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수업 내용에서 소외되던 과거의 침묵의 강의실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전북권 대학들은 유학생을 단순히 강의실에 앉혀두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가용한 인적·기술적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인적 차원에서는 선배 유학생을 활용한 ‘언어 브릿지(Language Bridge)’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 많은 대학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중국, 베트남 출신의 고학년 선배를 ‘수업 보조 조교(Teachign Assitant)’로 공식 채용하여 강의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교수의 한국어 강의를 실시간으로 통역하여 전달하거나, 난해한 전공 용어를 자국어로 번역한 보조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학습의 중간 전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고 있다. 이는 후배 유학생들의 학업 이해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임과 동시에, 선후배 간의 자연스러운 멘토링을 유도하여 대학 적응을 돕는 이중의 효과를 낸다.

(○○대에) 중국인 유학생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공 수업도 있어요. 경영학 수업도 있어요. 제가 그 수업에서는 TA 선생님이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최근에 오는 중국 학생들이 별로 한국어 잘 못해요. 너무 못해요. (심층면접 S4)

기술의 진보는 강의실의 풍경을 더욱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파파고, DeepL과 같은 고성능 번역기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의 보편화는 언어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제 유학생들은 강의실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교수의 강의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하여 이해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다.

Q: 혹시 중국어로 페이퍼를 이렇게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라고 쓰고 이거 한국말로 보고서 써줘라고 얘기하면 그렇게도 해요?

A: 당연하죠. 맞아요. 엄청 많이 도움 받아요. 조금 실력이 느는 데 도움을 주는 거.. (심층면접 S4)

시험 볼 때 어떤 선생님께서 번역기 써도 된다고 해주셔서 사용했고, 그 과목의 성적도 다른 과목 대비 좋았어요. (심층면접 S6)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생성형 AI 활용 능력이 강의실을 넘어 생활 전반의 생존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병원 진료나 은행 업무 등 전문 용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리 AI를 통해 질문을 연습하고 시뮬레이션하며 한국 사회의 높은 문턱을 넘고 있었다.

Q: 병원, 은행가기 어렵지 않은지?

A: 괜찮아요. 은행가면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게 필요한지 물어보고, 지피티(GPT)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 있어도 지피티로 물어보고.. (심층면접 S6)

과거의 언어 장벽이 학업 포기나 생활의 고립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었다면, 현재는 기술을 도구 삼아 어떻게든 수업을 따라가고 사회와 소통하려는 학생들의 적극적 적응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4) 학과와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전용'을 넘어 '취업 약정'으로

대학의 노력은 강의실 내의 소통 개선이라는 미시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전북 권 대학들은 유학생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졸업 후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 구조 자체를 유학생 맞춤형 취업 사관학교 형태로 재편하는 거시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에 유학생들을 내국인 중심의 커리큘럼에 무리하게 포함시키는 방식은 중도 탈락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외국인 전용 학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학과는 100% 유학생으로만 구성되며, 초기에는 한국어 집중 교육, 후반기에는 전공 기초 실무를 병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언어 장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임과 동시에, 유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졸업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학 차원의 구조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학교의 적극적인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및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sup>4)</sup>'과 연계된 '계약학과' 모델의 도입 노력이다. 이 모델은 '대학-지자체-지역 기업'이 3자 협약을 맺고,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용접, 금형, 스마트팜 등의 기술을 대학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다.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이 입학과 동시에 졸업 후 취업할 기업이 내정(약정)되며, 학교생활 중에서 그 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가장 큰 고민인 미래 진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유학 생활은 막연한 진로 계획에서 '확실한 취업 보장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실제로 심층면접 결과, 유학생들이 취업 보장 여부를 기준으로 대학 이동을 고민하는 실질적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이러한 과정을 신설하는 대학 내부에서는 교육과정 설계를 둘러싼 진통도 감지되었다.

○○대 사례를 들면 뿌리산업이 있어서, 자동차학과와 연계된 산업으로 취업을 100%를 보장 해주고 있어요.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저희 대학에서도 토타 3,4급에 합격한 다음에 취업. 정착을 하겠다는 목적이 확실한 남학생은 ○○대에 전학가고 싶다고 말하고 그럼 그쪽 교에 보내주죠. (심층면접 U3)

4) 전북자치도는 광역형 비자사업을 통해 도내 13개 대학에서 지역특화, 뿌리산업, 외국인전용 분야를 대상으로 다수의 과에서 67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법무부 2025b).

계약학과.. 우리 대학에서도 계약학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국어 전공자와 해당산업 전공자와 기업 전공자가 만나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만들어야 하는데 각자의 프라이드가 너무 싸서... (조율이 어렵습니다) (심층면접 U3)

이러한 주문식 교육과 계약학과 시스템의 도입은 대학이 유학생을 단순히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인력의 양성소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은 현행법상 유학생들에게 당장의 생계 수단인 아르바이트를 직접 알선해 줄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이 선택한 전략은 단기적인 일자리 소개 대신, 졸업 후의 확실한 취업이라는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다. 즉, 계약학과는 대학,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하여 유학생에게는 지역 정착의 기회를, 지역 사회에는 검증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대학-학생-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이민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석된다.

## 5) 절반의 '토탈 케어': 행정은 과잉, 일자리는 방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 환경과 학습 지원 측면에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비자 연장, 보험 가입, 병원 동행 등 체류 행정 전반에 걸쳐 대학 국제교류처는 유학생들의 완벽한 대리인이자 보호자 역할을 자처한다. 출입국 서류 등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유학생들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비자 관련은) 학교에서 다 해주세요. (심층면접 S1)

유학생은 서류만 내면 돼요.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심층면접 S2)

그러나 정작 유학생들의 당장 먹고사는 문제, 즉 생존과 가장 직결된 아르바이트 일자리 문제 앞에서는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철저히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국제교류처가 유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직접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불법 취업 알선이나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이지만, 역설적으로 대학이 검증된 안전한 일자리를 공식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는 규제의 족쇄로 작용한다.

○○○ 학생들처럼 절박한 친구들도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말이 조금 어눌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장님들도 많고요.. 사실 대화해 보면 생각이 깊은 아이들인데 말이죠. (...) 서류 절차도 복잡해서 범죄경력증명서 준비에만 한두 달이 걸리는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결국 학교가 '공적 보증인'으로서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학교가 나서서 업체를 섭외하면 기업도 학교를 믿고, 학생들도 '학교가 소개한 곳이니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방학 때 안전하게 일해 본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F-2-R(지역특화비자)로 넘어가고 결혼해서 정착도 하는데, 지금은 그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층면접 U4)

결국 대학 관계자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학교 주변 식당이나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학생들을 잘 부탁한다고 비공식적으로 호소하거나, 문제 발생 시 중재에 나서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행정적으로는 과잉보호에 가까운 케어를 받지만, 경제적 생존의 영역에서는 사실상 방임 상태에 놓이는 구조적 모순이 여기서 발생한다.

임금체불 경험하는 학생들은 가게 사장님들에게 학교에서 전화를 해서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 (심층면접 U3)

공식적인 일자리 연결 채널이 차단된 상황에서 유학생들은 생존을 위해 각자가 가진 사적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된다. 먼저 온 선배나 같은 국적 친구가 전해주는 구전 정보가 유일한 구직 통로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끼리끼리 네트워크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경로라는 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심지어는 부당한 대우가 만연한 일자리라도 선배의 소개라는 신뢰와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유학생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노동 현장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어가 서툰 남학생들은 선택지가 없으니 자기들끼리 팀을 꾸려 공사장이나 타 지역(광주, 대전) 택배 물류센터로 원정을 나갑니다. 명백한 불법 취업이죠. 더 큰 문제는 그 인의 착취 구조예요. 팀장이 학생들을 모아가는 대가로 인당 5천 원씩 수수료를 떼어가거든요. 결국 우리 학생들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더 강도 높은 일을 하면서도, 중간 수수료 때문에 정당한 임금조차 손에 쥐지 못하는 거죠. 학교 차원에서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위험한 택배 현장으로 빠지는 걸 막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생계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아요. (심층면접 U3)

이러한 일자리 방임은 결국 유학생들을 검증되지 않은 심야 노동이나 고된 육체노동 현장으로 내몬다. 밤새 일하고 지친 몸으로 강의실에 돌아온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곧 이어지는 평가의 딜레마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교수자

입장에서 학생의 수업 태도가 단순한 태만이 아닌 생존을 위한 사투임을 알기에, 엄격한 학문적 잣대 대신 온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타 지자체 대학에서는 편법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은 학생 이탈의 우려까지도 떠안고 있는 현실이었다.

## 6) 평가의 딜레마: 전국적 현상과 지역의 고민

대학이 유학생 전용 학과를 만들고 조교를 투입하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의실 내부에는 한국 고등교육 전체가 공유하는 평가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는 전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 유치 경쟁에 뛰어들든 모든 한국 대학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진통이다.

학사 운영의 유연화와 이중 잣대 언어 장벽과 생활고(야간 노동)에 시달리는 유학생들에게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엄격한 학사 일정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대학 현장에서는 수업 시간을 학생들의 노동 스케줄에 맞춰 조정하거나,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온정적 평가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학연수 과정을 (전부) 오전으로 뺐습니다. 점심 이후, 식당들이 장사 시작할 때 부터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심층면접 U3)

이러한 배려는 학생의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한 대학의 교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출석만 하면 학점을 주거나 시험 난이도를 낮추는 이중 잣대로 이어져 학위의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배려 속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이 직면할 현실이다. 성적표 상의 학점은 우수할지 모르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소통 능력이나 직무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괴리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유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학위 취득’이 곧 ‘언어 및 직무 능력 완비’를 보증해 주지 못하는 한국 유학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전국적 현상은 전복과 같은 지역 노동시장에서 더 뼈아프게 작용한다. 수도권의 사무직군과 달리, 전복의 주력 산업(제조업, 뿌리산업 등)은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즉시 투입 가능한 실질적 소통 능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학생들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여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대학의 온정적 평가로 인해 “학위가 곧 실력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기업은 유학생을 전문 직무에 배치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이는 결국 다음 절에서 다룰 일자리 미스매치(대졸자는 사무직을 원하나, 기업은 현장직으로만 활용하려 함)를 심화시키는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7) 소결: 온실 속의 역설

이 절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전북 유학생들의 삶은 불안정한 풍요로 볼 수 있다. 이들은 25만 원짜리 쾌적한 원룸에서 휴식을 취하고, 초국적 물류를 통해 본국 물건을 직구하며 향수병을 달래고, 대학의 첨단 AI 시스템과 완벽한 행정 케어를 받으며 안락한 유학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이 온실은 외부의 충격(주거비, 행정 절차 등)을 막아주는 데는 탁월하지만, 정작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을 자생력(검증된 역량, 스스로 일자리 찾기)을 키워주는 데는 한계를 드러낸다. 대학이 제공하는 학위가 학생의 실질적 역량을 보증하지 못하고, 가장 시급한 아르바이트 구직은 사적 네트워크에 방치되는 이 모순은, 결국 졸업과 동시에 유학생들을 더 큰 취업 절벽으로 내몰게 된다. 유학생 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이동은 그들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대학)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취업 및 지역 정착 단계에서의 진짜 갈등이 시작된다.

## 다. 취업 및 체류 전환 단계: ‘비자 절벽’과 ‘미스매치’의 협곡

대학 졸업은 유학생들에게 학업의 완성이자, 동시에 냉혹한 생존 경쟁의 출발점이다. 학생 신분(D-2)이 종료되는 순간, 그들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새로운 ‘체류 자격(Visa)’을 확보해야만 한다. 최근 구직 비자(D-10)의 체류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25.10.29. 시행)되었으나, 이는 체류 종료를 지연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며, 정해진 기간 내 취업에 실패할 경우 출국해야 하는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전북에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도적 장벽과 지역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라는 두 축에서 분석한다.

## 1) 제도적 장벽: 소득의 벽과 행정의 병목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장벽은 높은 비자 요건과 경직된 행정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E-7-1)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약 3,35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연봉 계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신입 초봉이 통상 2,400~2,8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는 지역 노동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기준이다.

이러한 소득 요건의 장벽은 다수의 유학생을 전공과 무관하게 소득 요건이 낮은(약 2,600만 원, 최저임금 수준) 숙련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비자(F-2-R)로 내몬다. 이들 비자는 주로 제조·생산직을 대상으로 하기에, 제도는 결과적으로 “한국에 남기 위해서는 공장으로 가라”는 선택을 암묵적으로 강요한다. 이는 유학생들이 자신의 고학력 역량을 포기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하향 취업’을 구조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어렵게 취업이 성사되더라도, 비자 변경을 위한 느린 행정 속도가 발목을 잡는다. 출입국 행정 처리에는 최소 25일에서 한 달 이상이 소요되며, 이는 즉각적인 인력 투입을 원하는 기업의 채용 의지를 꺾는 보이지 않는 규제다.

즉각적으로 현장 인원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한 달 이내에 된 적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층면접 HR1)

더 나아가 일부 기업은 외국인 채용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원 쿼터 제한으로 인해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살리기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가 고용을 가로막는 모순이 발생한다.

150명까지 요청했는데 50명으로 제한이 걸렸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 F-2-R을 시행했는데, 정작 사람을 못 뽑게 됩니다. (심층면접 HR2)

이러한 제도적 장벽은 유학생 개인의 정착 실패를 넘어,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이중의 족쇄로 작동하고 있다.

## 2) 일자리 미스매치: '기능'보다 '말귀', '돈'보다 '환경'

제도적 장벽(소득 요건)을 넘더라도, 기업의 기대(Communication)와 학생의 눈높이(Environment)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2차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선 질적인 불일치다.

지역 제조 기업들이 단순 외국인 근로자(E-9)보다 유학생(D-2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 기술보단 한국어 소통 능력이기 때문이다. 입국 직후 현장에 투입되어 언어 습득 기회가 적은 E-9 근로자와 달리, 유학생은 대학 교육을 통해 업무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소통 가능한 인재로 대우받는다.

E-9은 들어오면 한국어를 안 배웁니다. 반면에 유학생은 학교에서 한국어로 강의를 들으니 훨씬 잘하죠. (심층면접 HR2)

불량이 나왔을 때, 한국인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걸 할 수 없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심층면접 HR1)

그러나 정작 유학생들은 지역의 산업단지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다. 4년간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위를 취득한 이들은 사무직, 무역 등 화이트칼라 직군을 선호한다.

한국에서 일단 연구직이나 교육 쪽으로 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건 귀국해서 교수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연구실적도 있어야 하고, 경험도 많이 있어야 하니까 한국에 있을 때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2~3년 정도 경험이 쌓이고, 일하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본국에서 기회잡고 갈 수도 있고, 여기 남을 수도 있어요. (심층면접 S7)

이들에게 육체노동 중심의 제조업 현장은 환경이 열악해서 지속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 인터뷰 결과, 유학생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조기 퇴사하는 주된 원인은 급여보다 '작업 환경'에 있었다. 유리섬유로 인한 피부 트러블, 공장의 냄새, 고된 육체노동은 유학 뒤의 공장 노동자로서의 이동에 대한 자괴감과 맞물려 이탈을 가속화한다.

3년간 퇴사한 친구가 4명 정도 되는데 제품에 유리섬유가 있어서 피부가 간지러운 게 안 맞아서, 혹은 제품 냄새가 싫어서 가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일한다고 하면 바로 입사했는데, 요즘은 (현장을 보고) 2~3일 고민하다가 행정사를 통해 안 하겠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심층면접 HR1)

결국 기업은 말이 통하는 현장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치고, 학생은 '번듯한 일자리'가 없다며 지역을 떠나는 이 풍요 속의 빈곤이 전북 일자리 미스매치의 본질이다.

유학생들이 지역 제조업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이를 '미래를 위한 투자(과정)'로 보는 실리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커리어의 단절(실패)'로 보는 거부의 관점이다.

이미 F-2-R 비자를 취득해 현장에서 일하는 유학생들에게 공장은 평생직장이 아니다. 이들은 현재의 고된 노동을 자신의 전공(미용, 경영 등)을 살려 창업하거나 본국으로 금의환향하기 위한 자본 축적의 단계'로 인식한다.

(원래 전공은) 미용과였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창업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돈을 벌자는 생각에 취업하게 됐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층면접 W2)

반면, 전문 연구 인력이나 화이트칼라 직종을 지향하는 고학력 유학생 그룹에게 단순 생산직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이들은 대학원 진학을 통해 교수나 연구자가 되거나, 서울의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이들에게 F-2-R이 제공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비자 혜택과 무관하게 자신의 커리어 경로와 완전히 배치되는 선택지다.

저는 확실하게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전공이 마케팅이라서... 나중에 교수가 되거나 강사라도 하고 싶어요. (부모님도) 박사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공장은 생각 안 해요. (심층면접 S5)

결국 현재의 F-2-R 정책이 유학생들에게 "평생 시골 공장에서 일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면, 미스매치는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유학생들의 '성장 욕구'를 인정하고, 지역 제조업 근무 경험이 창업이나 상위 비자(F-5 영주권 등)로 가는 확실한 징검다리임을 보여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제도의 사각지대: 'G-1(난민 비자)'의 뒷과 인재의 유실

앞서 살펴본 소득 요건이나 미스매치가 경제적인 문제라면, 전북 지역 현장에서 목격되는 또 하나의 장벽은 제도의 유연성 부족이 낳은 신분의 뒷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얀마 유학생들이 처한 딜레마다.

본국의 쿠데타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미얀마 유학생은 졸업 후 본국 송환을 피하고자 난민 비자(G-1)를 신청한다. 이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현행 법무부 지침상 지역특화비자(F-2-R)는 유학생(D-2)이나 구직자(D-10) 신분에서의 전환만 허용할 뿐, G-1 비자 소지자에게는 문이 닫혀 있다. 당장의 신변 안전을 위해 선택한 비자가, 역설적으로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취업과 정착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족쇄가 되는 셈이다.

미얀마 친구들은 당장 무서우니까 G-1으로 바뀌요. 그런데 나중에 취직하고 싶어서 F-2-R을 알아보면, '너는 난민 비자라 안 된다'고 해요. 안전을 선택했는데, 그게 한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막아버린 거죠. (심층면접 U4)

이러한 경직된 칸막이 행정은 지역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한국어 능력과 전공 지식을 갖춘 검증된 인재들이 단지 '비자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부안의 중견기업 ○○○의 사례는 이러한 인재 낭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올해 채용 인원을 늘려준다고 해서 조사했더니 (미얀마 유학생) 30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난민비자(G-1)였습니다. 원래는 가능했는데 지침상 안 된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일할 사람이 있고 그들도 원하는데, 규정이 발목을 잡아 다 놓치게 된 겁니다. (심층면접 HR2)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심지어 지역 기업이 간절히 원하고, 본인들도 지역 정착 의지가 확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유형'이라는 형식 논리에 간혀, 이들을 단순 일용직이나 불안정한 체류자로 방치하는 것은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 해소라는 F-2-R의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는 정책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 4) 정보의 비대칭: 공식 시스템의 한계와 사적 의존의 심화

취업 단계의 마지막 병목 현상은 구인 기업과 구직 유학생을 매끄럽게 연결해 줄 '통합 매칭 시스템'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지역 내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 채용 희망 기업을 발굴하고 유학생 전용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행사

나 분절된 정보 제공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기업과 유학생 모두 구인·구직의 의지는 강력하다. 그러나 이들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끊겨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시스템은 주로 비전문취업(E-9)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유학생(D-2)이나 숙련기능인력(E-7), 지역특화비자(F-2-R) 대상자에 대한 취업 알선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기업 DB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여전히 "졸업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막연하다"고 호소한다. 결국 공식적인 정보망에서 소외된 유학생들은 직접 차를 몰고 공단을 돌며 일자리를 찾는 비효율적인 구직 활동을 반복하고 있다.

시나 도에 구직자 DB가 없어서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불편합니다. 그 친구들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는데... 직접 개내들이 바로 운전해서 옵니다. 자기 비자가 F-2-R인데 일자리 있냐고... 노동부나 지역센터에서 흡수를 못 하다 보니까 스스로 업장을 찾아다니는 거죠. (심층면접 HR1)

이러한 공공 매칭 시스템의 공백과 복잡한 비자 변경 절차는 '민간 행정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기업 입장에서 수시로 바뀌는 비자 요건과 복잡한 서류 작업을 직접 처리하기에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현장의 행정사 의존 현상은 비자 행정의 난이도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시장 수요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구조다. 취업 알선과 비자 변경 대행 명목으로 발생하는 수백만 원의 수수료는 고스란히 구직자의 부채로 남게 된다. 일부 기업은 이러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인사담당자가 직접 행정 업무를 수행하려 노력하지만, 출입국 행정의 과부하와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대행사)가 기업 소개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300~5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친구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브로커 안 쓰고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출입국사무소는 전화 연결도 힘들고,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라 저조차도 연락하기가 힘듭니다. (심층면접 HR2)

결국,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정보 플랫폼'과 '행정 지원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그 비용과 불편을 지역 기업과 유학생이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5) '회전문 체류': 학업으로 위장된 노동의 현실

취업 단계 분석에서 포착된 가장 역설적인 현상은, 유학(D-2) 비자가 본래의 목적인 '학업'을 넘어, 사실상의 장기 체류 및 노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변질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Track B(생계형)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어학연수 → 전문학사 → 학사 편입 → 석사 진학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진학 패턴이 관찰된다. 심층면접 결과, 이들의 상급 학교 진학 동기는 학문적 성취보다는 '비자 연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졸업 즉시 취업 비자(E-7) 요건(GNI 80% 등)을 맞추기 어려운 비자 절벽과 산단지역으로 가서 취업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구직기간과 학생 신분 유지의 적절한 배치와 조합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아르바이트(노동)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지만, 실제 생활의 중심은 도서관이 아닌 아르바이트에 공간에 있는 학생-노동자(Student-Worker) 계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이 지역 현장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 되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학업에 전념하지 않는 불성실한 유학생 혹은 편법 체류자라는 회색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현실(노동력 제공)과 규범(순수 학업 요구)의 괴리는 유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부채감과 신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지역 사회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6) 소결: '인력(Manpower)'과 '인재(Talent)' 사이의 딜레마

이 절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업 단계의 난맥상은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양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유학생을 바라보는 정책의 시선과 유학생의 욕망이 엇갈리는 구조적 불일치에 기인한다.

비자 제도와 지역 기업은 유학생을 인구 소멸과 3D 업종의 구인난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 소득 요건을 차등화하여 제조업(E-7-4, F-2-R)으로 유도하거나, G-1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숙련 인력을 배제하는 경직된 행정은 유학생을 지역에서 정착하여 같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비자 코드를 가진 기능적 객체로 취급하는 도구적 관점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이러한 도구적 프레임을 거부하거나, 혹은 영리하게 이용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을 내는 하향 취업을 거부하며 지역을 이탈하고, 어떤 이들은 노동을 지속하기 위해 학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숨는 ‘우회로’를 선택하며, 어떤 이들은 고된 노동을 미래의 창업을 위한 과정이자 징검다리로 활용한다. 즉, 이들에게 전북의 공장은 정책 입안자가 기대하는 것처럼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더 나은 삶(영주권, 창업, 수도권 이동)을 위한 한시적 수단의 일부일 뿐이다.

이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조율해야 할 중재 시스템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틈새에서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구직자는 정보가 없어 행정사를 찾거나 직접 공단을 헤매는 각자도생의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취업 단계의 갈등은 제도의 구속력(머물게 하려는 힘)과 주체의 성장 욕구(성장하려는 힘) 간의 충돌로 요약된다. 이러한 긴장 관계가 지역 이탈이라는 단절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이라는 경제적 요건을 넘어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정서적 소속감을 결정짓는 정착 단계의 공간적·심리적 갈등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 라. 정착 단계: ‘시골 감옥’과 ‘도시 지향성’

본 절에서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에 성공한 유학생들이 직면하는 공간적, 생활적, 심리적 갈등을 분석한다. 청년 세대로서 도시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인구감소지역 거주를 강제하는 정책 사이의 충돌, 그리고 이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기형적인 거주 패턴을 조명한다.

### 1) F-2-R의 역할: ‘시골 감옥’과 생활 인프라의 장벽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통해 외국인 인재를 인구감소지역(군 단위)에 묶어 두려 한다. 하지만 유학생들 역시 도시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한 청년이다. 이들에게 문화적 인프라가 부재한 시골 생활의 강제는 안정적인 정착이 아닌 고립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은행, 병원과 같은 필수 생활 인프라의 접근성이다. 이는 디지털 기기(AI 번역 등) 활용에 능숙한 유학생이나 한국 체류 경험이 풍부한 장기근속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여전히 넘기 힘든 상시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일상적인 대화나 단순 정보 검색은 생성형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금융 상품 가입, 병원 정밀 진료, 행정 서류 처리와 같이 법적 책임과 전문성이 따르는 영역은 AI 번역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간단한 카드 발급조차 기업 담당자의 신원 보증이나 통역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의존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은행에서 카드를 하나 만들러 가도 전화가 옵니다. 소통이 안 되니 은행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일상생활인데 그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심층면접 HR1)

## 2) 지역 정착의 닻(Anchor): 몸은 공장에, 삶은 도시에

F-2-R 정책은 인구감소지역(군 단위)의 인력난 해소와 인구 증대를 위해 시행되었지만, 유학생들의 실제 삶과 마음까지 그곳에 묶어 두지는 못한다. 해당 지역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와 정착 여건으로 인해, 유학생들은 근무지는 군 단위에 두되 실질적인 생활은 도시에서 영위하는 직주분리 혹은 주말 이주 형태의 이중적 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인터뷰 결과, 부안이나 김제 등 외곽 지역 공단에 취업한 유학생 상당수가 전주, 익산 등 대학가 주변을 여전히 심리적 베이스캠프로 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비자 요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평일에는 공장 근처에서 생활하지만, 본질적인 삶의 기반은 대학 시절 형성된 커뮤니티(전주)에 두고 있다.

처음에 오면 다 대학생입니다. ○○대, △△대, □□대에서 오기 때문에 각자 살던 곳은 전주, 익산, 군산입니다. (취업 후) 주소지는 이곳으로 옮기더라도, 주말마다 전주로 나옵니다. (심층면접 HR2)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보면, 평일에는 출퇴근 편의를 위해 공장 5분 거리의 지역 숙소에서 지내지만,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버스를 타고 전주로 향한다. 이들에게 인구감소지역은 돈을 벌기 위한 일터이자 잠시 머무는 기숙사일 뿐이며, 정서적 교류와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진짜 삶의 터전은 여전히 도심이다.

(집은 회사랑) 5분 거리입니다. 걸어 다닐 때도 있고 스쿠터 타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 주말마다 전주에 나옵니다. 친구들이 전주에 대부분 있어서... 버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습니다. (심층면접 W2)

긴 연휴에는 인프라가 있는 부산이나 서울로 떠나는 현상이 목격된다. 이는 지역이 일

하는 곳일 뿐 사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도시 지향성의 핵심에는 결국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가족이 없는 타국 생활에서 같은 국적 친구나 선후배 커뮤니티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정보 교환과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지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인데 다 서울, 부산으로 갑니다. 인프라가 다 거기 있으니 가서 먹고, 놀고, 쓰고 한다고 합니다. (심층면접 HR1)

결국 정책은 이들을 ‘군민’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유학생들은 “일은 시골에서, 삶은 도시에서” 영위하는 방식으로 규제외 틈새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 3) 떠나는 배경: 가변적 정책과 불안한 미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책의 불확실성’ 또한 유학생들을 수도권으로 떠미는 강력한 요인이다. 한국의 이민·비자 정책은 2~3년 주기로 급변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작년에는 된다고 했던 것이 올해는 안 되고, 비자 요건이 갑자기 바뀐다”며 혼란을 호소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전북 지역 내에는 신뢰할 만한 정보 채널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결국 정보가 빠르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생존의 (그러나 부정확한) 답을 찾으려 한다.

### 4) 소결: ‘떠난 사람’이 아닌 ‘글로벌 관계인구’로의 확장

지역 사회는 전북을 떠나는 유학생들을 유학생 지역 정착 정책의 실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이를 더 나은 기회를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전북을 거쳐 간 유학생들이 지역의 자산으로 남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장벽이 되고 있다.

유학생들이 전북에 정착한다면 최선이겠지만, 설령 떠나더라도 이곳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10년의 시간을 전북과 함께했다면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떠나는 이들을 실패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혹은 타 지역에서도 전북을 긍정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민간 외교관이자 지속적인 관계인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화된 채널을 통해 유학생들의 생활과 지역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유학생 친화 전북’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본 장에서 입국에서 지역 정착에 이르는 유학생의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북의 유학생 생태계가 정책의 의도와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맞물리지 못한 채 단절과 이탈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북에서의 유학생 경험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성장의 경로라기보다, 단계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불연속적 장벽의 연쇄에 가깝다.

먼저 유입 단계에서는 공적 검증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각국 내 유학원과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이는 학생들에게 초기부터 부채 부담과 노동 압박을 동반한 출발을 강요한다. 대학은 학사 운영과 생활 지원 측면에서는 일정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지만, 노동시장 진입에 필요한 직무 역량 형성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유학생들은 학생과 노동자 사이의 제도적 회색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체류와 생계를 병행하게 된다.

졸업 이후의 상황 역시 구조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역 노동시장과 괴리된 비현실적인 소득 요건(GNI 기준)은 유학생들을 전공과 무관한 단순 노무직 취업이나 편법적 학업 연장( 이른바 '회전문 체류')으로 내몰고 있다. 한편, 지역특화비자(F-2-R)와 같은 정책은 유학생을 인구소멸지역에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청년 세대가 지닌 도시 지향적 생활 욕구와 충돌하면서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적 주소지는 지방에 두되 실제 생활과 사회적 관계는 도시에서 형성하는 이중적 거주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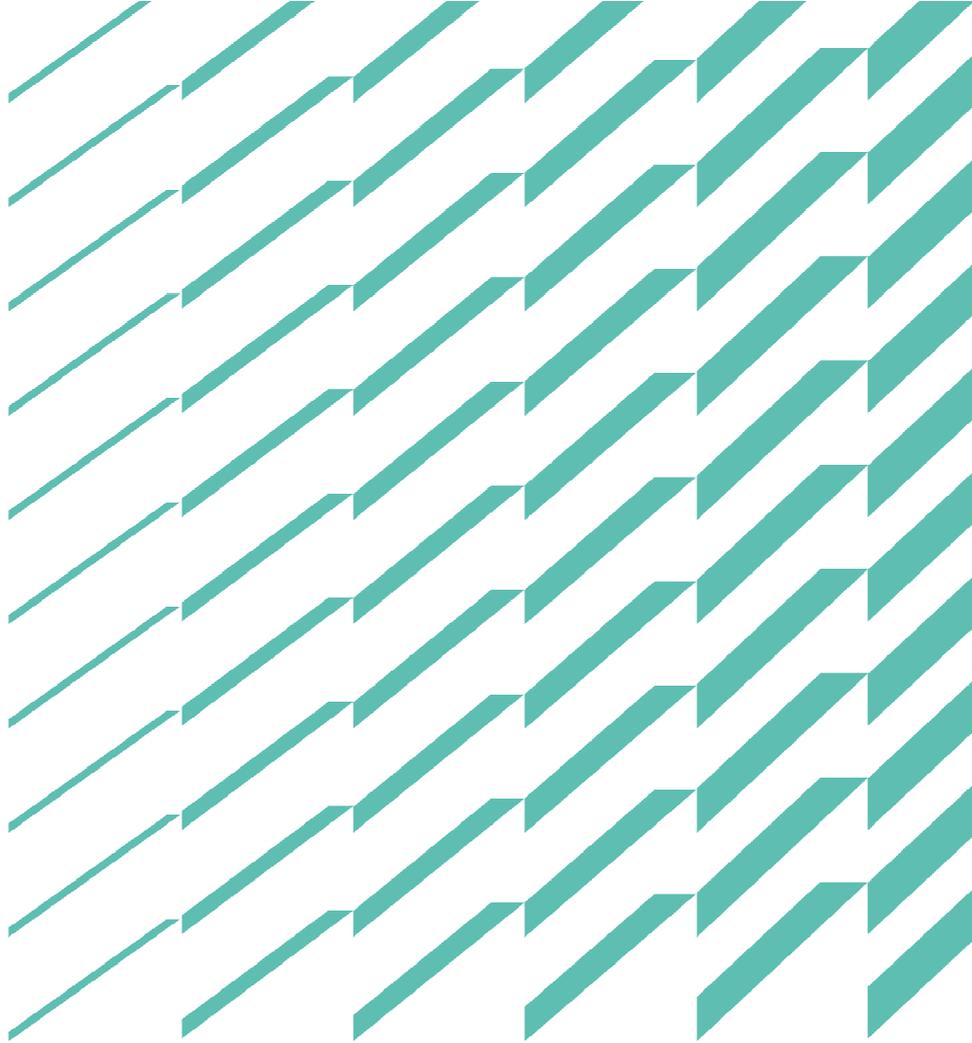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유학생을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과 당사자의 인식 간 충돌에 있다. 정책과 제도는 유학생을 인구 감소 대응과 3D 업종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적 대체 인력으로 인식하며, 단기적인 수치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유학생들은 스스로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주체적 행위자로 인식하며, 학업과 경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중시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괴리 속에서 정책 당국은 "왜 비자 혜택을 제공해도 지역을 떠나는가"를 질문하고, 유학생들은 "왜 우리의 삶과 선택이 존중되지 않는가"를 되묻게 된다.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비자 요건 완화와 같은 단편적 정책 조정은 구조적 한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유학생 1만 명 시대를 맞이한 전북은 이제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

---

구에서 확인된 회전문 체류, 이중생활, 수도권으로의 이탈 현상은 기존의 관리 중심적 유학생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향후 유학생 정책은 이들을 단기적 인력 활용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유학생 정책의 기초를 ‘관리에서 통합으로’, ‘분리에서 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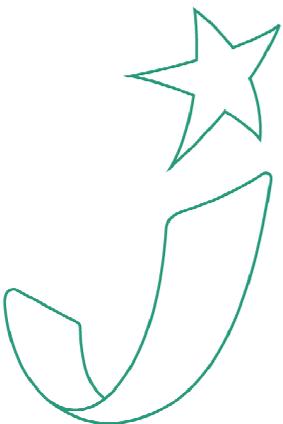




# 제 5 장

## 전북형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방안

1.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2. [일자리] 체류 경로 다변화 및 일·학습 병행 모델 도입
3.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 거버넌스 고도화
4. [생활·문화] '청년 라이프스타일' 보장 및 지역 사회 통합
5. 결론 및 기대효과





# 제 5 장 전북형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방안

## 1.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 1) 추진 배경: 기능적 활용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공존으로

본 연구는 제4장까지의 심층 분석을 통해, 현재 전북의 유학생 생태계가 겉으로는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회전문 체류’, ‘이중생활’, ‘수도권 이탈’이라는 구조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학생들은 생존을 위해 학교 밖 음성적인 노동 시장을 전전하고 있으며, 경직된 지역 정착 정책은 청년 세대의 특성인 도시 지향성과 가족 동반 욕구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어렵게 유치한 인재들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탈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유학생을 단순히 인구 소멸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나 단순 인력 보충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유학생들의 ‘경제적 이주’ 성격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지역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주체’이자 ‘예비 지역민’으로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즉,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성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 정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시점이다.

### 2) 기본 방향: ‘개방’과 ‘통합’을 통한 정착 생태계 조성

본 연구는 전북형 유학생 정착 지원 정책의 비전을 “통제에서 설계로, 인력에서 이웃으로”로 설정하였다. 이는 유학생을 단순한 대체 인력이 아닌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동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전북형 유학생 정착 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삼고, ①일자리 (양성화 및 성장), ②행정 (통합 및 연계), ③생활·문화 (유연화 및 포용)의 3대 추진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9대 핵심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자리의 ‘양성화 및 성장’이다. 유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선택하는 음성적인 아르바이트를 전공과 연계된 기업 현장실습으로 확대·전환하여, 이를 합법적인 ‘일-학습 병행(Work-Study)’ 체계로 양성화해야 한다. 이는 불법 취업의 유혹을 차단하고, 유학생을 단순 노무 인력이 아닌 지역 산업의 숙련 인재로 육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행정의 ‘통합 및 연계’이다. 대학과 기업, 지자체로 파편화된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어 비자·행정·생활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 거점(가칭 ‘전북 외국인 통합지원 센터’)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고액의 행정사 비용을 절감시켜,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생활·문화의 ‘유연화 및 포용’이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유학생의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취업과 자녀 돌봄을 포함한 ‘가족 동반 정착’을 지원하고, 근무지(군 단위)와 거주지(시 단위)를 잇는 ‘양방향 광역 생활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안착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비전**

**“통제에서 설계로, 인력에서 이웃으로”**

**목적**

**지역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전북형 유학생 정착 생태계 완성**



자료: 저자작성

[그림 5-1] 전북형 유학생 정책의 비전 및 3대 전략

[표 5-1] 전북형 유학생 정책 전략 구성도

	기존: 통제와 관리	전환: 설계와 포용
기본 관점	인구 소멸 방어 수단 (단순 인력)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주체 (이웃)
핵심 기초	규제 및 단속 중심(불법 방지)	육성 및 정착 중심(경로 설계)
일 자리	방임형 음성 노동(단순 알바) - 단일 트랙 관리 (학업 중심) - 졸업 후 단순 노무직 쏠림	양성형 경력 형성(Work-Study) - 체류 경로 이원화(학문형/직업형) - 커리어 점프(학위+숙련 병행)
행정 체계	분절적 각자도생 - 기관별(대학/지자체) 개별 지원 - 민간 행정사 및 구전 정보 의존	통합적 원스톱 지원 - 통합 플랫폼구축 (전북도 주도) - 거버넌스 협력(원광대 등 연계)
생활·문화	격리와 제한(1인 체류) - 기숙사/공단 중심 고립 생활 - 인구감소지역 거주 강요 (일방향)	연결과 보장(가족 정착) - 가족 패키지(배우자 취업/보육) - 양방향 광역 생활권(직주 유연화)
기대효과	이탈의 악순환 (수도권 이동, 불법 체류)	정착의 선순환 (지역 인재화, 인구 유입)

자료: 저자작성

---

## 2. [일자리] 체류 경로 다변화 및 일·학습 병행 모델 도입

---

모든 유학생을 ‘순수 학문 연구자’라는 단일한 틀로 관리하는 기존 접근은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제4장의 실태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학생들은 입국 목적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업과 생계 사이에서 상이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규율하는 제도는 구조적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 정책은 체류 경로를 현실에 맞게 다변화하고, 유학생의 노동을 음성적인 ‘알바’가 아닌 합법적이고 누적 가능한 ‘경력’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사다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1) 체류 경로의 이원화(Dual Track) 전략

현재의 유학 제도는 입국 목적이나 재정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유학생에게 동일한 학업 기준과 엄격한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시급한 학생들은 불법 취업 현장으로 내몰리거나, 무리하게 학업을 이어가다 이탈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학생의 입국 목적과 역량에 따라 ‘학문·연구형(Track 1)’과 ‘직업·정착형(Track 2)’으로 트랙을 명확히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Track 1] 학문·연구 중심형은 순수 학문 목적이 강하고 경제적 기반이 있는 석·박사 과정생이나 글로벌 우수 인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대학원 진학을 적극 장려하고, 지역 연구소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R&D 핵심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우수 인재 비자 취득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학위 취득 후 즉시 지역 내 전문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방 국립대 등에서의 적극적인 외국인 졸업생 고용을 통해 유학생 성공 모델 발굴도 이루어진다면, 실제 유학생들에게 전문직으로 기회가 제공되는 전복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Track 2] 직업·정착 중심형은 학업과 병행하여 조기 취업과 경제적 자립이 시급한 학부생 및 전문 학위 과정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시급한 것은 ‘순수 학업’보다는 ‘생존’이다. 따라서 입국 초기부터 전공과 연계된 기업 현장실습(Co-op)을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합법적인 노동 시간으로 보장하는 ‘일·학습 병행(Work-Study)’체

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유학 비자(D-2)가 사실상 노동 시장 진입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고, 음성적인 단순 노무 아르바이트를 양지(공식 현장 실습)의 경력 형성 과정으로 전환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하려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 방안은 현재 시행 중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올해 시행 준비 중인 E-7-M 등의 새로운 비자와 연계되어 적극 실천될 수 있다.

[표 5-2] 전복형 유학생 체류 경로 이원화 전략(안)

	[Track 1] 학문·연구 중심형	[Track 2] 직업·정착 중심형
핵심 대상	- 석·박사 과정생 (대학원) - 경제적 여력이 있는 학부생	- 학부 과정생 (전문대/4년제) - 부채 상환이 시급한 생계형 유학생
주요 욕구	- 전문성 강화, 상위 학위 취득	- 조기 취업, 부채 상환, 영주권
운영 방향	- R&D 전문 인력 양성	- 일-학습 병행 (Work-Study) 허용
지원 정책	- 지역 연구소/공공기관 인턴십 매칭 - 우수인재(F-2-7) 비자 패스트트랙	- 전공 연계 기업 현장실습(Co-op)확대 - 단순 알바의 양성화 및 학점 인정
기대 효과	- 고학력 두뇌 인력(Brain) 확보	- 숙련된 현장 기술 인력 확보

자료: 저자작성

## 2) '전복형 징검다리(Bridge)' 시스템 도입: 전문학사 졸업생 특례

전문대학(2년제)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지역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과 동시에 '졸업 절벽'이라는 구조적 난관에 봉착한다. 갓 졸업한 이들이 E-7(전문취업) 비자가 요구하는 높은 경력 요건이나 소득 기준을 즉각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원치 않는 4년제 대학 편입을 선택하며 지역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지역에 남아 재도전을 하려 해도, 현행 구직 비자(D-10) 제도가 단순 노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없이 버틸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동남아권 유

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완충 지대의 부재는 곧 불법 체류 유혹이나 지역 이탈로 이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학사 졸업 후 전복에 잔류할 의사가 있는 유학생들에게 '전북형 징검다리'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이른바 '전북형 갭이어(Gap Year)'로, 졸업 후 1~2년 동안 유연한 체류와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전복 소재 전문대학 졸업자가 도내에서 구직 활동을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제조업이나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서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은 졸업 직후 당장 정규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지역에 잔류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이는 입학 단계에서 전공을 사전 지정하는 E-7-M과 달리, 이미 지역에 유입된 전문학사 인력을 붙잡아 두는 사후 정착형 장치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지역에 남아 있을 시간이 확보될 때 비로소 정착과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지역 정착 유도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기업에게는 젊은 노동력을 활용하며 이들을 향후 정규직 숙련 기능인력(E-7-4, F-2-R)으로 흡수할 수 있는 탐색 기간을 제공한다. 일단 지역에 남게 해야, 정착도 가능하다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이 징검다리 제도는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타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안착 지원책이 될 것이다.

### 3) 전북형 '커리어 점프' 트랙 구축

유학생들이 전북 지역 제조업에 취업한 이후 장기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해당 일자리가 개인의 장기적 경력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에 있다. 특히 현장 중심 직무에 종사하는 유학생의 경우, 현재의 노동 경험이 학력·자격·직무 수준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는 수도권 이동이나 본국 귀환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학생이 노동 현장을 유지하면서도 단계적인 경력 상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현장 연계형 커리어 점프'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석·박사 중심의 상향 이동이 아닌, 전문학사·학사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경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전문학사·학사 연계형 일·학습 병행 모델은 지역 기업에 재직 중인 유학생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재직자 과정에 진학하여, 주말·야간 수업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지자체는 교육비 일부를 공동 부담하고, 대학은 산업체 연계 중심의 유연한 학사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이 모델을 통해 유학생은 소득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학력·직무 역량·체류 자격의 단계적 상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제조업 현장을 단기 체류의 공간이 아닌 중·장기 경력 형성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역시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인력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숙련 기술 인력 및 핵심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인력난 완화와 조직 안정성 제고라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 거버넌스 고도화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지역에 정착하려 할 때 가장 큰 장벽은 지원의 단절이다.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비자·취업·생활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해 줄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전북의 행정 지원 체계는 각 기관별로 추진 예정인 플랫폼과 사업들을 사전에 조율하여 빈틈없는 지원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 1)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 전환기의 공백

현재 전북의 외국인 지원 기능은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대학, 가족센터 등으로 분절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학생(D-2)이 구직자(D-10)나 지역특화 인재(F-2-R)로 신분을 변경하는 전환기에 담당 기관이 모호해지는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

대학은 졸업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약하고, 지자체는 아직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보 부족과 행정적 고립을 겪으며 이탈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 2) (가칭)‘전북 외국인 정착·일자리 지원 포털’ 구축 제언

이에 본 연구는 도 차원의 통합 플랫폼인 (가칭)「전북 외국인 정착·일자리 지원 포털」구축을 제안한다. 이 플랫폼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매칭’과 ‘생활 안착 케어’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 거점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기능 1: 원스톱 정보 통합:** 비자, 주거, 의료, 법률 등 생활 전반의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시군별로 산재한 지원 사업(정착금, 기숙사비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통합 사업 지도를 구축한다.

**기능 2: 지능형 일자리 매칭:** 지역 기업의 구인 수요와 F-2-R 취득자(및 예비자)의 전공·한국어 능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매칭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및 산단 중심 업종에는 우선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력난 해소와 지역 안착을 구조적으로 연계한다.

### 3) 원광대 '유학생 통합지원체계(예정)'와의 전략적 연계 방안

특히 전북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 예정인 원광대학교의 「전북 유학생 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과 본 연구가 제안하는 도 단위 플랫폼이 중복 투자 없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역할 분담을 설계해야 한다.

**역할 분담:** 원광대 사업은 유학 단계를 총괄하며 도내 대학 재학생(D-2)을 대상으로 입학~졸업까지의 학업 및 생활 적응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 이후 전북도 플랫폼은 졸업 후 단계로 유학생이 졸업하여 구직(D-10) 및 정착(F-2-R) 단계로 진입하면, 도가 바통을 이어받아 취업 매칭과 지역 정착 지원을 전담한다.

**데이터 연계:** 두 시스템 간에 데이터 연동을 통해, 유학 단계에서 축적된 데이터(전공, 어학 능력 등)가 졸업과 동시에 도의 일자리 플랫폼으로 이관되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도 즉각적인 취업 알선이 가능한 유학생-졸업생 전환 모듈을 가동해야 한다.

### 4) 전북 유학생·이민정책 협의체 구성 및 강화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전북도, 대학(원광대 등), 출입국사무소, 일자리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전북 유학생·이민정책 협의체」구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 지원 사업과 지역특화 비자 정책이 별개로 운영되지 않도록 성과지표(KPI)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점검해야 한다.

**다국어 통역 및 동행 지원:** 또한 행정기관 방문이나 병원 이용 시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동행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대학 유학생을 공식 언어 도우미로 양성·배치하여 지역사회 통합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표 5-3] 대학-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구축(안)

	1단계: 재학 중	▶ 연계 ▶	2단계: 졸업 후
추진 주체	원광대 (통합지원체계 사업) (2026~2028년 구축 예정)	데이터 이관	전북도 (정착·일자리 포털)
핵심 대상	유학생 (D-2)	비자 전환	구직자(D-10)/지역특화(F-2-R)
담당 기능	- 학업 성취도 관리 - 한국어/문화 적응 지원	이력/전공 데이터 공유	맞춤형 취업(기업) 매칭 가족 동반/정착 복지 지원
기대 효과	중도 이탈 방지	지원 공백 해소	지역 완전 정착

자료: 저자작성

## 4. [생활·문화] ‘청년 라이프스타일’ 보장 및 지역 사회 통합

심층면접 분석 결과, 유학생들이 지역을 떠나는 결정적 이유는 낮은 임금보다 문화적 고립과 가족 부양의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복이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자 개인을 위한 숙식 제공 수준을 넘어, 가족 단위의 완전한 정착과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 1) 외국인 유학생 가족 정착 패키지 도입

현재의 지역 정착 지원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개인의 생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특화비자(F-2-R) 도입으로 가족 초청의 길은 열렸으나, 정착 초청된 가족이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기반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외벌이만으로는 가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와, 한국어를 못하는 배우자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조차 교육장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배우자의 부적응이 결국 외국인 본인의 지역 이탈로 이어지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졸업 후 취업한 외국인 가구가 지역 사회에 걸들지 않고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경제(일자리), 교육(한국어), 보육(자녀)의 3박자를 갖춘 가족 정착 패키지 도입을 제안한다.

첫째, 배우자 취업 알선이다. 초청된 배우자가 가정 내에 고립되지 않고 가구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서비스직이나 제조업 단순 노무직 등 진입 장벽이 낮은 단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매칭한다. 배우자의 소득 창출은 가구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지역 정착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것이다.

둘째, 배우자 사회 적응 지원이다. 육아나 교통 문제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배우자들을 위해, 주거지 인근(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등)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학당’을 운영하거나 주말·야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아울러 언어 교육과 함께 지역 부녀회나 다문화 커뮤니티와의 자매결연을 주선하여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통합 보육 지원이다. 자녀 보육 지원은 별도반 편성을 통한 그룹화·게토

---

화가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내 완전 통합 보육을 원칙으로 하되 적응을 돕는 지원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아동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에 결혼이주여성 등을 이중 언어 보조교사로 채용·배치하여 언어 소통을 밀착 지원하고, 내국인 아이들과 외국인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접하는 상호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릴 때부터 이웃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2) 양방향(Two-Way) 광역 생활권 지원: 직주분리의 유연화

현재 지역특화비자(F-2-R) 제도는 거주지와 근무지 중 한 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경우 체류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군 지역 거주 + 군 지역 공장 취업’이라는 전형적인 공식에 매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졸업생들은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농촌에 살거나, 반대로 농촌의 저렴한 주거비를 활용하고 싶어도 도시 일자리의 출퇴근이 힘들어 포기하는 등 직주 불일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제는 청년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의 개념을 쌍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

청년 유학생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주거’와 ‘일자리’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트랙의 광역 생활권을 보장한다.

**[Type A] 도시 거주형:** 도시의 문화 인프라와 커뮤니티를 선호하지만, 직장은 인력을 겪는 군 단위 산업단지에 구한 경우이다. 이를 위해 전주·익산·군산 등 도심 거점과 김제·부안·정읍 등의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유학생 전용 통근버스(J-Shuttle)’운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익숙한 대학가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고, 제조 기업은 청년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Type B] 농촌 거주형:** 높은 도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거나 농촌의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면서, 직장은 도시의 서비스·전문직을 선호하는 경우이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나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졸업생이나 외국인가족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심 소재 기업(위케이션, IT, 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취업 허용 범위를 폭넓게 해석·적용한다. 이는 소멸 위기 지역의 정착 인구 숫자를 늘리는 동시에, 졸업생에게는 도시의 다양한 일자리 선택권을 보장하는 역할상의 해법이 된다.

[표 5-4] 전북형 양방향 광역 생활권 모델

	Type A: 도시 거주형 (산업 지원)	Type B: 농촌 거주형 (인구 지원)
거 주	거점 도시 (전주/익산/군산)	인구감소지역 (시·군 단위)
근 무	산업단지 (제조업/뿌리산업)	도시/인근지역 (서비스/전문직)
장 점	도시 문화 향유, 대학가 커뮤니티	저렴한 주거비, 넓은 주거 환경
정책 지원	광역 통근 셔틀 (이동권 보장)	빈집 재생 임대 (주거비 지원)
기대 효과	제조업 인력난 해소	소멸지역 정착 인구 증대

자료: 저자작성

---

## 5.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전북형 유학생 정책의 지향점을 기존의 단순 인력 수급을 위한 관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유학생을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설계와 포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두었다. 본 연구가 제안한 ‘일 자리 양성화’, ‘행정 통합화’, ‘정착 유연화’ 등 3대 추진 전략은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고, 전북의 인구 구조와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다.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이 실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인적 자본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아르바이트 시장을 합법적인 ‘일-학습 병행’ 체계로 양성화함으로써 불법 취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조업 및 뿌리산업 현장에 검증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나아가 단순 노무 인력을 숙련 기술 인력으로 육성하는 ‘커리어 점프’ 트랙을 통해, 유학생 개인의 직무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1인 체류 중심의 불안정한 구조를 탈피하여 가족 단위의 안정적 정착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가족 동반 정착 패키지와 직주분리를 허용하는 쌍방향 광역 생활권 지원은 유학생 가구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촉진, 빈집 문제 완화,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 이어질 것이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호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이민 행정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통합 플랫폼과 민·관·학 거버넌스의 운영은 파편화된 외국인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자(유학생·기업)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것이다. 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역 맞춤형 이민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자산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북형 유학생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규제와 통제를 통한 강제적 체류가 아니라, 성장 기회와 삶의 질 보장을 통해 자발적 선택에 의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다. 유학생들이 전북에서의 학업과 근로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

정착할 때, 전북은 지속 가능한 인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이들이 추후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전북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단순 체류를 넘어, 살고 싶은 지역으로의 전환.” 이것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전북형 유학생 정책의 미래상이다.

## 참 고 문 헌

### REFERENCE

---

- BAMF(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2025). To Germany as a graduate (18-month job-seeking residence).
- Department of Education, Australia. (2025). Education export income - Calendar year 2024.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2024a). Changes to the Temporary Graduate (subclass 485) visa - from 1 July 2024. Immigration and citizenship Websit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2024a).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Immigration and citizenship Websit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2024b).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2024-09-23. Immigration and citizenship Websit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2025a). Salary requirements to nominate a worker. 2025-07-01. Immigration and citizenship Websit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2025b). Skills in Demand visa (subclass 482) 2025-05-09. Immigration and citizenship Websit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2025c).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191). 2025-07-28. Immigration and citizenship Websit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2025d). Regional work visas. 2025-02-28. Immigration and citizenship Website
-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 (2025e).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Immigration and citizenship Website
- Make it in Germany. (2025a). Prospects after graduation. Make it in Germany 홈페이지
- Make it in Germany. (2025b). EU Blue Card for young professionals. Make it in Germany 홈페이지

- Make it in Germany. (2025c). Job search Opportunity Card. Make it in Germany 홈페이지
-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Top host countr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 Reserve Bank of Australia. (2025).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Australian Economy.
- Battsengel Tumendemberrel·김도혜. (2020).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한국 지방대학의 몽골·베트남 유학생의 노동경험.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25-52
- HRDK(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모집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2024). 2025-2029년도 강원RISE 기본계획
- 경기도. (2024). 경기도 GRAND-RISE 기본계획
- 경상북도. (2024). 2025-2029년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 고용노동부. (2024a).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2024b).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 관계부처 합동. (2023).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보도자료
- 교육부. (202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 교육부. (2024a).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운영계획서 주요사업
- 교육부. (2024b).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운영계획서 주요사업
- 김도혜. (2019).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해외 유학생 연구 동향을 통해 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과제와 추진 방향.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1집
- 김도혜. (2021). 한국 지방 대학 유학생들의 노동 경험 연구: A 대학 베트남,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14권 1호. 5-35
- 김도혜. (2025).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 대학 유연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제145호
- 김도혜·최희정. (2021). 지방대학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결정과 주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11(4). 79-106
- 김연홍·이성순. (2020). 중장기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외국인력 정책의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3집

- 김형기. (2024).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정주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3권 6호, 25-51
- 대전광역시. (2024). 2025-2029년도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서
- 백성희. (2016).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제8호, 67-100
- 법무부. (2022).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실시: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으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도모
- 법무부. (2023).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 법무부. (2024a).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2027
- 법무부. (2024b).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안)
- 법무부. (2025a).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 법무부. (2025b).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제정(안)
- 서연미 외. (2025).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서울특별시. (2024).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혁신 성장 기본계획
- 세계일보. (2025). "E-7 비자도 없는데... '유학생 일학습병행' 참여 저조" 기사. 2025-08-05.
- 손흥기. (2023). 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지위 및 유치 확대와 활용방안 연구. 중앙법학 제25집 제4호, 353-394
- 연합뉴스. (2025). 법무부, 국정부 업무보고 "상법 개정안 입법논의 적극 지원" 2025. 6. 22
- 오대영. (2025).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과 모국 미디어 이용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문화연구 제67집, 77-108
- 이선미·김영순. (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1권 1호, 25-60
- 이수경·정지혜. (2016). 외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 변인 연구: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1호, 1-28
- 이윤주·김명광 (202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 장벽 고찰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5(4) 107-134
- 전북특별자치도(2024). 2025-2029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계획서
- 중소벤처기업부. (2024).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취업을 지

원한다 보도자료. 2024-10-31.

- 최현실.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61권, 71-94
- 최희정. (2022). 이동과 정착 사이, 유학생들의 졸업 후 삶: 한국 기업에 취업한 이공계 유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2). 1-28

## SUMMARY

---

### Settlement Support Strategies for Jeonbuk State's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a Lifecycle Analysis of Adaptation Experiences

Heejin Jun · Ahram Jeon

Amid the accelerating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and the declin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attra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has emerged as a critical survival strategy for local universities and a potential solution for labor shortages in regional industries. However, existing policies, heavily weighted toward quantitative recruitment, have failed to ensure stable settlement, resulting in a "delivery gap" where students migrate to the metropolitan area or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upon graduation. This study aims to shift the policy focus from simple recruitment to sustainable settlement by analyzing the multidimensional factors affecting the lifecycle of Jeonbuk State's international students. Adopting a "lifecycle perspective"—spanning entry, academic life, daily living, and post-graduation pathways—this research identifies the determinants of settlement and migration 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 framework that intersects individual capabilities, campus environments, and structural condition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inflow of students is characterized by a "dual track" structure: the "asset-based academic track" and the "debt-based subsistence track." Notably, the latter group faces structural vulnerabilities where the pressure of debt repayment compels immediate entry into the low-wage labor market, creating a policy mismatch with existing academic-centered support systems. Furthermore, the phenomenon of "produced illegality" was observed, where the structural mismatch between rigid academic schedules and local labor market demands, coupled with information asymmetry, forces students into unauthorized employment. The transition from student status (D-2 visa) to employment (E-7, F-2-R visas)

acts as a critical "tipping point"; despite high settlement intentions, institutional bottlenecks and the lack of integrated support services function as major push factors.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a paradigm shift in governance from immigration control to "regional settlement design," advocating for differentiated support programs and an integrated regional settlement package to redefine international students as essential human resources for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s, Jeonbuk State, Lifecycle Analysis, Regional Settlement, Migration Pathway, Policy Design

기초연구 2026-01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

발행인 | 최백렬

발행일 | 2026년 1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624-8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2026년도 주요 연구과제

### 기초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관세탄력성 분석: 대미수출을 중심으로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실태조사  
전북형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맞춤형 메디컬 푸드 산업 육성방안 연구  
전북 Physical 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 연구  
전북형 기본사회 추진전략 연구

### 정책연구

기후변화 및 변화의 시대 농업분야 대응 방안  
전북형 수산업 특화 발전방안 연구  
전북 지역균형발전 권역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무 발굴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 연구  
노화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방향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농촌주민 역량 강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청년 정주형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형 농촌특화마을 클러스터 구축 연구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미식관광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  
전북 삼천리길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산불 예방 대책 및 대응체계 개선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대응 방안 연구  
익산미륵사지휴게소 고속도로 환승시설(EX-HUB) 타당성 검토  
전북자치도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기초 연구  
전북자치도 신중년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육성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전북형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  
전북형 지역거점 창업도시 모델 개발  
전북과학기술원 기본방향 설정 연구  
피지컬AI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위한 전북형 모델 마련 방안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모델 마련 방안  
전북자치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방향 연구  
스마트농업 혁신 AX 거점 육성 전략 연구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  
곤충산업의 그린바이오산업화 연계 발전방안 및 육성전략  
자치단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 현안연구

새만금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여건 기초조사  
통합돌봄 시행 대비 전북형 통합돌봄 지원 실행계획 수립  
전북체육역사기념관 설치 적합성 검토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사회적·경제적 효과 분석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연계 전북특별법 특례 추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

